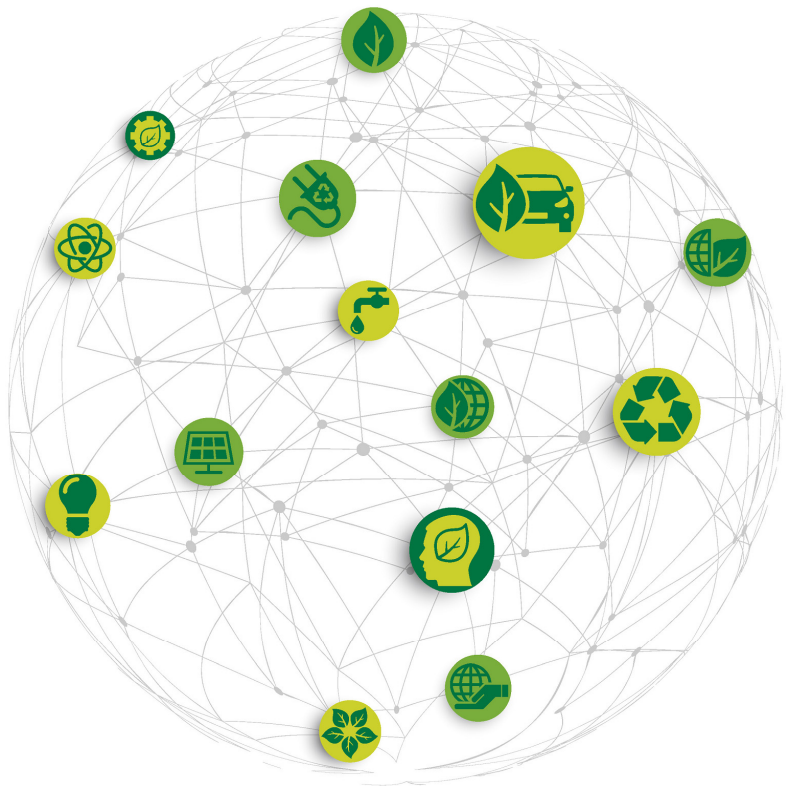


제2차 적응대책 이행지원 및 적응정책 실효성 강화 추진

기후변화 적응 법령안 마련 및 법제화 지원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제출문

환경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6 기후변화 적응』 역무대행 「제2차 적응대책 이행지원 및 적응정책 실효성 강화 추진」 사업의 세세부사업 ‘기후변화 적응 법령안 마련 및 법제화 지원’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참여연구진

연구진

과제책임 신지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승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위촉연구원)
배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위촉연구원)
김동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인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명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선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최영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은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전문원)
강주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송지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손승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김진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외부 연구진

참여연구원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이성조 (국회기후변화포럼사무처 처장)

■ 포럼 위원 (가나다순)

참여연구원 고재경 (경기연구원)

김정인 (중앙대학교)

박종원 (부경대학교)

안병옥 (기후행동연구소)

이동근 (서울대학교)

이정호 (KEI 국토자연연구실)

이준서 (법제연구원)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최희선 (KEI KACCC)

현준원 (법제연구원)

국문요약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인 노력이 감축뿐 아니라 적응 측면에서도 동등하게 중요함을 공식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정책에서 적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의 적응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감축과 비교하여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2016년은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시행 원년으로 적응대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확보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기후변화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제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차원의 접근을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수정·삭제하는 형태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고 약 7개월간 총 5차의 포럼 개최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이 강화된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우선 적응 법제 마련에 있어서 필요한 항목과 체계를 기본개념·원칙 등 기본 전제와 과학기반 마련→정책 수립→정책 시행→모니터링의 적응정책 과정과 적응을 위한 이행·역량기반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행 녹색법의 전체 7개 장과 63개 조문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파악하고 현행 12개 조문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중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항목이 포함되고 다루어지는 제48조는 제48조의1 등으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필요한 조문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함께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된 기후변화 적응 관련 조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으나, 현행 녹색법 개정뿐 아니라 시의적 요구에 따라 기후변화법, 기후변화 적응법 등의 다양한 형태로 기후변화 적응관련 사항을 법제에 도입하는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기후변화 적응, 적응법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장 개요	1
1. 배경 및 필요성	3
2. 목적	4
3. 추진방법	5
제2장 기후변화 적응법제 현황 검토	9
1. 해외 기후변화 적응법제	11
2. 국내 적응 관련 법제	18
3. 종합 및 시사점	23
제3장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전략 마련	25
1. 적응법제 체계 및 항목 설정	27
2. 적응법제 강화 추진전략 설정	34
제4장 기후변화 적응법제 개정안	39
1. 녹색법 개정 기본전제	41
2. 녹색법상 개정 필요 조문 검토	52
3. 적응항목 도입 검토 및 녹색법 구성체계 개선	57
4. 조문별 개정안	60
제5장 결론 및 제언	93

참고문헌	97
------------	----

부록	99
----------	----

부록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개정(안)	101
-------------------------------	-----

부록 2.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1~5차) 결과	244
--	-----

부록 3. 기후변화 적응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설문) 결과	27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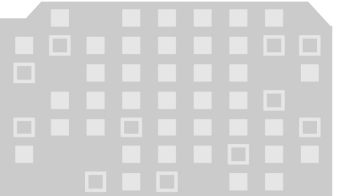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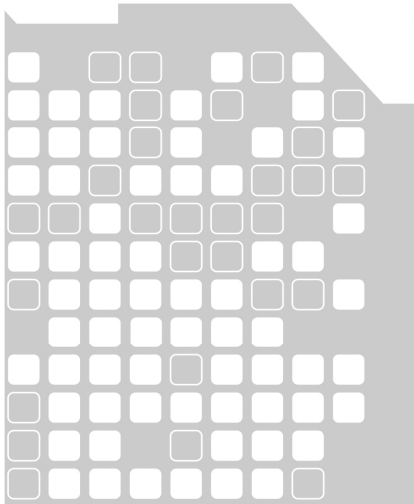
부록 4. 해외 기후변화 적응법 사례 : 멕시코, 필리핀, 미국	295
---	-----

표·차·례

<표 1-1>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자문단 명단	6
<표 1-2> 전문가 포럼 운영 일정 및 주요 내용	6
<표 2-1> 파리협정 제7조의 구조 및 국내 적응과 관련된 주요 내용	12
<표 2-2> 주요 국가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제 현황	16
<표 2-3> 기후변화 관련 제안된 법안 현황(2016.5.10 기준)	18
<표 2-4> 키워드 분석을 통한 기후 관련 법률 현황	22
<표 2-5> 키워드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률 현황(2016.5.12 기준)	23
<표 3-1> 녹색법상 적응법제 항목 관련 조문	29
<표 3-2> 기후변화 적응 입법(안)의 장단점 분석	34
<표 3-3> 기후변화 적응법제 개선방안 비교·평가	36
<표 4-1> 녹색법상 기후변화 적응 관련 조문 현황 및 개정 필요 조문	56
<표 4-2> 녹색법상 기후변화 적응 항목 도입 검토	57
<표 4-3> 녹색법 제48조 개정(안) 세부 구성	80



<그림 2-1> 1992~2014년 세계 기후변화 법률 및 정책 신규 제정 현황	15
<그림 3-1> 기후변화 적응법제 체계 및 항목	28
<그림 3-2> 기후변화 적응법제 개선 시 포함해야 할 내용	32
<그림 4-1> 세계 자연재해 발생 현황	43
<그림 4-2>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현황	43
<그림 4-3>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44
<그림 4-4>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액	45
<그림 4-5> 영국 적응보고제도 구성 및 절차	48
<그림 4-6>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확장	51



제1장

개 요



제1장 개 요

1. 배경 및 필요성

- 유엔은 2015년 9월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후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 추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발표하고 17대 목표 중 기후변화 영향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추진(goal 13)을 제시하고 인류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함
-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인 노력이 감축뿐 아니라 적응 측면에서도 동등하게 중요함을 공식적으로 다루고 있음
-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정책에서 적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의 적응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감축과 비교하여 미흡한 실정임
- 2016년은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 시행 원년으로 적응대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확보가 필요함
 - 기후변화 적응법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빅에스크 운동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법 제정 추진(2014년)과 기후변화 적응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연구(환경부·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2014) 등의 법제화와 관련된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법제화는 이루어지지 못함
-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응정책의 효과적·체계적 이행과 정부, 산업계, 일반 국민 등의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함
 - 「녹색성장기본법」(적응대책수립·시행), 「대기환경보전법」(적응센터지정) 등 관련 법에 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 및 연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의 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목적

-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체계적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기후변화적응 법적 기반 강화를 계획함
 - 2차 대책상 내용의 실제 이행을 위하여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16.6)」에서 ‘V-1-1-1 기후변화 적응 추진 법적 기반 강화’ 과제를 포함하고 2016년 적응 법조문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7년 의견수렴을 거쳐 2018년 국회 제출을 목표
- 본 과제는 환경부 역무대행 「2016년 기후변화 적응」의 9개 세부사업 중 적응정책 개발 및 이행지원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적응대책 이행지원 및 기후변화 적응정책 실효성 강화 추진”의 세세부사업으로 추진됨
- 위와 같은 배경하에 본 과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실질적 효과 창출 기반 강화·확대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법(안) 마련 및 법제화 추진 지원을 목적으로 함
 -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제도 현황 파악 및 신설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조문 개정 필요성 제시
 - 국내외 적응 관련 이슈·쟁점을 바탕으로 법제화 전략(현행 「녹색성장기본법」 개정)을 구상하고 기존 조항에 대한 수정·보완 및 신규 조항을 마련
 - 법제화 전략에 따른 적응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제정안 마련
- 본 연구는 2014년 수행된 “기후변화 적응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연구(환경부·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2014)”의 후속 연구로 추진되었으나 기존 연구의 경우 적응법 제정을 목표로 수행된 반면,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을 다루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을 목표로 체계와 조문을 구성하였음
 - 본 과제에 앞서 「2014년 기후변화 적응」의 “기후변화 적응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2014년 연구에서는 적응법제 관련 해외 사례 조사·분석, 법제화 항목 마련 및 이슈 분석, 기후변화 적응법 제정을 위한 법조문(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

3. 추진방법

가. 문헌 및 사례조사

- 기후변화 적응 법제와 관련된 기존 선행 연구와 사례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검토 문헌 및 사례는 다음과 같음
 - 기후변화 적응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연구(환경부·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2014)
 - The 2015 Global Climate Legislation Study : A Review of Climate Change Legislation in 99 Countries Summary for Policy-makers(Nachmany et al., 2015)
 - 멕시코 기후변화일반법(General Law on Climate Change), 필리핀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of 2009) 및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법(Philippin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of 2010), 미국 로드아일랜드 기후회복법(The Resilient Rhode Island Act of 2014), 하와이 기후적응법(Hawaii Climate Adaptation Initiative Act)
 - 기후변화대응기본법(초안 2014.3)

나.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 (목적) 전문가 포럼은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현행 녹색법상 적응 관련 법령의 수정·보완·신규 추가 사항 등 필요 사항을 논의하고, 기후변화 적응법제가 강화된 법조문(안) 마련 및 검토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됨
 - 이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령(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며, 전략에 따른 법제 강화 관련 사항들을 논의 및 준비
- (명칭)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 (구성) 환경부, KEI KACCC, 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전문가/환경법 전문가 등 20인 내외
 - (작업반) 기존 법안 수정·보완 및 신규 법안을 추가하여 적응법안 집필 등 (적응법제 관련 항목별로 KEI KACCC 내 수행 중인 관련 과제 해당 과제 책임자를 포함)

- (자문단) 법제 추진 전략 및 기본 방향 설정, 법제화 이슈·항목 발굴, 및 법제 체계 및 조항 구성, 항목별 법령(초안) 검토 등

<표 1-1>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자문단 명단

구분	위원	소속	직위
1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3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	안병옥	기후행동연구소	소장
5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6	이준서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7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8	최희선	KEI KACCC	센터장
9	이정호	KEI 국토자연연구실	연구위원
10	박종원	부경대학교	교수
11	현준원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운영) 전문가 포럼은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총 5차의 포럼 개최와 필요시 수시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표 1-2> 전문가 포럼 운영 일정 및 주요 내용

구분	일자(장소)	주요 내용
1차 포럼	2016.4.21 (서울역 스마트워킹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녹색법상 기후변화 적응 법조문 등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제 현황 분석 ◦ 기후변화 적응법 추진전략, 항목(초안) 검토 등
2차 포럼	2016.5.13 (서울역 스마트워킹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안) 검토 및 우선 도입 필요 항목 선정 ◦ 적응법안 구성(안)의 기존 법 체계 내 포함 방안 검토 등
3차 포럼	2016.7.8. (서울역 스마트워킹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필요성 및 현행 법조문 수정·보완(안) 논의 등
4차 포럼	2016.9.7 (종로 토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8조 개정(안) 방향 및 시행령 개정 논의 등
-	2016.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별 필요 사항 자문회의(공공기관, 지자체 등) 등 ※ 국회기후변화포럼 적응법제 정책토론회(10.25) 연계 의견수렴
5차 포럼	2016.11.5 (종로 토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안 종합검토 등
-	2016.11.1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에 대한 서면 검토 등

다. 전문가 설문조사

- (제목) 기후변화 적응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 (대상 / 응답자) 기후변화 적응분야 전문가 총 33인
 - 학술연구기관 23명, 공공기관 6명, 민간기관(기업, NGO, 언론 등) 4명
- (기간 / 방법) 2016년 9월 1일~9월 27일,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
- (주요 설문 내용)
 - 기후변화 대응에서 적응정책의 비중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수준에 대한 평가
 -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평가
 -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성과 및 개선점
 -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법·제도에 대한 평가
 - 적응법제 개선 시 가장 바람직한 법률 제·개정 방안
 - 적응법제 개선 시 우선적으로 수정되거나 신규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3차 정책토론회 “기후변화 적응제도 강화 방안” 과 연계하여 토론회에 참석한 민·관·학·산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응법제 추진에 있어서의 이슈를 파악함
-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3차 정책토론회 “기후변화 적응제도 강화 방안”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제목) 기후변화 적응제도 강화 방안
 - (일시 / 장소) 2016.10.25.(화) 10:00~12:00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요 내용) 기후변화 적응제도 강화를 위한 법제도 발전방안, 기후변화 적응법안과 기후변화 대책법안의 장단점 비교 제언 등 주제 발표와 주제 발표 관련 지정토론, 방청객 의견수렴 등

제2장

기후변화 적응법제 현황 검토



제2장 기후변화 적응법제 현황 검토

1. 해외 기후변화 적응법제

가. 국제법규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관련 동향은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2015년 COP21의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제로 바뀌면서 대상 범위, 목표 수준 등 여러 부분에서 기후변화 정책에 변화가 발생함
 -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을 두었지만,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감축과 적응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대응을 대상 범위로 설정
 - 각 국가의 목표 수준 설정은 기존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각 국가가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보고하는 상향식(Bottom-up)으로 방식 변경
 - 교토의정서 체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37개 선진국과 유럽연합을 대상 국가로 하였지만, 파리협정 체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에 이행의무 부여
 - 교토의정서는 공약기간을 1, 2차로(1차: 2008년~2012년, 2차: 2013년~2020년) 나누어서 시행되었지만, 파리협정체제에서는 2020년 이후 5년 단위로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갱신토록 설정
- 파리협정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제7조(적응)와 제8조(손실과 피해)에서 다루고 있으며 제7조 적응에 대하여 적응의 글로벌 목표와 역할(1, 2항), 적응의 원칙(5항), 개별 국가의 적응행동(9항), 적응 커뮤니케이션(10~12항) 및 전 지구적 이행점검(14항) 등을 다루고 있음¹⁾

1) 강주연(2016), “신기후체제 적응 논의 동향”, 「기후변화학회 특별세션」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역할을 설정하여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적응 방향을 규명(1항 및 2항)
- 적응원칙에서는 개도국의 의견 적극 반영, 통합적 접근,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생태계 및 전통지식 등을 포괄적으로 언급(5항)
- 기후변화 적응의 주체는 각 당사국이며, 당사국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적응 추진을 위해 국가적응계획(NAP: National Adaptation Plan) 등 적응과 관련한 계획의 수립·이행 강조(9항)
- 국가적응계획(NAP), 국가별기여방안(NDC), 국가보고서(NC) 등 적응정보를 주기적으로 제출 및 갱신하고 이는 사무국이 관리하는 공공등록부에 기록, 당사국은 2년에 한 번씩 적응 관련 정보를 공유(10~12항)
- 적응행동 이행 강화, 적응과 적응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의 적절성과 효과성 검토, 전 지구적 적응목표 달성 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진전사항 검토 등 적응부문에 대하여 전 지구적 차원의 이행점검 수행(14항)

<표 2-1> 파리협정 제7조의 구조 및 국내 적응과 관련된 주요 내용

구분	조항	조항 세부
목표와 역할	◦ 적응의 글로벌 목표(1항), 적응의 역할(2항)	1. 당사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제2조에서 언급된 기온 목표의 맥락에서 적절한 적응 대응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응역량 강화, 회복력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경감이라는 전 지구적 적응목표를 수립한다. 2. 당사자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별히 취약한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급박하고 즉각적인 요구를 고려하면서, 적응이 현지적, 지방적, 국가적,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모두가 직면한 전 지구적 과제라는 점과, 적응이 인간, 생태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이며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요소이며 이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개도국 노력 인정	◦ 개도국의 적응 노력 인정 (3항)	3.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적응 노력은 이 협정의 당사자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 총회 제1차 회기에서 채택되는 방식에 따라 인정된다.

구분	조항	조항 세부
감축, 재정과의 연계	◦ 적응/감축/재정 연계성(4항)	4. 당사자는 현재 적응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하고, 더 높은 수준의 완화가 추가적인 적응 노력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으며, 적응 필요성이 더 클수록 더 많은 적응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원칙	◦ 적응의 원칙 (5항)	5.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적응을 관련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정책과 행동에 통합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지역공동체 및 생태계를 고려하면서 적응행동이 국가 주도적이고 성 인지적이며 참여적이고 전적으로 투명한 접근을 따라야 한다는 점과,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 그리고 적절히 전통 지식, 원주민 지식 및 지역 지식체계에 기반을 두고 따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지원 및 협력	◦ 지원/협력의 중요성(6상), 지원의무(13항) ◦ 협력을 통한 공동의 노력 (7항) ◦ UN기구의 지원 권고(8항)	6. 당사자는 적응 노력에 대한 지원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발도상국 당사자, 특히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별히 취약한 국가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7. 당사자는 다음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칸쿤 적응 프레임워크를 고려하면서 적응행동 강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여야 한다. 가. 적응행동과 관련 있는 과학, 계획, 정책 및 이행에 관한 것을 적절히 포함하여 정보, 모범관행, 경험 및 교훈의 공유 나. 관련 정보와 지식의 취합 및 당사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지침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협정을 지원하는 협약상의 것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 다. 기후 서비스에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구, 기후체계에 관한 체계적 관측,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포함하여 기후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강화 라. 개발도상국 당사자가 효과적인 적응관행, 적응요구, 우선순위, 적응행동과 노력을 위하여 제공하고 제공받은 지원, 문제점과 격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범관행 장려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의 지원, 그리고 마. 적응행동의 효과성 및 지속성 향상 8. 국제연합 전문기구 및 기관들은 이 조 제6항을 고려하면서 이 조 제7항에서 언급된 행동을 이행하기 위한 당사자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장려된다. 13.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 제7항,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강화된 국제적 지원이 개발도상국 당사자에게 제공된다.
개별국가의 적응행동	◦ 개별 국가의 적응계획 및 행동이행	9. 각 당사자는, 관련 계획, 정책 그리고/또는 기여의 개발 또는 강화를 포함하는 적응계획 과정과 행동의 이행에 적절히 참여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구분	조항	조항 세부
	(9항)	<p>가. 적응행동, 조치, 그리고/또는 노력의 이행</p> <p>나. 국가별 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절차</p> <p>다. 취약인구, 지역 및 생태계를 고려하면서, 국가별로 결정된 우선 행동을 정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p> <p>라. 적응 계획, 정책, 프로그램 및 행동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그로부터의 학습, 그리고</p> <p>마. 경제 다변화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의 방식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그리고 생태계의 회복력 구축</p>
적응 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응 커뮤니케이션 (10~12항) 	<p>10. 각 당사자는 개발도상국 당사자에게 어떤 추가적 부담도 발생시키지 아니하면서 적절히 적응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갱신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는 당사자의 우선순위, 이행 및 지원 필요성, 계획 및 행동을 포함할 수 있다.</p> <p>11. 이 조 제10항에 언급된 적응 보고서는 국가별 적응계획, 제4조제2항에 언급된 국가 결정기여, 그리고/또는 국가별 보고서를 포함하여 그 밖의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로서 또는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적절히 제출되고 갱신된다.</p> <p>12. 이 조 제10항에 언급된 적응 보고서는 사무국이 유지하는 공공 등록부에 기록된다.</p>
전 지구적 이행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의 목적 (14항) 	<p>14. 제14조에 언급된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특히 다음의 역할을 한다.</p> <p>가.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적응 노력 인정</p> <p>나. 이 조 제10항에 언급된 적응보고서를 고려하며 적응행동의 이행 강화</p> <p>다. 적응과 적응을 위하여 제공되는 자원의 적절성과 효과성 검토, 그리고</p> <p>라.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전 지구적 적응목표를 달성하면서 나타난 전반적인 진전 검토</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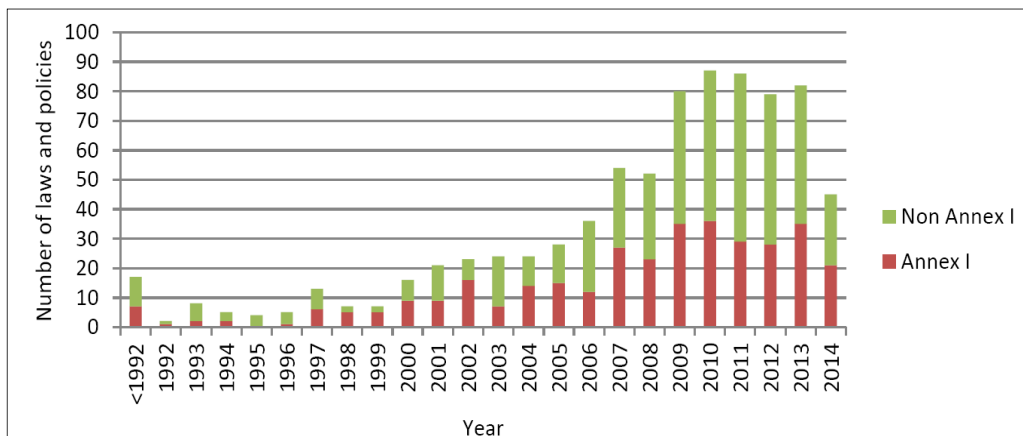
자료: 강주연(2016), “신기후체제 적응 논의 동향”, 「기후변화학회 특별세션」 발표자료의 내용 발췌.

나. 세계 기후변화 법제 동향

- 그랜탐환경기후변화연구소(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글로벌-세계의원조작(GLOBE: The Global Legislators Organisation), 국제의회연맹(IPU: International Parliamentary Union)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5년 글로벌 기후변화 법제

연구(2015 Global Climate Legislation Study」 보고서는 99개 국가와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대응 법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음

- 조사 대상: 2015년 1월 이전 의회를 통과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법과 정책
- 조사 국가: 부속서 I(Annex I) 국가 31개국과 유럽연합(EU) 및 비부속서 I(non-Annex I) 67개 국가(98개 국가와 유럽연합은 세계 50대 온실가스 배출 국가 중 46개국을 포함하며, 이들 국가의 배출량 총합은 세계 배출량의 약 93%를 차지)
- 세계 기후변화 관련 법률의 수는 1997년 이래 매 5년마다 2배씩 증가해왔는데, 1997년 54개에 불과했던 기후변화 관련 법률과 정책은 2014년 말 804개로 증가함
 - 389개는 법률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408개는 시행령이나 정책 등 행정 규정의 성격임
 - 2014년에는 46개의 법률과 정책이 신규로 제정되거나 수립되었는데, 이는 2013년 83개에 비해 다소 감소
- 75개국 + EU는 기후변화 완화와 관련 기본법(Framework Legislation)을 갖고 있고 64개국은 기후변화 적응을 포함한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때의 기본법은 다양한 분야와 영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완화 또는 적응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제를 칭함



<그림 2-1> 1992~2014년 세계 기후변화 법률 및 정책 신규 제정 현황(Nachmany et al., 2015)

다. 해외 주요 국가 및 지자체 단위 적응법제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영국, 멕시코, 미국, 스코틀랜드, 필리핀 등 5개 국가에서 법제가 수립되었으며, 이들 국가의 기후(변화)법은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을 위한 조항들이 함께 존재함(환경부·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2014)
- 초기에 수립된 기후(변화)법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단기 계획의 수립 및 보고 등에 관한 내용만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음(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

<표 2-2> 주요 국가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제 현황

구분	영국	멕시코	미국	스코틀랜드	필리핀
법명	기후변화법 (2008)	기후변화 일반법 (2012)	기후변화행정명령 (하와이 주, 로드아일랜드 등)	스코틀랜드 기후변화법 (2009)	기후변화법 (2009)
용어 정의	적응 정의	적응 정의	적응 정의	적응 정의	적응 정의
원칙	-	국가 기후변화 정책 원칙	-	-	-
기후변화 영향 보고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국가 보고서	-	기후예측·평가 기후변화 영향보고 서(하와이)	-	-
기후변화 영향평가	-	기후변화 영향· 위험평가	기후변화 피해 감소	기후변화 위험 진단	-
기구 /조직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위원회	기후변화 유관 장관위원회, 기후변화 이사회 생태기후변화청	대통령 주도 TF 구성 기후변화위원회 (하와이 등)	기후변화위원회	기후변화위원회/ 기후변화사무국
적응전략/ 실행계획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A)	국가전략/프로그 램(적응, 매 6년), 기후변화적응 행동(국가/연방/ 지자체/공기업)	지역별/부문별 지원 강화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국가기후변화전략, 국가기후변화행동 계획, 지자체 기후 변화행동계획

구분	영국	멕시코	미국	스코틀랜드	필리핀
법명	기후변화법 (2008)	기후변화 일반법 (2012)	기후변화행정명령 (하와이 주, 로드아일랜드 등)	스코틀랜드 기후변화법 (2009)	기후변화법 (2009)
이행점검	적응과 관련 진척사항 보고	-	-	적응과 관련 진척사항 보고	적응정책의 감독 및 운용(의회 감독 위원회, 연차보고 서 등)
공공기관 시행계획	보고기관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지도/지시(ARP)	리스크 평가 및 적 응행동/관리(연방 /주/지방정부/ 공기업)	-	-	-
정보관리	-	기후변화정보 시스템	기 후 변 화(적응) 데이터 구축	-	-
기금	-	기후변화기금		-	기후기금
기타	-	-	인프라 재해 복원력 공공보험 확대 취약계층 보호 (하와이) 자연자원 및 경관 보호(로드아일랜드)	-	취약계층 보호 (취약계층 보조금 지원)

자료: 환경부, KD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2014).

2. 국내 적응 관련 법제

가. 그간 기후변화 관련 입안 법률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안된 법안 현황을 살펴보면, 1993년 11월 정부 발의로 추진된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비준동의안” 이 최초로 시도된 것이며 이후 2014년 12월 “기후변화건강관리기본법안” 까지 총 27건이 제안됨(2016.5.10 기준)

<표 2-3> 기후변화 관련 제안된 법안 현황(2016.5.10 기준)

구분	의안명	제안자	제안 일자	의결 일자	의결 결과
1	기후변화건강관리기본법안(민현주 의원 등 11인)	의원	2014.12.1	-	-
2	기후변화대응기본법안(한명숙 의원 등 62인)	의원	2014.11.5	-	-
3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장	2011.12.27	2011.12.29	원안 가결
4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장	2011.6.28	2011.6.29	원안 가결
5	제1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8) 유치 지지 결의안(이인기 의원 등 24인)	의원	2009.12.7	2012.5.29	임기만료 폐기
6	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 총회 협상 타결을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원희룡 의원 등)	의원	2009.12.1	2010.2.3	철회
7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장	2009.9.16	2009.9.16	원안 가결
8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성곤 의원 등 11인)	의원	2009.8.26	2012.5.29	임기만료 폐기
9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인기 의원 등 14인)	의원	2009.8.26	2012.5.29	임기만료 폐기
10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심사범위 변경의 건	위원장	2009.4.1	2009.4.1	원안 가결
11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	위원장	2009.2.12	2009.3.2	원안 가결
12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이인기 의원 등 25인)	의원	2009.1.14	2009.12.29	대안반영 폐기
13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 (배은희 의원 등 21인)	의원	2008.11.25	2009.12.29	대안반영 폐기

구분	의안명	제안자	제안 일자	의결 일자	의결 결과
14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김성곤 의원 등 33인)	의원	2008.11.7	2009.12.29	대안반영 폐기
15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2008.8.26	2008.8.26	원안 가결
16	기후변화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강성천 의원 등 18인)	의원	2008.6.26	2008.9.5	폐기
17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안(이호웅 의원 등 27인)	의원	2004.11.5	2008.3.7	폐기
18	기후변화협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장	2005.3.2	2005.3.2	원안 가결
19	기후변화협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호웅 의원 등 64인)	의원	2004.7.14	2008.5.29	임기만료 폐기
20	기후변화협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장	2002.8.28	2002.8.28	원안 가결
2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비준동의안	정부	2002.7.11	2002.10.30	원안 가결
22	지구온난화 가스저감 대책법안(이호웅 의원 등 23인)	의원	2001.12.27	2004.5.29	임기만료 폐기
23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에 관한 법률안 (이정일 의원 등 20인 외 1인)	의원	2001.12.21	2004.5.29	임기만료 폐기
24	기후변화협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장	2000.12.19	2000.12.20	원안 가결
25	기후변화협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부영 의원등 37인)	의원	2000.9.19	2004.5.29	임기만료 폐기
26	기후변화협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상현 의원등 40인)	의원	1998.10.19	2000.5.29	임기만료 폐기
27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비준동의안	정부	1993.11.11	1993.11.30	원안 가결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²⁾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2) 국회기후변화정책연구소(2016), “해의 기후변화 적응 법제 현황 및 국내 개선방안의 비교·분석”.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년 1월 13일 제정·시행되고 있음
- 녹색법은 기존의 「지속가능발전법」 이후 새로 제정되어 지속가능발전법 내용을 상당수 흡수하여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후속적 기본 법제라 할 수 있음(환경부·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2014)
 - 녹색법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 패러다임을 최초로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부응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진전시킨 점 역시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현행 녹색법은 기후변화 대응의 원칙과 목표, 수단 등에서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한계 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위상이 강등되고 기본법적 성격의 규정들을 삭제·변경·수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에 대해 법체계상 상위법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나 이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식과 배치됨(「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50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본법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기본 규정에서 시행령 수준의 세부 규정까지 혼재되어 있어 내용 중복과 법안의 밀도 문제를 야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제35조, 제43조~제44조 등)
 - 총 64개 조항 중에서 14개 조항(법률 조항의 약 22%)이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 세부 규정의 과다 대표성에 따른 법률 구조의 불균형과 기본법 성격의 약화 초래(「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29조, 제31조~제36조)
 -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으로 제시하고 있는 범지구적 노력 참여,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가격 기능과 시장원리 기반, 첨단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활용, 탄소시장 활성화,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및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등에는 기후변화 대응의 원칙, 목표, 수단 등이 혼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총 64개 조항 가운데 ‘적응’ 관련 조항은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와 제52조(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에 불과해 ‘완화’와 ‘적응’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제52조)³⁾
-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수단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계획의 평가 및 환류가 곤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시행령 제38조)⁴⁾
- 최근 파리협정 타결 등 국제사회의 변화된 기후변화 대응 여건과 가뭄, 폭염 등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상기후 발생 빈도 등을 반영해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다. 기후변화 적응 관련법 현황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법률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main.html>)의 법령 검색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한 법령을 1차적으로 추출하고 2차로 실제 내용을 검토하여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법·령을 파악함
- (키워드) 기후,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 (기준) 2016.5.12 시점 시행 및 시행 예정 법령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감축’은 총 21회 언급된 반면, ‘적응’이라는 단어 사용은 총 4회 사용에 그치고 있다.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3항은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시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매년 그 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기후, 기후변화, 적응 등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법률과 법령은 <표 2-4>와 같음
 - “기후” 키워드를 포함한 법령은 133개이며, 이 중 실제 “기후” 와 관련된 의미를 포함하여 다루고 있는 법률은 41개
 - “기후변화” 를 포함한 110개 법령 중 39개 법률만이 “기후변화” 의미를 포함
 - “적응” 을 포함한 법령은 159개로 이 중 “기후변화 적응” 은 28개 법령(8개 법률)이 키워드를 포함하나 실제 “기후변화 적응” 의미를 담은 법률은 6개로 분석
 - “기후변화 영향” 은 69개 법령(21개 법률)에서 키워드를 포함하나 실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법률은 8개
 - “취약성” 은 15개 법령(4개 법률)에서 용어를 포함하나 실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법률은 3개로 분석

<표 2-4> 키워드 분석을 통한 기후 관련 법률 현황

(단위: 개수)

포함 키워드	법 및 령	법률	실제 적응 관련 법률
기후	133	41	-
기후변화	110	39	-
적응	159	-	-
기후변화 적응	28	8	6
기후변화 영향	69	21	8
취약성	15	4	3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하며 실제 적응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법률은 현재 15개 법률로 <표 2-5>와 같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상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기본법」, 「산림보호법」, 「산업발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연안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환경보전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표 2-5> 키워드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률 현황(2016.5.12 기준)

	법령명	공포 일자	소관 부처	비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3.7.30	국무조정실	기후변화, 적응, 영향, 취약성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12.29	복지부	기후변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5.8.11	국토부	기후변화
3	기상법	2015.2.3	기상청	기후변화, 영향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2015.6.22	농림부, 해수부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5	대기환경보전법	2015.12.1	환경부	기후변화, 적응
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013.3.23	산림청	기후변화
7	산림기본법	2015.1.20	산림청	기후변화, 영향
8	산림보호법	2015.7.20	산림청	기후변화
9	산업발전법	2016.3.29	산업부	기후변화, 영향, 적응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5.12.1	환경부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11	연안관리법	2014.6.3	해수부	기후변화
12	자연재해대책법	2014.12.30	국민안전처	기후변화, 적응
13	자연환경보전법	2016.1.27	환경부	기후변화, 적응
1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2013.3.23	산림청	기후변화
15	환경정책기본법	2015.12.1	환경부	기후변화

3. 종합 및 시사점

- 파리협정, IPCC AR5 등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계속 부각강화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효과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함
- 기후변화 적응 관련 부처에서는 기존 소관 법·제도에 기후변화 적응을 반영하는 등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항을 기존의 사회·경제·환경 정책에 통합 및 내재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기후환경 정보 부재, 미미한 적응예산 편성, 완화에 비해 낮은 적응 인식 등을 법·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

제3장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전략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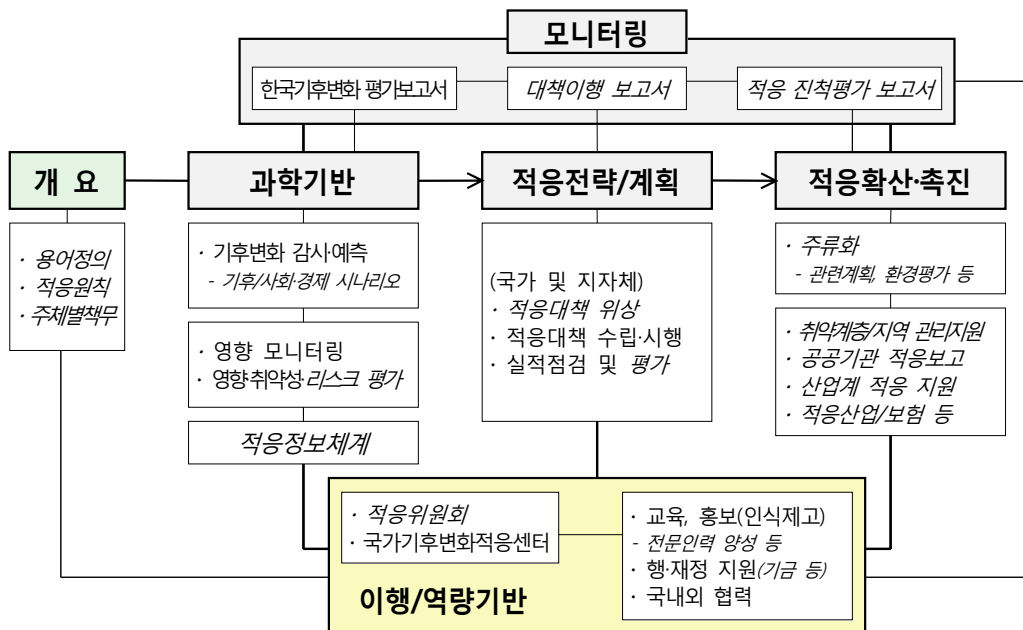


제3장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전략 마련

1. 적응법제 체계 및 항목 설정

- 해외 기후변화 법제 사례 및 선행 연구(환경부·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2014)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시행 관점에서 체계를 구성하여 적응법제 체계 및 항목(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포럼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함
- 선행 연구 “기후변화 적응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연구(환경부·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2014)”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전문가를 대상 설문조사 결과 활용 [참고 1]
- 마련된 체계 및 항목(안)에 대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33인)하고 제안 항목에 대한 적절성, 수정·신규 포함 필요사항 도출 및 참조 [참고 2]
- 법제 체계는 기본개념·원칙 등 기본 전제와 과학기반 마련→정책 수립→정책 시행→모니터링의 적응정책 과정과 적응을 위한 이행·역량기반을 고려하여 <그림 3-1>과 같이 마련하였으며, 세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요: 용어 정의, 적응원칙, 주체별 책무
- 과학기반: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기반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시나리오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기후변화 영향·취약성·리스크 평가, 적응 DB 및 정보체계
- 적응 전략 및 계획: 국가 및 지자체 단위 적응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적응대책의 위상, 적응대책 수립·시행 관련 사항, 대책의 실적점검 및 평가
-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확산 및 촉진: 관련 계획 및 정책 내 적응 주류화,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관리지원, 공공기관 적응보고, 산업계 적응지원, 적응산업/보험 등 민간영역의 적응 지원

- 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 우리나라 기후변화 및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작성, 적응대책 이행결과에 대한 대책이행 보고서, 우리나라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의 진척사항 점검을 위한 적응 진척평가 보고서
 - 적응이행 및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기후변화 적응 위원회 구성·운영,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 설치·운영, 적응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적응기금 등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국내외 협력방안
- 마련된 적응법제 23개 항목 중 현재 기후변화 적응 법령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령상 내용이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만 포함된 항목은 18개이며(〈그림 3-1〉의 붉은색 기울임 표시), 적응항목과 관련되는 사항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수 있는 녹색법 조문은 〈표 3-1〉과 같음



<그림 3-1> 기후변화 적응법제 체계 및 항목

※ 주: “ 붉은색 기울임” 표시된 항목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상 근거 조항이 없는 항목

<표 3-1> 녹색법상 적응법제 항목 관련 조문

구분	항목	법률	시행령
개요	용어 정의	제2조 정의	-
	적응 원칙	제3조 녹색성장 기본원칙	-
		제38조 기후변화 대응원칙	-
	주체별 책무	제4조 국가	-
		제5조 지자체	-
		제6조 사업자	-
		제7조 국민	-
과학 기반	기후변화 감시·예측	제48조 영향평가/적응대책 추진	-
	영향·모니터링		-
	영향·취약성·위험평가		-
	적응정보체계		-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
적응 전략 /계획	적응계획 위상	제48조 영향평가/적응대책 추진	제38조 적응대책 수립·시행 등
	국가 적응계획 수립·시행	제9조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제40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지자체 적응계획 수립·시행	제48조 영향평가/적응대책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계획이행 보고서			
적응 확산/ 촉진	주류화	제48조 영향평가/적응대책 추진	-
	취약 계층/지역 관리지원	제48조 영향평가/적응대책 추진	-
		제22조 녹색경제·녹색산업 구현 기본원칙	-
	공공기관 적응보고	제48조 영향평가/적응대책 추진	-
	산업계 적응 지원	제22조 녹색경제·녹색산업 구현 기본원칙	-
		제25조 기업 녹색경영 촉진	-
	적응산업	제23조 녹색경제·녹색산업 육성·지원	-
	적응 진척 평가	제48조 영향평가/적응대책 추진	-
이행/ 역량 기반	적응위원회	제14조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
		제16조 회의	-
		제17조 분과위원회	-
	교육·홍보	제59조 녹색생활실천 교육·홍보	-
	행·재정적 지원	제48조 영향평가/적응대책 추진	-
	기후변화대응기금	제28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
		제29조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	-
	국내외 협력	제37조 국제규범 대응	-
		제61조 국제협력의 증진	-
		제63조 국가보고서 작성	-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	제2조의 2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지정·운영 제2조의 3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평가

[※ 참고 1]

선행 연구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기후변화 적응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연구(환경부·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2014)
 - (방법)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를 위한 개선·보완·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이메일 설문조사(50명 설문, 26명 회신)
- 기후변화 적응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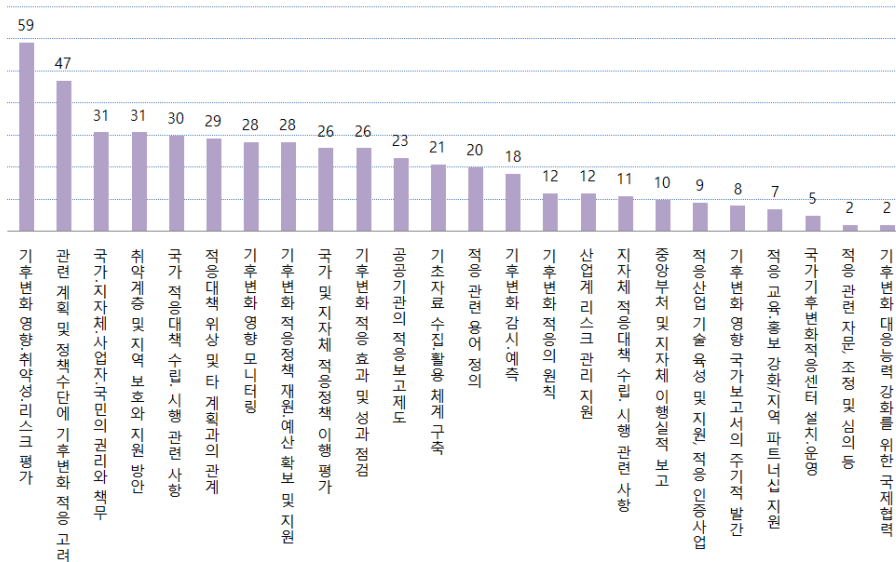
구분	조항(안)	내용	의견 수
제1장 총칙	법안 목적	기후변화 적응법의 목적과 역할	1
	기후변화 적응 등 관련 용어	관련된 용어의 정의	2
	기후변화 적응 기본원칙	기후변화 적응 원칙 제시	1
	국가 및 지자체, 사업자, 국민 의 권리와 책무	각 주체별 책임과 역할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민간부문의 역할 강조 기후적응 관련 부처 협조체계 구축 및 근거 마련	5
제2장 기후변화 영향 조사 등	기후변화 영향 국가보고서	기후변화 영향 국가 보고서의 주기적 발간 등	3
	기후변화 영향(위험) 평가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 등	7
제3장 국가기후변화 적응위원회 및 국가적응센터	국가 기후변화 적응위원회 (지방적응위원회) 구성	기후변화 거버넌스(위원회)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기후변화 영향 평가 등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설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지원)	전담 기관의 설립 및 운영 기술적·재정적 지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설치 및 역할 광역권별 '기후변화적응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4
제4장 기후변화 적응 국가전략 수립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5년)	기후변화 적응대책 목표 설정 기후변화 적응계획과 관련 계획의 관계 제시	8
	기후변화 적응 국가전략 (20~40년)	적응계획의 체계 및 이행보고 적응대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지자체 적응세부계획에 대한 승인/심의	2
	국가 및 지자체 기후변화 대책 이행 실적 점검	기후변화적응정책의 이행 또는 효과에 대한 평가	3

구분	조항(안)	내용	의견 수
제5장 기후변화 적응 시책	공공기관 적응대책 지원	공공기관의 리스크 평가, 적응보고제도 기반시설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의무화	3
	산업계 리스크 관리 및 적응 산업·기술 육성	산업계 리스크 관리 및 적응산업 기술 육성 기후적응 인증 기업제도	5
	취약계층/취약지역(도시 및 농촌, 보호지역 등) 지원	민감 취약집단의 보호 방안 취약계층/취약지역 보호 및 지원 취약성 및 위험성 평가 시스템 구축	3
	물, 식량, 산림 등 자원관리 지원	기후변화 적응연구, 관련 기술과 정보 관리 R&D 확대 및 정책지원 수단 등	4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SEA/ EIA 등)	영향평가와의 연계 적응대책과 토지이용 계획 연계 방안	2
	정보체계 운영 등 적응정보(통계) 관련 사항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 근거 마련 및 기초자료 확보	3
	기후변화 적응인식 제고 관련 사항(교육, 홍보 등)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교육 강화 지역 기후변화 적응 파트너십 지원	2
	국민, 사업자 등 행·재정 지원	기후적응기술개발지원	1
제6장 적응기금 설치 등	적응기금 등 재원 마련	기후변화 적응정책 재원 또는 예산 확보 재원 조달 및 투자 근거 지자체 적응 예산 지원	6
	국제 협력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과 대응능력 강화 등을 위한 국제 협력과 공조	1
기타 의견	관련 법(계획)과의 관계	기후변화 적응법과 관련된 타법(「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수리권 관련 법, 빗물관리 관련 법 등)과의 연계 강화 적응정책과 방재정책의 연계	6
	적응형 도시개발	재해 취약성 분석에 근거한 재해 예방형 도시 계획 수립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사업 근거 규정 마련	2
	적응과 완화	기후변화 대응(완화) 계획과 적응계획의 통합적인 접근	8
	재해보험 확대, 보험산업의 육성 등	기후변화 피해보험의 제도적 도입, 재해보험의 확대 등	2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 지원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2
총 계			88

[※ 참고 2]

기후변화 적응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기후변화 적응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기후변화 적응 전문가 대상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입식 온라인 설문 (33인 응답)
- 기후변화 적응법제 개선 시 포함해야 할 내용
 - 우선적으로 수정되거나 신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기후변화 영향·취약성·리스크 평가>와 ‘관련 계획 및 정책수단에 기후변화 적응 고려(적응 주류화)’ , ‘국가자녀채사업자국민의 권리와 책무’ , ‘취약계층 및 지역 보호와 지원방안’ , ‘국가 적응대책 수립·시행 관련 사항’ 의 순



<그림 3-2> 기후변화 적응법제 개선 시 포함해야 할 내용

[※ 참고 3]

기후변화 적응법제 개선 항목(안)과 해외 적응법 항목 비교

구분	영국	멕시코	미국	스코틀랜드	필리핀	우리나라
법명 (제정 연도)	기후변화법 (2008)	기후변화 일반법 (2012)	기후변화 행정명령 (하와이주, 로드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기후변화법 (2009)	기후변화법 (2009)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2010)
용어 정의	적응 정의	적응 정의	적응 정의	적응 정의	적응 정의	• 적응 정의
원칙	-	국가기후변화정책 원칙	-	-	-	• 적응 원칙
기후변화 전망	-	-	-	-	-	• 기후변화 감시· 예측 • 기후사나리오
기후변화 영향 보고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국가보고서	-	기후예측·평가 기후변화 영향보고 서(하와이)	-	-	• 한국기후변화평가 보고서
기후 변화 영향 평가	-	기후변화 영향· 위험평가	기후변화 피해 감소	기후변화 위험진단	-	• 영향·취약성· 리스크 평가
기구 /조직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기후변화(적 응)위원회	기후변화 유관장관 위원회, 기후변화 이사회생태기후변 화청	대통령 주도 TF 구성 기후변화위원회 (하와이 등)	기후변화위원회	기후변화 위원회/ 기후변화 사무국	• 적응위원회 •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
적응전략/ 실행계획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A)	국가전략/프로그램 (적응, 매 6년), 기후변화 적응행동 (국가/연방/지자체/ 공기업)	지역별/부문별 지원 강화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국가 기후변화 전략, 국가기후변화 행동계획, 지자체 기후변화 행동계획	• 국가/지자체 적응 대책
이행점검	적응과 관련 진척 사항 보고	-	-	적응과 관련 진척 사항 보고	적응정책의 감독 및 운용 (의회 감독위원회, 연차보고서 등)	• 실적점검 및 평가 • 대책이행 보고
공공기관 시행계획	보고기관에 대한 소관행정기관의 지 도/지시(ARP)	리스크 평가 및 적응 행동/관리(연방/주/ 지방정부/공기업)	-	-	-	• 공공기관 보고제도
정보관리	-	기후변화 정보시스템	기후변화(적응) 데이터 구축	-	-	• 적응 정보체계
기금	-	기후변화기금	-	-	기후기금	• 적응기금
기타	-	-	인프라 재해 복원 력, 공공보험 확대, 취약계층 보호(하 와이), 자연자원 및 경관 보호(로드아 일랜드)	-	취약계층 보호 (취약계층 보조금 지원)	• 적응진척평가 • 취약계층/지역 • 적응산업 • 산업계 적응 지원 • 주류화 • 국내외 협력

2. 적응법제 강화 추진전략 설정

가. 적응법제 개선방안 검토

1) 적응법제 개선방안

-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이준서(2014)는 녹색법 유지를 전제로 개정, 녹색법을 「기후변화대응기본법」으로 대체하고, 녹색법에서 적응 관련 내용만 분리하여 「기후변화적응법」 제정, 녹색법 폐지 및 기후변화 대응/적응 법률 제정 4가지를 제안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표 3-2>와 같이 제시함

<표 3-2> 기후변화 적응 입법(안)의 장단점 분석

구분	장 점	단 점
1안 (녹색법 부분개정, 적응부분 추가 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되도록 소폭의 개정을 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 - 현실적으로 가장 용이한 개선방법 (다만,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적응 관련 주무부처의 특정 문제가 남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을 최소화한다고는 하지만 '대응'에 상응하는 '적응' 관련 규정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현 구조상 상당한 개정이 불가피함 -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적응 정책이 혼재되어 있어 명확하게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녹색법 존치] 2안 (적응사항 법률 구체화) 3안 (적응사항 별도 법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명확한 입법 목적 설정이 가능 - 적응에 관한 사항을 특정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됨 - 개별법 제정 후 향후 관련 분야 (예: 기후변화 영향평가의 확대) 내용이 추가된 입법 제안 시 추진이 용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의 목적, 조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정도까지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배출권 할당 및 거래와 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도의 도입이 아님에도 적응과 대응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분리하는 것은 과도한 분법화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특히 3안의 경우) - 기존 법률과의 관계상 관리체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음 (각각의 법률에 따른 계획과 대책의 혼재)
[녹색법 폐지] 4안 (녹색법 폐지, 대응/적응법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법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이라는 정비된 프레임이 재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성장기본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된 법률과의 관계 및 추진하고 있는 기존 녹색성장 정책의 폐지에 따른 혼란 등 위험부담이 가장 큼 - 기존에 형성된 법체계를 고려한다면 '녹색성장'을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으로 대체할 수만은 없는 것이어서 법률의 폐지 또한 쉽지 않음

자료: 이준서(2014).

- 국회 기후변화정책연구소(2016)⁵⁾는 국내 기후변화 적응법제의 개선 방안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개정,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기후변화적응법」 제정 등 3가지를 검토하고 각각의 제·개정 방식을 비교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 방식은 적응법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현행 녹색법상 관련 조문의 비교·분석을 통해 현행 법제상 근거 조항이 없는 항목을 선별한 후 수정·보완 및 신규 추가사항 등을 도출하는 방식
 -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은 지난 2014년 시민단체들이 ‘국민이 발의하는 기후변화법 제정운동(2013~2014년)’의 일환으로 초안을 작성해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제안되었던 방식
 - 「기후변화적응법」 제정 방안은 환경부·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2014) 연구를 통해 검토된 방식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법제는 ‘기후변화 감시·예측 → 영향평가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 기후변화 적응지원 및 이행 체계화 → 적응 이행기반 및 역량기반 구축’으로 구성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기후변화적응법」 제정 세 가지 방안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목적의 명확성’, ‘법체계의 완결성’, ‘정치적 수용성’, ‘절차적 용이성’의 평가 기준으로 각 방안들을 평가하여 <표 3-3>과 같이 제·개정 방식을 비교·평가함
 - ‘목적의 명확성’은 적응정책의 법제도적 기반 강화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하며 이는 ‘완화’와 ‘적응’의 균형을 이루는 데 얼마나 용이한지 보여주는 지표로서 1안, 2안, 3안순으로 증가
 - ‘법체계의 완결성’은 법률의 위계 및 타 법률과의 관계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으며, ‘법체계의 완결성’ 평가는 2안, 1안, 3안순으로 높이 평가

5) 기후변화정책연구소(2016), “해외 기후변화 적응 법제 현황 및 국내 개선방안의 비교·분석”.

- ‘정치적 수용성’은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입법기관의 동의 여부 및 동의 수준과 관련되며, ‘정치적 수용성’은 1안, 3안, 2안순으로 높이 평가
- ‘절차적 용이성’은 법률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부처 및 해당 법안을 검토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최근 기후변화 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절차적 용이성’은 1안, 3안, 2안의순으로 평가

<표 3-3> 기후변화 적응법제 개선방안 비교·평가

평가 기준	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안	기후변화적응법 제정안
목적의 명확성	+	++	+++
법체계의 완결성	++	+++	+
정치적 수용성	+++	+	++
절차적 용이성	+++	+	++

자료: 국회 기후변화정책연구소(2016).

나. 추진전략 및 기본방향 설정

- 제·개정 방식의 비교 및 평가 결과와 현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응법안 강화 추진전략을 모색한 결과 ‘녹색법의 기후변화 적응관련 사항 추가·수정·삭제’의 일부개정으로 방향을 설정함
- 개정의 기본방향은 녹색법의 ‘기본법’적 성격⁶⁾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방향과 기본원칙 등의 포괄적·종합적 성격의 내용과 적응정책 추진기반과 관련된 내용을 변경 및 신설하는 것으로 정함. 이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됨
 - 기후변화 적응의 정의, 다른 개념과의 연계 및 관련·차별성 명확화

6) 일반적으로 기본법은 세분화되고 복잡한 법률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되며, 그 내용은 해당 분야의 관련 법률들을 체계적 내지 유기적으로 조율·조정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념, 원칙, 방향 등을 설정하는 것에 그침 (김현준, 2010).

- 기후변화 적응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체계 관련 내용 추가 및 강화
- 기후변화 적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항 수정·보완
- 총괄 부처 소관 사항에 집중, 개별 부처 소관 관련 조항 제외
- 기존 법체계 내에서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내용 유지

제4장

기후변화 적응법제 개정안



제4장 기후변화 적응법제 개정안

1. 녹색법 개정 기본전제

가. 개정 필요성

- 국제사회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을 통해 기존 감축 중심의 교토의정서와 비교하여 공식적으로 국제기후변화 정책에 있어서 감축과 동등한 수준으로 적응의 중요성이 부각됨
 - 파리협정에서는 적응의 전 지구적 목표를 설정하고 적응의 역할과 원칙을 제시함
 - 또한 협정문 제7조 제9항~12항에서는 개별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및 행동이행과 적응 커뮤니케이션(Adaptation Communication)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명시함
 - 우리나라는 INDC를 통해 이미 장기적인 적응목표와 전략을 제출하는 등 국내의 기후변화 적응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노력 중임
- 가뭄, 폭염, 이상고온 등 최근 극한기상 및 이상기후 발생 증가와 기후변화 피해 심화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적응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기후변화 완화정책 마련·추진에도 온실가스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극한기상 발생 등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 높아져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적응은 시급하며 필수적임
 - 국민의 62.1%가 기후변화 적응 인지, 국민 대다수(93.8%)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KEI, 2014)
 - 기후변화 적응은 재난재해 예방·관리로 국민안전과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 기조에 부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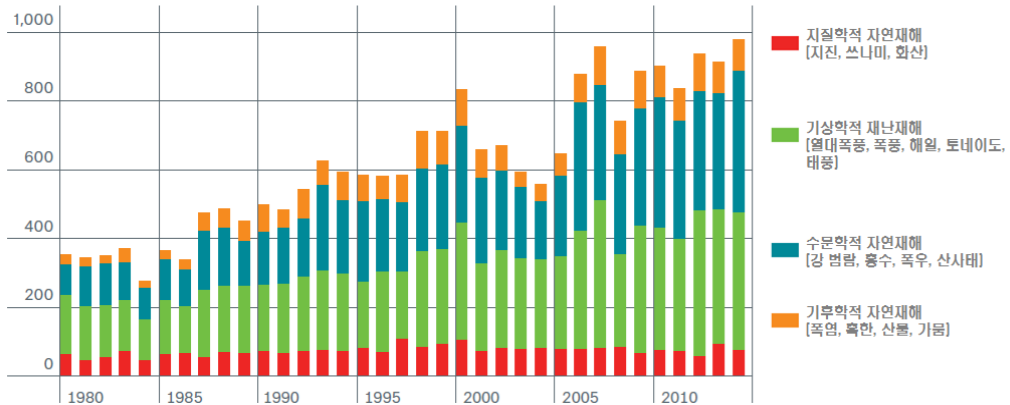
- 한반도 미래 기후 온난화 및 강수량 증가, 극한기상 심화 및 해수면 상승 가속 전망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지난 30년(1981~2010년)간 연평균 기온 1.2℃ 상승(기상청, 2012), 주변 해역 연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2.64mm로 동기간 전 지구 평균값(2.00mm) 상회(국립해양조사원, 2014)
- 기후변화 적응 추진을 위한 기반체계 강화가 필요함
 - 기후변화 적응 관련 부처에서는 기존 소관 법·제도에 기후변화 적응을 반영하는 등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임. 이와 같이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항을 기존의 사회·경제·환경 정책에 통합 및 내재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에 필수인 기후환경 정보 부재, 미미한 적응예산 편성, 완화에 비해 낮은 적응인식 등으로 지자체 적응정책 수립·시행이 어려움(KEI, 2013)

나. 공공기관 적응 보고제도 도입 필요성

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현황

-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전 세계 이상기후 발생 빈도 및 피해액 증가
 - 1980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자연재해 중 88%가 기후와 관련한 자연재해이며, 특히 2014년 980건의 자연재해 중 92%(약 901건)가 기후와 관련됨
 - 지난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전 세계 피해금액 평균은 1,900억 달러로 지난 30년간의 피해금액 평균인 1,30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등 피해금액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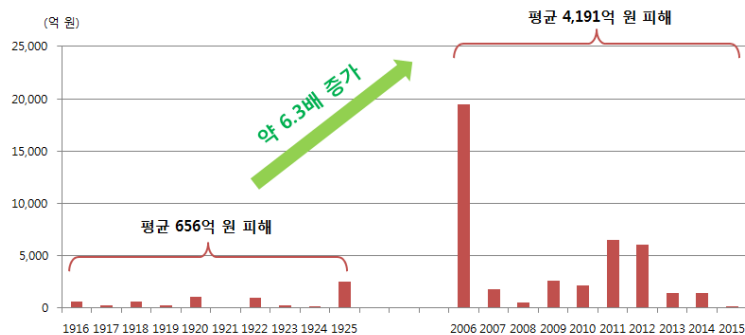
세계 자연재해 발생 횟수(1980-2014)



<그림 4-1> 세계 자연재해 발생 현황(Munich Re NatCatSERVICE, 2015)

○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 재산피해 및 피해 복구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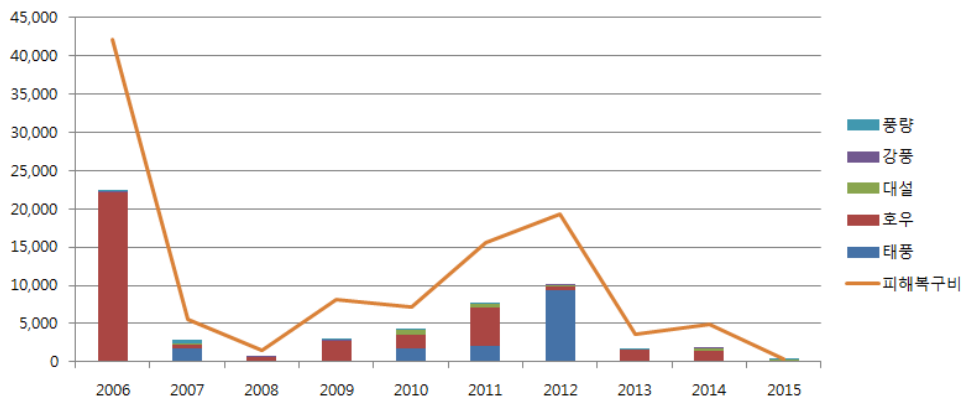
- 1916~1925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평균 656억 원 발생
- 2006~2015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는 평균 4,191억 원으로, 20세기 초반 대비 약 6.3배 증가한 수치



<그림 4-2>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현황(국민안전처, 2015)

7) 재산피해액 2015년 환산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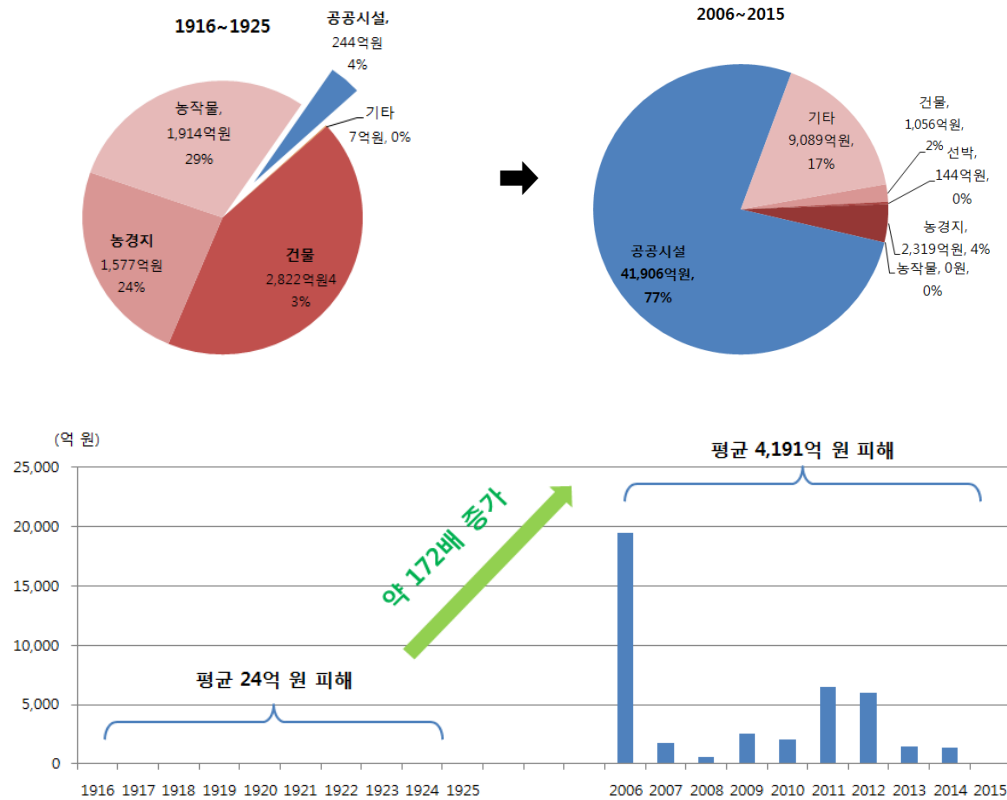
- 기상요인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은 피해금액보다 높은 금액이 소요되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의 예방이 중요
 - 2006~2015년 기상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총 5조 4,774억 원 발생, 동 기간 기상재해 피해 복구비용은 총 10조 8,348억 원 발생
 - 2006~2015년 피해 복구비용은 재산피해 대비 1.9배 이상 규모



<그림 4-3>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⁸⁾(국민안전처, 2015)

-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중 공공시설 피해 급격히 증가
 - 1916~1925년 공공시설 재산피해는 평균 24억 원으로 전체 재산 피해액의 약 4% 차지, 2006~2015년 10년간 공공시설 재산피해는 평균 4,191억 원으로 전체 재산피해 금액의 77% 차지
 - 2006~2015년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는 20세기 초반 대비 약 172배 증가

8) 재산피해액 2015년 환산금액 기준.



<그림 4-4>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액(국민안전처, 2015)

2) 영국 적응보고제도 운영 사례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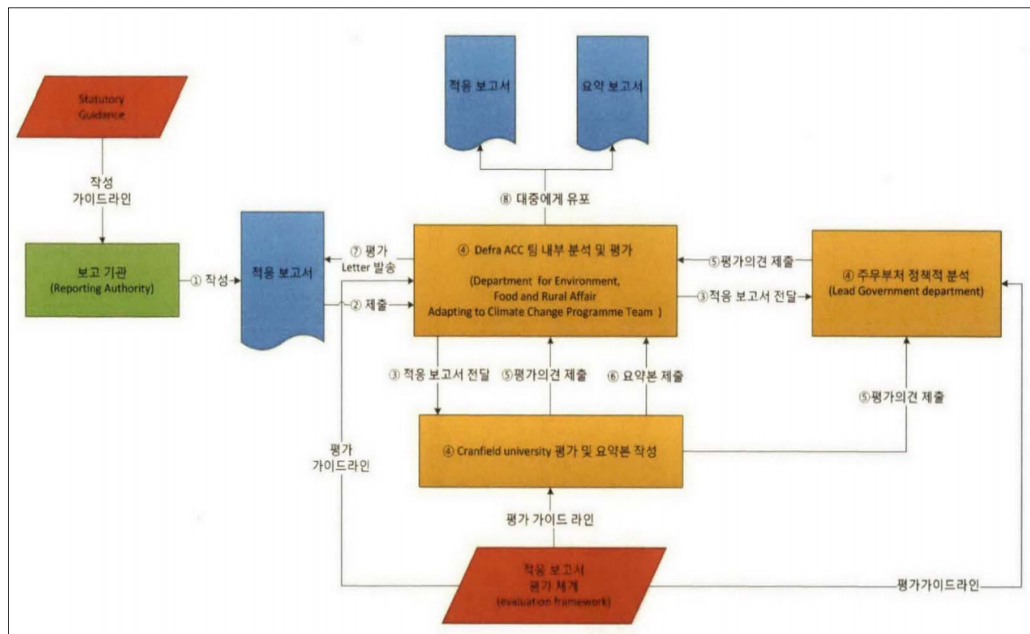
- (명칭) Adaptation Reporting Powers(ARP)
- (근거) 영국 「기후변화법」(2008) 제61조~제66조
- (목적) 공공서비스나 기반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기관들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 이해 증진 및 자체적인 적응역량 향상 도모
- (국가 차원) 주요 공공기관의 적응수준과 적응역량을 평가·관리하고 효율적 적응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적응 기관) 기후변화 위험 인식 및 적응계획 수립을 통한 자체적인 적응능력 향상
- (대상) 전력, 물, 가스, 교통, 통신 등 영국의 주요 공공서비스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기관과 공공성격의 기업 총 97개 기관(「기후변화법」 제70조⁹⁾)
- (주요 내용) 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기후변화 영향 및 리스크 평가, 적응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 적응 보고서를 준비하여 5년마다 담당 부처인 환경식품 농림부(DEFRA)의 장에게 보고
 - 기관의 기능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기후변화 영향 평가
 -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의 제안, 정책, 계획문서 작성
 -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
- (추진 경위) 1차 제출(2010.12~2011.12) 및 1차 평가보고서 발간(2012.1) → 2차 적응 보고서 제출 기간(2015~2016)
- (보고서 작성 절차 및 내용) 적응보고서 작성 지침(수립 3단계)
 - [기후변화 영향 및 리스크 평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기후변화가 기관의 운영과 기능에 미칠 영향을 평가
 - [적응계획 수립] 1단계에서 도출된 리스크의 우선순위 목록을 기반으로 기관 차원의 적응대책들을 수립. 이때 기관이 단기적·즉각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적응 옵션들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시스템이나 프레임 수정해야 하는 방안들을 구분하고 이행계획을 수립
 - [적응계획 이행] 적응계획이 보고제도를 위해 형식적으로 수립된 것이 아니라 기관의 일상적 운영과 기능에 포함하여 이행
- 적응보고서 필수 포함 사항
 -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보고기관의 기능/역할

9) “bodies with functions of a public nature such as utility companies” , “companies those responsible for providing services and infrastructure to the public” .

- 보고기관의 기능과 관련된 현재와 미래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시 사용된 방법 (approach)
- 보고기관의 기능 및 목적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에 대한 요약
-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방안 요약
- 불확실성과 사용된 가정(uncertainties/assumptions)
- 적응의 방해요소
- 모니터링과 평가
- (관련 기관 및 역할)
 - (DEFRA ACC팀) 전체적인 평가 절차 운영,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해당 기관에 Letter 형식으로 보고기관에 전달
 - (공공기관 소관부처)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고서를 평가하여 부족한 정보 및 이행 시 방해요소 파악
 - (Cranfield University Risk Center) 보고서 평가를 위한 별도지침(평가지침) 마련, 각 보고서의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방법론 및 결과들을 정성적·정량적 평가
- (운영 절차 및 체계)
 - ① DEFRA에서 적응보고 작성 가이드라인을 보고기관에 제공
 - ② 보고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응보고서 및 적응보고서 요약본을 DEFRA에 제출
 - ③ DEFRA는 관련 주무부처와 Cranfield University에 각 기관의 적응보고서 전달
 - ④ DEFRA 기후변화적응팀에서 내부 분석 및 평가
 - ⑤ 관련 주무부처와 Cranfield University에서 평가의견 및 요약본을 작성해 DEFRA에 제출
 - 이때 DEFRA와 Cranfield University에서 공동적으로 수립한 적응보고서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 수행
 - 관련 주무부처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고서를 평가, 부족한 정보 및 대책 이행 시 방해요소에 대한 파악을 실시함

- Cranfield University의 리스크 센터에서는 각 보고서의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방법론 및 결과들을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
- ⑥ 평가 결과, 보고서의 수준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적응보고서 보완을 위한 3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 ⑦ 평가기준을 통과한 적응보고서 및 요약본은 대중에게 유포



<그림 4-5> 영국 적응보고제도 구성 및 절차(환경부·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2012)

- (ARP 효과) 1차 ARP 결과로 가장 큰 성과는 기후변화 적응인식 확산을 강조
 - 가장 큰 성과는 적응에 대한 인식 확산
 - 보고서 작성 과정을 통해 개별 기관의 적응역량 강화
 - 영국 사회 전반의 적응 수준 향상
 - 기후변화를 리스크 관리 과정과 연계, 이와 관련한 개별 기관의 자료 확보
 -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적응보고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공공부문 조직들이 현재 어느 정도의 적응역량을 지니고 있는지 평가 및 관리 가능
 -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인 정보의 제공,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및 리스크 평가방법론, 국가가 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 등이 제공
 -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시 주요 분야의 기후변화 리스크 지도 작성에 활용
- 주요 공공시설의 기후위험 관리 지원
 - 정부는 국가의 주요 서비스와 인프라의 기후변화 준비 정도를 평가하고,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파악
 - 공공부문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실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발생할 때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을 줄이고 피해와 복구비용을 최소화함

다. 녹색법상 기후변화 적응 위계 재정립

1) 녹색성장 개념

- 녹색성장위원회(2009)에 따르면 녹색성장의 개념은 경제성장을 하되, 경제성장의 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시키자는 개념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제성장 촉구, 경제성장과 환경파괴의 탈동조화(Decoupling) 실현을 의미함
- 녹색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의미함

⇒ 기본적으로 '환경친화적 경제성장' 을 추구하되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환경훼손과 함께 강조

○ 녹색성장 국가전략(2009)에서 제시하는 녹색성장을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핵심 성공 요소는 다음과 같음

- (전략 1.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전략 2.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 (전략 3.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 국가 구현

⇒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요소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함께 명시

○ 그러므로 현행 정책상의 녹색성장 개념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개념을 함께 포함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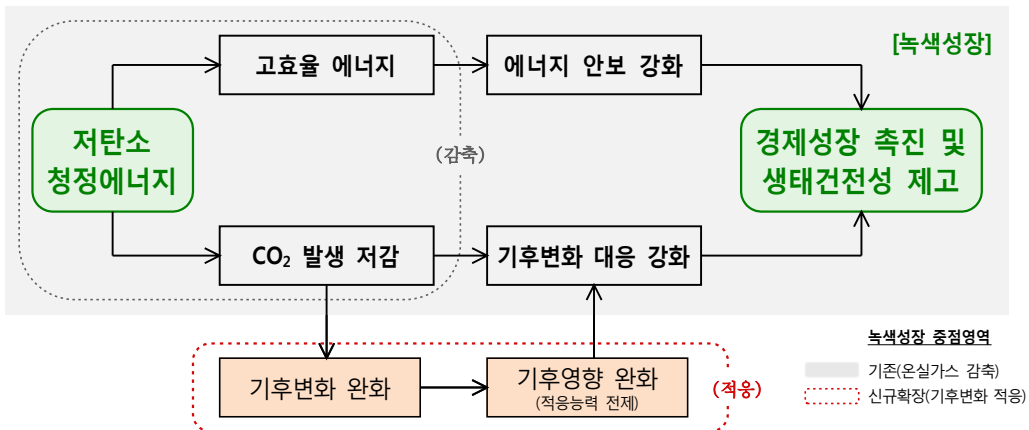
- 단, 녹색성장을 위한 현행 법령은 '저탄소' 의 '온실가스 감축' 이 주된 내용이므로 현행 법 개정 시 '적응'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강화 필요

2) 현행 법령 개정에 있어서 '기후변화 적응' 개념의 위치 설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작성되어 있음

-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녹색법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녹색기술산업을 통한 경제발전' 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두 가지를 함께 포함

- 여기서 '기후변화 대응' 은 녹색법 제38조 제5항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는 '기후변화 적응' 의 개념을 포함
- 현행 법령 개정에 있어서 '기후변화 적응' 개념의 위치의 명확한 설정을 위해 기존 용어에 대한 재정의 또는 확장이 필요함
-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저탄소' 는 현재 명시된 개면 그대로 유지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 으로 정의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포괄하는 개념의 '녹색성장' 은 현재 명시된 수준에서 개념을 확장 적용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 으로 재정의 필요



<그림 4-6>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확장

주: 유승직(2009), 물리학과 첨단기술 2009.6월호 「기후변화와 기술개발의 역할: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한국물리학회지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보완

2. 녹색법상 개정 필요 조문 검토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전체 7개 장과 6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제18조 삭제), 이 중 기후변화 적응법 강화를 위하여 적응 관련 항목 도입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조문은 49개임(녹색성장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
- 기후변화 적응 항목 도입 시 검토가 필요한 49개 조문 중 7개 조문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항을 작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적응대책 등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해서는 제48조 1개 조문에서만 그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항을 작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문(7개): 기후변화대응 기본원칙(제38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제40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추진(제48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제52조), 친환경농림수산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제55조), 국제협력의 증진(제61조), 국가보고서 작성(제63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자·국민적 역량을 모아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가격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 방식의 합리적 규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
3.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나노·생명공학 등 첨단기술 및 융합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한다.
4.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시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감축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비한다.
5. 대규모 자연재해, 환경생태와 작물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제40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①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2.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3.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4.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대응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의 감사·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2조(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과 가뭄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
2. 수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수질개선
3. 물 절약 등 수요관리, 빗물 이용·하수 재이용 등 순환 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
4.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복원
5. 수질오염 예방·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

제55조(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① 정부는 에너지 절감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화학비료·자재와 농약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유기농 농수산물 및 나무제품의 생산·유통 및 소비를 확산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지의 보전조성 및 바다숲(대기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하여 바다 속에 조성하는 우뚝가 사리 등의 해조류군을 말한다)의 조성 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산림의 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하여 식량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1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국외진출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 공신력 있는 기후변화대응 평가에 대한 국가별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및 평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3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 총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① 정부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별·권역별로 태양력·풍력·조력 등 산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이에 관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감사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생물자원 및 수자원 등의 변화 상황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수질, 보건, 농수산물, 산림, 해양,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국민·사업자 등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활동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에 대한 감사·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생활운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시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매년 그 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3항에 따른 실적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기후변화 적응 항목 도입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49개 조문 검토 결과(연구진 검토 및 전문가 포럼 의견수렴) 12개 조문이 적응항목 도입 시 수정·보완 등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표 4-1)
- 수정·보완 필요 조문: 정의(제2조), 지자체 책무(제5조), 사업자 책무(제6조), 국민책무(제7조), 위원회 기능(제15조), 녹색경제·산업 구현 기본원칙(제22조), 기업 녹색경영 촉진(제25조), 정보통신기술 보급·활용(제27조), 금융 지원 및 활성화(제28조), 기후변화 대응 기본원칙(제38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추진(제48조),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제59조)

<표 4-1> 녹색법상 기후변화 적응 관련 조문 현황 및 개정 필요 조문

구분	총조문 (개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조문		
		개수	세부 내용	개정
제1장 총칙(1~8조)	8	7	목적(1조), 정의(2조) , 기본원칙(3조), 국가 책무(4조), 지자체 책무(5조) , 사업자 책무(6조) , 국민 책무(7조)	2조, 5조, 6조, 7조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9~13조)	5	5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9조), 중앙행정기관 추진계획(10조), 지자체 추진계획(11조), 추진상황 점검평가(12조), 정책 의견제시(13조)	-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등 (14~21조)	7 (18조 삭제)	7	녹색위 구성·운영(14조), 위원회 기능(15조) , 회의(16조), 분과위원회(17조), 공무원 파견요청(19조), 지방녹색위 구성·운영(20조), 녹색성장책임관 지정(21조)	15조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22~37조)	16	14	녹색경제·산업 구현 기본원칙(22조) , 육상·지원(23조), 기업 녹색경영(25조) , 녹색기술 촉진(26조), 정보통신 기술(27조) , 금융(28조) , 투자회사(29조), 조세제도(30조), 지원특례(31조), 표준화인증(32조), 중소기업 지원(33조), 집적지·단지조성(34조), 일자리 창출(35조), 국제규범대응(37조)	22조, 25조, 27조, 28조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38~48조)	11	3	기후변화대응 기본원칙(38조)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40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추진(48조)	38조, 48조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49~59조)	11	9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49조),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50조), 녹색국토관리(51조), 물관리(52조), 농림수산·탄소흡수원(55조), 생태관광(56조), 생산·소비문화(57조), 녹색생활운동(58조),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59조)	59조
제7장 보칙(60~64조)	5	4	자료제출 요구(60조), 국제협력의 증진(61조), 국회보고(62조), 국가보고서 작성(63조)	-
계	63	49		12

3. 적응항목 도입 검토 및 녹색법 구성체계 개선

- 현재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 체계에서 제3장에서 도출된 기후변화 적응 항목을 도입할 수 있는 조문을 검토하고 개정안을 <표 4-2>와 같이 구성함
 - 제1장 총칙: 적응항목 개요에 해당하는 용어 정의, 책무, 주류화 원칙 등
 -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등: 적응위원회 관련 사항
 - 제4장 녹색성장의 추진: 적응산업, 보험, 기금
 - 제5장 저탄소사회의 구현: 적응원칙 및 기후변화 적응 항목 중 과학기반, 적응전략 및 계획, 적응 확산·촉진, 모니터링, 이행/역량기반 등 관련 대부분 항목
 -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교육·홍보
 - 제7장 보칙: 국내외 협력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제48조는 가장 많은 항목을 포함하는 조항으로 기존 법령체계를 유지하면서 제48조, 제48조의1 등으로 확대하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표 4-2> 녹색법상 기후변화 적응 항목 도입 검토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		적응 항목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용어정의(2조), 기본원칙(3조) ◦ 국가 책무, 지자체 책무(5조), 사업자 책무(6조), 국민 책무(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온실가스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정의 - 주체별 책무 - 주류화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추진계획 수립·시행 ◦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 ◦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변경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추진계획의 수립·보고 ◦ 국가전략 등 추진상황 점검·평가 ◦ 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평가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		적용 항목
	법률	시행령	
제3장 녹색성장 위원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회 기능(15조), 회의소집, 분과위원회, 파견 요청 지방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녹색성장 책임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수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회의 소집, 분과위원회 녹색기술 관련 자원의 배분 병행 등 심의 지방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 적응위원회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경제·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22조), 육성·지원 자원순환, 기업 녹색경영(25조), 녹색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 촉진, 정보통신기술 보급·활용(27조), 금융 지원 및 활성화(28조),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 조세제도 운영 녹색기술·산업 지원/특례, 표준화 및 인증, 집적지 및 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지원 규제 완화, 국제규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산업 투자회사의 설립, 재정 지원 및 운영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 중소기업의 녹색기술·녹색경영 지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사업 추진기관 	- 적응산업/보험 등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대응 기본원칙(38조)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40조)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변경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 에너지기본계획의 변경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 	- 적응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 온실가스 감축 조행동 촉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보고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관리업체 지정 기준,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등록부 관리, 검증기관, 명세서의 보고·관리 절차 및 공개 조기감축실적 및 외부감축실적의 인정 명세서의 보고·관리절차 등, 명세서 공개 등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자동차의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관리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		적용 항목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추진 (4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 (3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감시·예측 - 기후시나리오 - 영향 모니터링 - 사회·경제 시나리오 - 영향/취약성/리스크 평가 ◦ 적응전략/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책위상 - 적응대책 수립·시행 - 실적점검/평가 ◦ 적응확산·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화 - 취약계층/지역 관리 지원 - 공공기관 적응보고 - 산업계 적응지원 ◦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평가보고서 - 이행보고서 - 진척평가보고서 ◦ 이행/역량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기금 등 행·재정지원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녹색국토의 관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관리,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녹색건축물의 확대, 친환경 농림수산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생태관광 촉진 ◦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문화 확산, 녹색생활운동 촉진,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5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 녹색국토의 관리 ◦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 녹색건축물의 기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홍보
제7장 보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제출 등의 요구 ◦ 국제협력의 증진 ◦ 국회보고 ◦ 국가보고서 작성 ◦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협력

주: 기울임 / 밑줄 / 굵은 표시된 항목은 개정 필요 조항.

4. 조문별 개정안

가. 제2조(정의)

- (개정 이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증가로 국제사회에서 적응의 중요성 강조 및 관련 논의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기후변화 적응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이 필요함
 -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후 2030년까지 설정된 지속가능목표(SDGs)에 기후변화 영향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추진(Goal13)이 포함됨
 - 파리협정(COP21, 2015.12)에서는 적응을 감축과 동등하게 다루고 실질적 이행방안 논의를 위한 내용이 포함됨
- (개정 내용) 제2항 ‘녹색성장’ 정의 규정의 구체화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주요 용어인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취약성’ 등의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
 - 기후변화의 긍정 및 부정적 영향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기후변화 적응 개념 반영
- (쟁점 사항)
 -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용어 정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기후변화 적응 용어 정의를 법률에서 정할 것인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인지가 논의될 수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용어 정의만 할 것인지, ‘영향’, ‘취약성’, ‘리스크’, ‘주류화’ 등 관련 개념에 대하여 추가적인 용어 정의도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 추가 용어 정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법상 포함되지 않은 용어 중심으로 삽입하여 타법에서의 정의와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입법 효과) 기후변화 정책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음

○ (신·구 조문대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 률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p> <p>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p> <p>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p> <p>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p>	<p>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에 대응하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p> <p>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u>기후변화 적응기술</u>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과 <u>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u>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p> <p>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u>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u>을 최소화하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p>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 률 개 정 안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과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u>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u> ,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 률 개 정 안
<p>1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p> <p>13.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p> <p>1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p> <p>15. “에너지 자립도”란 국내 총소비에너지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 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지분 취득을 포함한다)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p> <p>-</p>	<p>16. “기후변화 적응”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u>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u></p>

○ 관련 법 및 참고자료

구분	관련 내용
기상법	제2조 (정의) 6. “기후”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기상현상의 평균상태를 말한다. 7. “기후변화”란 인간 활동이나 자연적인 요인으로 기상현상이 평균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4. “지구온난화”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말한다. 15. “기후변화”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기후변화 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조약	제1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1.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라 함은 기후변화에 기인한 물리적 환경 또는 생물상의 변화로서 자연적 생태계 및 관리되는 생태계의 구성·회복력 또는 생산성, 사회경제체제의 운용 또는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대하여 현저히 해로운 효과를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변화”라 함은 인간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인하여 지구 대기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상당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 기후 가변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를 말한다. 3. “기후체계”라 함은 대기권, 수권, 생물권과 지리권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의 총체를 말한다.
기후변화 적응전략 종합연구 (KEI, 2013)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기후변화 적응”이란 지역사회와 생태계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② “적응보고”란 참여 기관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참여 기관의 적응 영향평가 및 리스크 평가를 통해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 대응기본 법(초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농도가 증가함으로써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변화”란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하여 화석연료의 이용 및 인간의 활동으로 일어나는 상당 기간 관측된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3. “기후변화대응”이란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다양한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및 영향 최소화 등을 말한다. 10. “기후변화 영향”이란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 및 환경·경제·사회에 미치는 모든 변화의 결과를 말한다. 11. “기후영향평가”란 기후변화에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과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의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12. “기후변화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부정적인 역할을 줄이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구분	관련 내용
지구온난화 방지대책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구온난화” 라 함은 사업 활동 혹은 기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변화” 라 함은 사업 활동 혹은 기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지구 대기 조성이 변화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온 자연적인 기후 변동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6. “지구온난화예의 적응대책” 이라 함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환경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적·의도적인 행위를 말한다.
기후변화 대책기본 법(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구온난화” 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변화” 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지구대기 조성이 변화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6. “기후변화대책” 이라 함은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경제적·환경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영향 최소화를 포함한다. 10. “기후변화과학” 이라 함은 기후변화의 감시, 탐지, 분석 및 예측을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영향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당사자이자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 및 기회로 활용하는 주체로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있어서 적응 관련 사항 명시가 필요함
- (개정 내용)
 - 단기적인 성격이 강한 대책 용어를 정책 으로 수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후변화 정책의 특성을 반영함
 -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을 추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수립·시행에 있어서 기후변화 적응 관련 고려사항을 구체화함
- (쟁점 사항) 앞의 제2조 2항 ‘녹색성장’ 개념을 적응까지 확장하여 본다면 소극적인 대응 측면에서 개정이 불필요할 수 있음
- (입법 효과) 기후변화 정책에 있어서 적응부문 강화
- (신·구 조문 대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 률 개 정 안
<p>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u>포함한 각종 소관 정책</u>을 수립·시행할 때 <u>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 영향 등</u>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p>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 률 개 정 안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관련 법 및 참고자료

구분	내용
기후변화대 응 기 본 법 (초안)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기후변화대응 대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주민 또는 민간단체들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변화 대응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지구온난화 방지대책법 (안)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그 지역의 사업자 또는 주민들이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증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기후변화대 책 기 본 법 (안)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기후변화대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그 지역의 사업자 또는 주민들이 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및 흡수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 (개정 이유) 산업부문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은 국가경제 및 GDP 손실로 이어지며 이는 기업의 이익, 매출,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업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고려가 필요함
- 영국은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에 근거하여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영향 및 리스크 평가, 적응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적응보고제도(Adaptation Reporting Power)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기업투자에 있어서 기후변화가 기업의 업무 연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시에 관한 SEC의 지침(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을 채택하여 상장회사들로 하여금 기후변화 리스크를 공시토록 권고함¹⁰⁾
- (개정 내용) 사업자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기후변화 원인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취약성을 낮추도록 적응 관련 사항을 구체화함
- 사업자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관리 책무를 추가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보고제도 도입 등 고려
- (쟁점 사항) 없음
- (입법 효과) 기후변화 정책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간 균형 도모,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 차원에서의 자발적 참여 유도

10) 환경부·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2013), "산업계 및 공기업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리스크 관리 도구 개발 및 시범적용", p.7.

○ (신·구 조문 대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 률 개 정 안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u>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취약성을 낮추며</u>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관련 법 및 참고자료

구분	내용
기후변화대응 기본법(초안)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변화 대응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지구온난화 방지대책법(안)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억제 대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안)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 대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라. 제7조(국민의 책무)

- (개정 이유) 제2조 6항에 따른 녹색생활은 온실가스 감축이 주된 내용으로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적응 부문에서 협조와 노력 강조가 필요함
- 기후변화 적응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는 기후 관련 사건(홍수, 폭염, 가뭄, 한파, 태풍 등)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일상생활에서 적응을 실천하거나 생활화하고 정책 과정상 참여 및 정책에 협력 필요
- (개정 내용)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도모함
- (쟁점 사항) 없음
- (입법 효과) 기후변화 정책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간 균형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
- (신·구 조문 대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 률 개 정 안
제7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국민은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력하여야 한다.

○ 관련 법 및 참고자료

구분	내용
기후변화대응 기본법(초안)	제7조(국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국민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정책의 수립, 집행 및 평가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후변화대응 대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지구온난화방지 대책법(안)	제6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그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온실가스 배출억제 대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안)	제6조(국민의 참여와 협력) ① 모든 국민은 지구온난화를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정부의 기후변화대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 등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마. 제15조(위원회의 기능)

- (개정 이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일관성 유지가 필요함
- (개정 내용)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 추가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함
- (쟁점 사항) 없음
- (입법 효과) 「녹색성장기본법」상 관련 계획 심의 체계를 명확하게 함

○ (신·구 조문 대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 률 개 정 안
<p>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목표 관리, 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7.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8.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국제협력, 교육·홍보, 인력양성 및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9.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등의 고충 조사, 처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u>국가기후변화 적응계획</u>에 관한 사항

바. 제22조

- (개정 이유) 녹색경제·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 원칙상 적응 관련 내용을 포함, 이하 녹색산업/기술에서 적응 관련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함
- (신·구 조문 대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 률 개 정 안
제22조(녹색경제·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 원칙) ① 정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경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금융·산업·과학기술·환경·국토·문화 등 다양한 부문을 통합적 관점에서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새로운 녹색산업의 창출,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으로의 전환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저탄소 녹색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및 배려하여야 한다.	제22조(녹색경제·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 원칙) ① 정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u>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u>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사. 제25조

- (개정 이유) 기업 경영 차원에서 적응 관련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신·구 조문 대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 률 개 정 안
<p>제2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①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2.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산림 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3.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2.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u>기후변화 적응</u>, 산림 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3.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아. 제27조

- (개정 이유) 기후변화 관련 영역에서 IT, 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신·구 조문 대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 률 개 정 안
제27조(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활용) ① 정부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반 확대 2.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의 개발·보급 3. 정보통신 산업 및 기기 등에 대한 녹색기술 개발 촉진 	제27조(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활용) ① 정부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u>기후변화 대응</u> 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반 확대 2.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의 개발·보급 3. 정보통신 산업 및 기기 등에 대한 녹색기술 개발 촉진

자. 제28조

- (개정 이유)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적응기금의 확대 등을 반영하여 기후변화 적응뿐 아니라 대응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기금의 설치와 운영을 추진토록 함
- (신·구 조문 대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 률 개 정 안
<p>제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4.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등의 강화 및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5. 탄소시장(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흡수 실적 등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 및 거래 활성화 등 	<p>제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4.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등의 강화 및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5. 탄소시장(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흡수 실적 등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 및 거래 활성화 등 6.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운영 등

차. 제38조(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 (개정 이유) COP21 파리협정¹¹⁾ 및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¹²⁾에 명시된 기후변화 적응 원칙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문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함
- (개정 내용) 기후과학에 근거한 적응 추진, 기존 정책·제도 내 적응 통합, 기후변화 취약계층 우선 보호, 기후정보 제공 투명성 등을 명시함
 - 기후변화 적응의 상위 개념인 기후변화 대응에 기회성 활용이라는 적응의 개념 추가
- (쟁점 사항) 완화와 적응이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에 기여를 위함이나 녹색법상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녹색성장의 하위 개념의 위상을 지니므로 현 녹색법 개념 체계 전제로는 원칙상 지속가능발전은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입법 효과) 기후변화 적응 원칙을 보강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추진의 방향성을 명확히 함
- (신·구 조문 대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 률 개 정 안
<p>제38조(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국민적 역량을 모아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온 	

11) [Paris Agreement 제7조 제5항] ① country driven, ② gender responsive, ③ participatory and transparent approach, ④ vulnerable groups/communities/ecosystems ⑤ based on best available science/traditional knowledge etc, ⑥ integrating adaptation into relevant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policies/actions.

12)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기후변화 적응 원칙] 지속가능발전 부합, 취약계층 고려, 과학기반, 기존 정책 연계 통합적 접근, 이행체계 강화 및 참여 활성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 률 개 정 안
<p>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가격 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 방식의 합리적 규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p> <p>3.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정 보통산·나노생명공학 등 첨단기술 및 융합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한다.</p> <p>4.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시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감축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비한다.</p> <p>5. 대규모 자연재해, 환경생태와 작물 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p>	<p>6.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관련 정책 수립·추진 시 기후변화 위험의 사전예방적 관리와 대비를 위해 노력한다.</p> <p>7.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p>

○ 관련 법 및 참고자료

구분	내용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p>(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에 부합 2. 기후변화 취약계층 고려 및 적응대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3. 과학적 근거·지식 및 기술 기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대응 4.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및 통합적 접근으로 시너지 창출 5. 정책이행 체계 강화 및 이해당사자 참여 확대·소통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기본법 (초안)	<p>제3조(기후변화대응의 원칙)</p> <p>기후변화대응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후변화대응은 미래 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현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2. 기후변화대응은 기후과학이 제시하는 근거에 기초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범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3. 기후변화대응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해야 한다. 4. 기후변화 대응은 단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표를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5. 기후변화 대응은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과 사회경제적인 능력에 비추어 부담을 나눠 가지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6. 기후변화대응은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7.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투명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카. 제48조

- (체계 구성) 녹색법 제48조는 기존 1개 조문을 <표 4-3>과 같이 제48조의8까지 확대하여 구성하고 기존 법률 제48조와 시행령 제38조를 개정함
- 다만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관련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2(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중 센터 지정에 관한 내용을 녹색법으로 이관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 센터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은 환경부 장관 고시 등으로 변경 추진

<표 4-3> 녹색법 제48조 개정(안) 세부 구성

구분	관련 항목	구성(안)	개정 단위
총괄	-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계획의 추진) ※ 제48조의 세분화를 위한 총괄	법률
과학기반 체계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감사예측 영향 모니터링 및 평가 영향취약성·위험 평가 적응 정보체계 	제48조2(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 - 기후 감사예측 및 기상정보 - 영향 조사분석 연구, 기술개발, 관련 정보구축 등 -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및 위험 평가	법률
기후변화 적응전략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적응계획 수립·시행 	제48조의3(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시행 등) - 국가 적응계획 - 중앙부처 적응 세부시행계획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적응계획 수립·시행 	제48조의4(지자체 적응계획 수립·시행 등) - 광역 및 기초지자체 적응계획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적점검 및 평가 계획이행 보고서 	제48조의5(적응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 - 종합평가 - 중앙부처 세부시행계획 이행 자체점검 - 광역지자체 적응계획 이행 자체평가	법률, 시행령
기후변화 적응 확산 및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적응보고 	제48조의7(공공기관 적응보고)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응산업 산업계 적응 지원 	※ 제22조 녹색경제·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상 적응 관련 내용을 포함, 이하 녹색산업/기술에서 적응 관련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응 주류화 	※ 제5조 지방자치단체 책무, 제38조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에 관련 내용 추가하여 반영	-
적응대책 이행 및 역량강화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제48조의8(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응위원회 	제48조의6(기후변화적응 정책협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응기금 	※ 제28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에서 기후변화대응 기금으로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반영	-

○ (신·구 조문 대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개 정 안	
	법률	시행령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④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계획의 추진)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① 정부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별·권역별로 태양력·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이에 관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48조의2(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 ① 정부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별·권역별로 태양력·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이에 관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생물자원 및 수자원 등의 변화 상황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 및 국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생물자원 및 수자원 등의 변화 상황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개 정 안	
	법률	시행령
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수질, 보건, 농·수산물, 산림, 해양,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p>③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¹와 협의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수질, 보건, 농·수산물, 산림, 연안 및 해양,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분석하고, 현재 및 미래의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5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조사·분석, 기후변화 위험 평가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④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p>제48조의3(국가 적응계획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2제3항의 영향 및 취약성, 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이하 “국가 적응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38조의1(국가 적응대책의 변경) 법 제48조의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이하 “국가 적응계획” 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p>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개 정 안	
	법률	시행령
<p>[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생활운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기후변화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위험에 관한 사항 4.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적응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생활운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개 정 안	
	법률	시행령
<p>[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소관사항을 <u>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세부 시행계획(이하 “중앙부처 적응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p>	<p>제48조의4(지자체 적응계획 수립·시행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의 최소화 및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적응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기후변화 적응계획(이하 “지자체 적응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38조의2(지자체 적응계획 수립·시행 등) ① 지자체 적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별 및 시·군·구(이하 시·군·구)별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과 기후변화 영향분석,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 전략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적응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과제 및 연차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계획의 집행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개 정 안	
	법률	시행령
		<p>5. 그 밖에 지자체 적응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지자체 적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 적응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과제 내용 일부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시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매년 그 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p>	<p>제48조의5(적응 추진상황 점검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적응계획의 이행사항 및 주요 성과 등 적응 추진 상황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여 5년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 및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부처 적응 세부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8조의4(국가 적응계획 등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부처 적응 세부시행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p>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개 정 안	
	법률	시행령
<p>[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p> <p>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3항에 따른 실적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u>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적응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38조의5(지자체 적응계획 추진 상황의 점검·평가 등) ① <u>시·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3항에 따라 시도 적응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u></p> <p>② <u>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의 적응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u></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p>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개 정 안	
	법률	시행령
	<p><u>양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제48조의6(기후변화 적응 정책협의회)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 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중앙부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48조의5 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p> <p>⑤ 정부는 국민·사업자 등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활동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48조의7(공공기관 적응보고)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공공시설 등을 보유·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기후변화 위험 평가 및 적응대책 등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p>	<p>제38조의6(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 ① 법 제48조의6 제1항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 등을 보유·관리하는 기관”은 관할 중앙행정기관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② 공공기관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 개요 및 기후변화 현황 2. 기후변화 전망 및 영향 분석 3.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결과 종합분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개 정 안	
	법률	시행령
	<p>하여 환경부장관과 공공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 대상 및 내용 등 공공기관 적응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소관 기관별로 기후변화 영향 및 리스크 평가,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적응수준 및 적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해야 한다.</p>	<p>4. 적응 세부시행계획</p> <p>5. 그밖의 적응대책의 이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p>
<p>대기환경보전법</p> <p>제9조의 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p>	<p>제48조의8(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국가의 적응역량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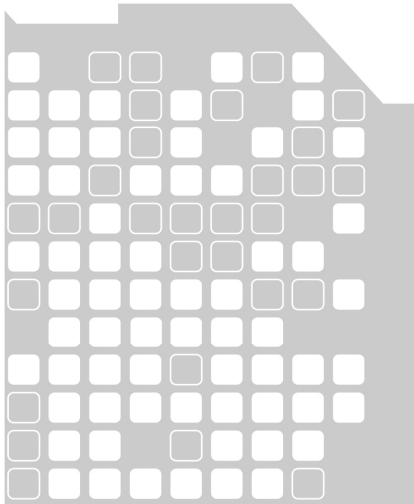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개 정 안	
	법률	시행령
<p>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지정·사업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타. 제59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 (개정 이유) 기후변화 영향은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실질적인 행동 촉구를 위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의 강화가 필요함
- (개정 내용)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홍보 노력 및 민간의 적응 교육 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쟁점 사항) 녹색성장 내 적응개념 포함을 전제로 하므로 제1항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입법 효과) 기후변화 적응 추진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 (신·구 조문 대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 률 개 정 안
<p>제59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저탄소 녹색 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 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녹색생활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p> <p>④ 공영방송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공익 광고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 률 개 정 안
	<p>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홍보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 등이 관련 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 기후변화 적응은 기존 교토의정서 기후변화 규범과 정책 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비교해 저평가 되어 그 중요도에 비하여 차지해온 비중이 매우 낮았던 것에 반해 신기후체제 출범과 더불어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공식적으로 다루어짐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최상위 법제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2010년 1월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시행 이후 2016년까지 총 4차례 개정되었으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조문은 제정 당시의 1개 조문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실정임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행 기후변화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제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차원의 접근을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수정·삭제하는 형태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함
 - 파리협정 채택·발효에 따른 국내 기후변화 적응법 체제의 강화 필요성,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의 성공적 추진과 이행, 공공기관 보고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시
- 기후변화 적응이 강화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 법제 마련에 있어서 필요한 항목과 체계를 기본개념·원칙 등 기본 전제와 과학기반 마련→정책 수립→정책 시행→모니터링의 적응정책 과정과 적응을 위한 이행·역량기반을 고려하여 설정함
 - 적응법제 항목과 체계 도입의 전제로는 기존 녹색법상 기후변화 적응 위계를 재정립하여 현행 법령상 기후변화 적응 개념의 위치를 재설정

- 마련된 기후변화 적응법제 체계와 항목을 바탕으로 현행 녹색법의 전체 7개 장과 63개 조문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파악하고 현행 12개 조문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이 중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항목이 포함되고 다루어지는 제48조는 제48조의1 등으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필요한 조문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함께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함
-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고 약 7개월간 총 5차의 포럼 개최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하여 마련
-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마련된 개정안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선적으로 도입과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본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된 기후변화 적응 관련 조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으나, 현행 녹색법 개정뿐 아니라 시의적 요구에 따라 기후변화법, 기후변화 적응법 등의 다양한 형태로 기후변화 적응관련 사항을 법제에 도입하는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음

참고문헌

- 강주연(2016), “신기후체제 적응 논의 동향”, 「기후변화학회 특별세션」 발표자료(2016.12.1./제주ICC).
- 국립해양조사원(2014), “해수면 변동 정밀분석 및 예측 연구” .
- 국민안전처(2015), “재해연보” .
- 국회 기후변화정책연구소(2016), “기후변화 적응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 국회 기후변화정책연구소(2016), “해외 기후변화 적응법제 현황 및 국내 개선방안의 비교·분석” .
- 국회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빅에스크네트워크(2014), “새로운 기후변화법 제정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자료
집(2014.7.7/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기상청(2012),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
- 김현준(201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성질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법연구 39(2): 489~517.
- 유승직(2009), “기후변화와 기술개발의 역할: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물리학과 첨단기술」 6월호
- 이준서(2014), “기후변화적응법 의 제정을 위한 관련 법체계의 검토”, 「기후변화 적응 강화를 위한 법제 워크숍
(2차)」 발표자료(2014.5.21/ KEI).
- 환경부·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2012), “공공기관 적응역량평가시스템 구축” .
- 환경부·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2013), “기후변화 적응전략 종합연구” .
- 환경부·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2013), “산업계 및 공기업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리스크 관리 도구 개발
및 시범적용” , p.7.
- 환경부·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2014), “기후변화 적응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연구” .
- Michal Nachmany, Sam Fankhauser, Jana Davidová, Nick Kingsmill, Tucker Landesman, Hitomi Roppongi,
Philip Schleifer, Joana Setzer, Amelia Sharman, C. Stolle Singleton, Jayaraj Sundaresan and Terry
Townshend (2015), “The 2015 Global Climate Legislation Study. A Review of Climate Change
Legislation in 99 Countries Summary for Policy-makers” .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개정] 및 시행령[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Munich Re, <https://www.munichre.com/en/homepage/index.html>.

[부록]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2.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1~5차) 결과
3. 기후변화 적응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설문) 결과
4. 해외 기후변화 적응법 사례: 멕시코, 필리핀, 미국

[부록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전문
- 개정 필요성: 녹색법 개정 추진의 기본방향과 부합하여 개정이 필요한 조문 [○ : 개정 필요 / × : 개정 불필요]
 - 적용 관련성: 녹색성장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 기후변화 적응과 직접적으로 관련 [○ : 관련 있음 / × : 관련 없음]
-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법률 제48조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제시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용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	○	○	제2조(정의)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에 대응하고 청정 에너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제2조(온실가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PFCs)는 별표 1과 같다.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p> <p>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p> <p>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업·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p>			<p>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p> <p>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기후변화 적응기술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과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p> <p>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업·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환경을 개</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p> <p>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p> <p>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p>			<p>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과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p> <p>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p> <p>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밖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p> <p>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p>				

기후변화 적응 법령안 마련 및 법제화 지원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1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p> <p>1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p> <p>13.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p> <p>1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15. “에너지 자립도”란 국내 총소비 에너지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지분 취득을 포함한다)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16. “기후변화 적응”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제3조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정부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용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한다.</p> <p>2. 정부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 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추진한다.</p> <p>3. 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p> <p>4.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p> <p>5. 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6. 정부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p> <p>7. 정부는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제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租稅) 체계와 금 융체계를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 으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 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 경우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 도록 고려하여야 한다.</p> <p>8.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 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저탄소</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용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p> <p>9.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동향(動向)을 조기에 파악·분석하여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p>				
제4조	<p>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녹색성장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p>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국민,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에너지와 자원의 위기 및 기 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 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 협상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기술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5조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 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 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 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	○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 책을 포함한 각종 소관 정책을 수립·시 행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용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및 기후변화 영향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 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 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	○		
제6조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 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	○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 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향과 취약성을 낮추며 녹색기술 연구 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7조	제7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국민은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 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	○	○		

기후변화 적응 법령안 마련 및 법제화 지원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적용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8조	<p>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법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p> <p>② 저탄소 녹색성장법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3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및 제9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p>	×	×	<p>④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력하여야 한다.</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9조	제9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① 정부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녹색성장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녹색성장국가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녹색경제 체제의 구현에 관한 사항 2.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 정책, 에너지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4. 녹색생활, 제51조에 따른 녹색국토,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 등에 관한 사항	○	×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변경)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의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용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5. 기후변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재원조달, 조세·금융, 인력 양성, 교육·홍보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③ 정부는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제10조	<p>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성장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	×		<p>제5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또는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전략</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바에 따라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및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p> <p>1.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국내외 동향,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p> <p>2.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비전과 정책방향,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p> <p>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p> <p>4. 그 밖에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제6조(중앙추진계획의 보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용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 2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 획을 보고받았을 때에는 국가전략 및 5 개년 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등을 심의 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 당 기관의 중앙추진계획 및 관련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 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 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	-----------	---

구분	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11조	<p>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 · 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p>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p> <p>1.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p> <p>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p> <p>3. 연차별 추진계획</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4.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p> <p>5.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p> <p>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5.24></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경우”란 지방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	제12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평가의 절차, 기준, 결과 등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8조(국가전략 등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①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소관 분야의 중앙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때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용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원칙, 대상 기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제13조(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①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등				
제14조	제14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	×		제4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수립) 정부는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적용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p>[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p> <p>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p> <p>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p> <p>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제14조 삭제 <2013.3.23>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15조	<p>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목표 관리, 점검, 실패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7.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	○	<p>3.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u>국가 기후변화적응계획</u>에 관한 사항</p>	<p>제11조(녹색기술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등의 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7호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8.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국제협력, 교육·홍보,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p> <p>9.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등의 고충조사, 처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p> <p>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p> <p>11.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제16조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		제12조(회의)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치회의의 시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별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의한 의사결정속도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제13조(분과위원회) ① 별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녹색성장 전략제도, 기후변화, 에너지, 기술산업, 녹색생활 등의 분야별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관계 분야의 안전에 대하여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적용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제18조	제18조 삭제 <2013.3.23>				
제19조	제1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또는 연구소,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20조	제20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 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녹색성장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제15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 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2.27>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 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 지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무부시 장 또는 정무부지사가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의 명칭을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p> <p>2.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p> <p>③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시도 소속 실장·국장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p> <p>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p> <p>④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용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1.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방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 성장과 관련하여 지방녹색성장위원 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제21조	제21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 정할 수 있다.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제22조	<p>제22조(녹색경제·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① 정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녹색경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금융·산업·과학기술·환경·국토·문화 등 다양한 부문을 통합적 관점에서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새로운 녹색산업의 창출,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으로의 전환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저탄소 녹색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	<p>제22조(녹색경제·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① 정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기후변화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④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및 배려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3조(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① 정부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 구조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3. 녹색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육 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전기·정보통신·교통시설 등 기존 국가기반시설의 친환경 구조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6. 녹색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 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 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촉진 에 관한 사항				
제24조	제24조(자원순환의 촉진) ① 정부는 자 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 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 촉진 및 자원생산성 제고 목표설정 2. 자원의 수급 및 관리 3. 유해하거나 재제조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의 사용 억제 4.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재제조재활용 등 제자원화 5.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농산물 등 바이오메스의 수집·활용 6. 자원순환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의 육성 7.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용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25조	<p>제2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① 정부는 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여 야 한다.</p> <p>②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p> <p>2.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온 실가스 배출량 감축,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p> <p>3.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p> <p>4.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 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p>	○	○	<p>2.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온 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후변화 적 응,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 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 의 공개</p>	
제26조	제26조(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① 정부는 녹색기술의 연구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녹색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 석 및 제공 2. 녹색기술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4. 녹색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 협력 등 ② 정부는 정보통신·나노·생명공학 기 술 등의 융합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의 지식재산권화를 통하여 저탄소 지식 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기초법」에 따른 과학 기술기본계획에 제1항의 시책이 포함 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용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27조	<p>제27조(정보통신기술의 보급· 활용) ① 정부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방송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반 확대</p> <p>2.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의 개발·보급</p> <p>3. 정보통신 산업 및 기기 등에 대한 녹색기술 개발 촉진</p> <p>②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생활문화를 조속히 확산시키기 위하여 채택 근무·영양·환경·교육·문화·의료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송통신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p>	○	○	<p>제27조(정보통신기술의 보급· 활용) ① 정부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전력 네트워크를 지능화·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28조	제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4.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에 대한 공시 제도 등의 강화 및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5. 탄소시장(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흡수 실적 등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 및 거래 활성화 등			6.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운영 등	
제29조	제29조(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 ①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녹색산업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기업으로 한다.	○	×		제16조(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녹색산업투자회사는 출자총액, 신탁총액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로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관련 기술 및 사업은 각각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1.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제품의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또는 기술지원 사업</p> <p>2.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에 해당하는 사업</p> <p>3.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p> <p>③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녹색산업투자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한 녹색산업투자회사(해당 회사의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업무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p>				<p>고시된 인증 대상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을 말한다.</p> <p>③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 관련 기업은 제2항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의 이 전, 관련 제품의 제조 등에 의한 매출액이 인증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p> <p>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등록 결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p> <p>제17조(녹색산업투자회사의 재정 지원 및 운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녹</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제4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나 보고 내용에 대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게 해당 녹색산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 및 재산 등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검사 결과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녹색산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운영 및 재정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색산업투자회사의 출자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및 지원 조건 등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 제29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한 녹색산업투자회사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의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출자를 제한하거나 출자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별 제29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은 출자에 따른 회계를 해당 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출자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	-----------	-----------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30조	제30조(조세 제도 운영)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과 오염물질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		
제31조	제31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용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p> <p>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p> <p>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제32조	<p>제32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p>	○	×		<p>제18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p> <p>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전문기업 확인, 공공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p> <p>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나 확인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p>				<p>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개정 2013.3.23></p> <p>1.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및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사업</p> <p>2. 개발된 녹색기술의 표준화 사업</p> <p>3.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사업</p> <p>4.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사업</p> <p>5. 그 밖에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며,</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경우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 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표준화, 인증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제19조(녹색기술·녹색사업의 적합성 인 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①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 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 (녹색산업 설비·기반시설의 설치, 녹색 기술·녹색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 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 에 대한 적합성 인증(녹색기술의 경우 에는 인증된 녹색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및 녹색전문기 업의 확인(이하 “녹색인증”이라 한 다)을 한다. <개정 2012.12.27></p> <p>② 녹색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녹색인증을 신청하</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 이라 한다) 을 지정하여 녹색 색인증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p> <p>③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녹색 색인증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녹색인증심의 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p> <p>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의 신청 접수 및 평가기관 의 평가 업무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 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p> <p>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⑥ 녹색인증의 유효기간은 녹색 인증을</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그 유효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5.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인증의 대상기준·절차·방법, 유효기간 연장, 평가기관의 지정,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녹색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 공동으로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5.24>
					제20조(녹색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지정고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시하고, 이에 따른 조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p> <p>②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발주를 요청한 제품이나 공사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하거나 공사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p>
제33조	<p>제33조(중소기업의 지원 등) 정부는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2.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 3.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사업화의 촉진 	○	×		<p>제21조(중소기업의 녹색기술·녹색경영 지원) 중소기업청은 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4. 녹색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5.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공급 및 국외진출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34조	제34조(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① 정부는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와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	×		제22조(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사업 추진기관)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6.24, 2011.10.28, 2013.3.23>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8조 에 따른 공동관리기구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 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6.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 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 경공단 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 전공단
	<p>[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p> <p>2.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역 량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p> <p>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 한 녹색기술·녹색산업 인력의 유치 에 관한 사항</p> <p>4.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p> <p>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녹색기술·녹색산 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 체가 같은 항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산 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 행자
제35조	제35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 자리 창출 등) ① 정부는 녹색기술·녹 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확대하 여 모든 국민이 녹색성장의 혜택을 누 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분 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전환을 촉 진하고 국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녹색기술·녹 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 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제35조의2(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 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안전의 심사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비공개 요청 관리업체의 대표자와 직 계 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비공개 요청 관리업 체에 임직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으로 재직할 경우 3. 그 밖에 비공개 요청 관리업체와 직 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 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 스로 해당 안전의 심사에서 회피(回 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4]
----	---	-----------	-----------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제35조의3(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p> <p>제35조제7항제1호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② 국무조정실장은 제3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이 제1항 각</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4]
제36조	제36조(규제의 선진화) ① 정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온실가스 또는 오염물질의 발생 원인자가 스스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의 규제에 대한 국내 외 실태조사 등을 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의 중복을 피하는 등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여야 한다.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용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37조	제37조(국제규범 대응) ① 정부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제도·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동향·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이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제38조	제38조(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 변화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국민적 역량을 모아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p> <p>2.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온실가스 증감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가격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 방식의 합리적 규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p> <p>3.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나노·생명 공학 등 첨단기술 및 융합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한다.</p> <p>4.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시장거래를</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감축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비한다. 5. 대규모 자연재해, 환경생태와 작물 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적응 관련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6.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관련 정책 수립·추진시 기후변화 위험의 사전예방적 관리와 대비를 위해 노력한다.</p> <p>7.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39조	<p>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정</p> <p>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2.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 에너지의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등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한다. 3.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산·재생에너지의 개발·생산·이용 및 보급을 확대 	×	×		

기후변화 적응 법령안 마련 및 법제화 지원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한다.</p> <p>4. 에너지가격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국제규범 및 외국의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도입·개선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p> <p>5.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p> <p>6. 국외 에너지자원 확보, 에너지의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등을 통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에 관한 국가안보를 강화한다.</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40조	<p>제40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①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2.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3. 온실가스 배출 증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	×		<p>제23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변경)</p> <p>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을 국내외 여건에 따라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0조제3항제6호·제7호 및 제9호에 관한 계획 중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소요되는 총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p>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4.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p> <p>5.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p> <p>6.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p> <p>7. 기후변화대응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p> <p>8.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 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p> <p>9.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p> <p>10.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5.24></p> <p>② 제1항에 따른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실적을 계산할 때에는 국제 탄소 시장 등을 활용한 해외 감축분을 포함한다. <신설 2016.5.24></p> <p>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별 제42조 제4항에 따른 부문별 목표의 설정 및 그 이행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증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른 증장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6.5.24></p> <p>④ 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할 때 제1항에 따른 감축</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가전략, 중 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 간의 정합 성과 법 제40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 본계획 및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다. <개정 2016.5.24>
제41조	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 부는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 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 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	×		제24조(에너지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41 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관한 계획 중 에 너지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소요되 는 총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에 너지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를 말한다.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에너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4. 산·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 				<p>관리)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5.24></p> <p>② 제1항에 따른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실적을 계산할 때에는 국제 탄소 시장 등을 활용한 해외 감축분을 포함한다. <신설 2016.5.24></p> <p>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부문별 목표의 설정 및 그 이행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증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른 증장기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6.5.24></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인력 양성, 국제협력, 부문 에너지 자원 개발 및 이용, 에너지 복지 등에 관한 사항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④ 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할 때 제1항에 따른 감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가전략, 중 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 간의 정합 성과 법 제40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및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4>
제42조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 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	×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5.24> ② 제1항에 따른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실적을 계산할 때에는 국제 탄소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2.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 율 목표</p> <p>3. 에너지 자립 목표</p> <p>4.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 할 때 국내 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공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 도록 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p> <p>④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 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교 통·수송, 가정·상업 등 부문별 목표를</p>				<p>시장 등을 활용한 해외 감축분을 포함 한다. <신설 2016.5.24></p> <p>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 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부문별 목표의 설정 및 그 이행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 원회의 심의 전에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른 중장기전략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6.5.24></p> <p>④ 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 본방향을 심의할 때 제1항에 따른 감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가전략, 중 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 간의 정합 성과 법 제40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 본계획 및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p> <p>⑤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 라 한다) 별로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관리업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등의 이력, 기술 수준, 국제경쟁력, 국가목표를 고려하여야 한다.</p> <p>⑥ 관리업체는 제5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⑦ 정부는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p>				<p>발전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4></p> <p>제26조(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 취 및 역할)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목표관리에 관하여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5.24></p> <p>②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의 통합연계, 국내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동향, 이중 규제의 방지 등 관련 규제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관리 및 검증 등 목표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문별 관장기관” 이라 한다)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2016.5.24>
	<p>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⑧ 정부는 관리업체의 준수실적이 제5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⑩ 관리업체는 제8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p> <p>⑩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5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 제8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경영·기술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p>				<p>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되,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부문별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총괄·조정 업무에 최선을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3.3.23, 2016.5.24></p> <p>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임업·축산·식품 분야</p> <p>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發電) 분야</p> <p>3. 환경부: 폐기물 분야</p> <p>4. 국토교통부: 건물교통 분야(해운 분야는 제외한다)</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⑪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부의 관리, 관리업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에 대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부문별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 등의 이행실적, 제34조에 따른 명세서의 신빙성 여부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
----	--	-----------	-----------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과 공동으로 관리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7조(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대학 및 공립대학
					<p>제28조(중양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중양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제27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중양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행계획의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3.3.23, 2014.11.19></p> <p>③ 제2항에 따라 개선·보완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⑤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공동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3.3.23, 2014.11.19></p> <p>⑥ 국무총리는 제5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⑦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목표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p> <p>⑧ 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의 외부(다른 중앙행정기관등,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온실가</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p> <p>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사업을 수행한 실적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p> <p>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이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기술 지원, 실태 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p> <p>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이행계획 제출 및 개선·보완,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이행실태 점검 및 사후조치, 목표의 공동 이행 및 외부 사업의 범위, 이행실적 인정·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신설 2012.12.27, 2013.3.23, 2014.11.19>
					<p>제29조(관리업체 지정기준 등) ① 별 제 4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란 다음 각 호의 업체를 말한다.</p> <p>1.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업체</p> <p>2. 업체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이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는 업체의 해당 사업장</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용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를 관리업체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p> <p>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 선정의 중복누락, 규제 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p> <p>④ 관리업체는 제3항에 따른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관하여</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제심사하고,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지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을 관보에 고시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각 부문 별 관장기관이 지정고시한 관리업체를 종합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p> <p>제30조(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42 조제5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관 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 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업체 및 센터에 통보 한다.</p> <p>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기존 시설 폐쇄 및 미가동, 시설 신설증설 미</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용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이행, 조직경계 변경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수정하여 관리업체 및 센터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p> <p>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제5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2.12.27></p> <p>④ 제1항에 따른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전지적 방식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2항에 따라 수정된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제출한 이행계획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1개월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1. 3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 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가동률 3.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배출량 및 사용 에너지의 종류사용량 현황 4.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이행방법 5. 주요 생산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량 6. 주요 생산 공정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용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와 이행방법
					<p>7.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산정방법 (계산방식 및 측정 방식을 포함한다)</p> <p>8. 그 밖에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p> <p>⑤ 관리업체는 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실행한 실적(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 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실적을 포함한다)을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실적보고서의 정확성과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 시설의 신설증설에 따른 실적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이 해당 연도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실적은 제외한다)을 평가하여 그 이행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고의 내용 중 측정·보고·검증 방법의 적용에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p> <p>⑦ 제6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관리업체는 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p>
					제31조(등록부의 관리) ① 센터는 제30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조제5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부터 이행실적을 제출받으면 이를 법 제 42조제7항에 따른 등록부로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통합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p> <p>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업체의 상호 또는 명칭 2. 관리업체의 대표 3. 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4. 관리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3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이행계획, 실적 보고 및 개선 명령 등에 관한 사항 6. 제34조에 따른 명세서에 관한 사항 <p>제32조(검증기관 등) ① 법 제42조제9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는 외부 전문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 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업무를 전 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 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 량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 액 10억 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 입할 것 3.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 는 요건을 갖춘 것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 이 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제3호의 경우에는 고의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7></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p> <p>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p> <p>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검증결과의 증대한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p> <p>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업무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기관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검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27></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관리업체의 검증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부문별 환경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2.12.27></p> <p>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7></p> <p>제33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① 법 제43조에 따라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 중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이하 “조기감축 실적”이라 한다)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기준, 신청 절차, 대상 사업의 기준 및 범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문별 환경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12.27]
					<p>제33조의2(외부감축실적의 인정) ① 관리업체가 해당 업체의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하 “외부감축실적”이라 한다)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외부감축실적의 인정 기준, 신청 절차, 대상 사업의 기준 및 범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2.12.27]</p>
제43조	제43조(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①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	×	×		<p>제33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① 법 제43조에 따라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 중 검증기관</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적으로 행한 실적에 대해서는 이를 꼭 표관리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그 실적 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발적으 로 온실가스를 미리 감축하는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을 거래할 수 있 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검증을 받은 실적(이하 “조기감축 실적”이라 한다)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기준, 신청 절차, 대상 사업의 기준 및 범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44조	제44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 량의 보고) ① 관리업체는 사업장별 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 비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	×	×		제34조(명세서의 보고·관리 절차 등) ① 관리업체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 당 연도(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체 로 지정된 최초의 연도의 경우에는 과거 3년간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 고, 이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다음 연 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용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수량 및 가동시간 3.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 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시 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시간 4. 생산공정과 생산설비로 구분한 온실 가스 배출량종류 및 규모 5.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온실가스 배 출 방지시설의 종류·규모·처리효율· 수량 및 가동시간 6. 포집(捕執)·처리한 온실가스의 중 류 및 양
	<p>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명세서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명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명세서에 포함된 주요 정보를 관 리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관 리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그 관리 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 히 침해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정부는 관리업체로부터 제3항 단서 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명세서의 내용, 보고관리, 공개방법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계산측정 방법</p> <p>8.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p> <p>9. 삭제 <2012.12.27></p> <p>10. 그 밖에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관리를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p> <p>③ 제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명세서와 관련 자료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를 제31조제1항에 따른 등록부에 포함하여 관리한다.</p> <p>④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기관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세서의 작성 방법, 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p>제35조(명세서의 공개 등) ① 제34조에 따른 명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공할 수 있다.</p> <p>② 센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에 따라 주권상장 법인의 사업보고서의 공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이 있</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는 때에는 해당 관리업체의 명세서를 통보할 수 있다.</p> <p>③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명세서의 공개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홈페이지 및 센터의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한다.</p> <p>④ 법 제4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명세서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관리업체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비공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명세서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센터에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p> <p>⑥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24></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⑦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5.24></p> <p>1.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문별 관장기관이 각각 지명하는 5명</p> <p>2. 녹색성장 및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민간위원</p> <p>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45조	<p>제45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작성·관리하거나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문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p> <p>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p>	×	×		<p>제36조(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을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둔다. <개정 2016.5.24></p> <p>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지원 2.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3.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협조 지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4.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5.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통계를 분석·검증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적인 정보 및 통계 관리 방법, 관리기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③ 국무조정실장은 센터의 효율적·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4> ④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부문별 전년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6월 30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3.3.23, 2016.5.24>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산림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산업공정 3. 환경부장관: 폐기물 4. 국토교통부장관: 건물·교통(해운 분야는 제외한다)
----	---	-----------	-----------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5.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해양·항만 분야</p> <p>⑤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센터는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에 관하여 검증을 한다. 이 경우 센터는 온실가스 통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4></p> <p>⑥ 센터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에너지·지속가능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인력, 정보 제공 및 분석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에 따른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46조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①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도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및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제도를 포함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려하여야 하고,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제42조제5항의 관리업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제도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7조	제47조(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①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제작하려는 자는 그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경쟁 체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중 온실가스	×	×		제37조(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관리) ①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업무를 추진할 때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각각 정하되,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p>[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를 줄임으로써 쾌적하고 적정한 대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정하되, 이 증규제가 되지 않도록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어느 한 기준을 택하여 준수토록 하고 측정방법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p> <p>④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의 제작·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p>				<p>[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준의 적용관리는 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환경부장관은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규제 동향, 측정 방법·절차 및 제재의 단일화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작업체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3.23></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재정·세제 지원, 연구개발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48조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① 정부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별·권역별로 태양력·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이에 관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	제48조의2(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 ① 정부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별·권역별로 태양력·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이에 관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생물자원 및 수자원 등의 변화 상황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생물자원 및 수자원 등의 변화 상황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③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수질, 보건, 농수산식품, 산림, 농수산식품, 산업, 해양,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수질, 보건, 농수산식품, 산림, <u>연안 및 해양</u> ,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분석하고, 현재 및 미래의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5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추약성 조사·분석, 기후변화 위험평가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기거나 건강·자연재해 등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계획의 추진)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48조의3(국가 적응계획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2제3항의 영향 및 취약성, 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이하 “국가 적응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③ 기후변화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위험에 관한 사항 4.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적응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생태운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p> <p>6.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생태운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세부 시행계획(이하 “중앙부처 적응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8조의4(지자체 적응계획 수립·시행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의 최소화 및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적응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기후변화 적응계획(이하 “지자체 적응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제48조의5(적응 추진상황 점검·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적응계획의 이행사항 및 주요성과 등 적응 추진상황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여 5년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별 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 및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부처 적응 세부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적응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시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매년 그 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용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3항에 따른 실적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제목개정 2012.12.27] [시행일:2015.1.1] 제38조의 개정규정 중 시장·군수·구청장에 관한 부분</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48조의6(기후변화 적응 정책협의회)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 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중앙부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48조의5 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⑤ 정부는 국민·사업자 등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활동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의7(공공기관 적응보고)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공공시설 등을 보유·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기후변화 위험 평가 및 적응대책 등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적응계획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공공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 대상 및 내용 등 공공기관 적응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소관 기관별로 기후변화 영향 및 리스크 평가,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적응수준 및 적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해야 한다.</p>	
				제48조의8(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u>화</u> 정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른 국가기	대기환경보전법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국가의 적응역량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9조의 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지정 할 수 있다. ②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는 국가 기후 변화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 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 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	-----------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지정·사업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49조	제49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재 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용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p> <p>3.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및 국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p> <p>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p>				
제50조	<p>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p>	○	×		<p>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30년의 온실가</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5.24> ② 제1항에 따른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실적을 계산할 때에는 국제 탄소 시장 등을 활용한 해외 감축분을 포함한다. <신설 2016.5.24>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부문별 목표의 설정 및 그 이행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증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른 증장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6.5.24> ④ 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할 때 제1항에 따른 감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가전략, 중
----	--	-----------	-----------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용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지표에 관한 사항</p> <p>3.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이행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소관 분야의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중앙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양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 간의 정합성과 법 제40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및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4></p> <p>제39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0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소요되는 총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51조	<p>제51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정부는 건 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이 경제발전 및 사회개발과 조화를 이 루는 국토(이하 “녹색국토” 라 한다) 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도 시·군 기본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계획을 제49조에 따른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p> <p>② 정부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자원 자립형 탄소중립도시 조성 2. 산림·녹지의 확충 및 광역생태축 보전 3.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이용·보존 4. 저탄소 향만의 건설 및 기존 향만의 	○	×		<p>제40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법 제51조제 1항에서 “국토종합계획·도시·군기본계 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이란 별표 6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4.10></p> <p>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 할 때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 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 토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제1 항에 따른 도종합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 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획

기후변화 적응 법령안 마련 및 법제화 지원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저탄소 향만으로의 전환</p> <p>5. 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p> <p>6. 자연재해로 인한 국토 피해의 완화</p> <p>7. 그 밖에 녹색국토 조성에 관한 사항</p> <p>③ 정부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 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p>				
제52조	<p>제52조(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p> <p>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과 가</p>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몸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p> <p>2. 수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수질개선</p> <p>3. 물 절약 등 수요관리, 빗물 이용·하수 재이용 등 순환 체계의 정비 및 수혜의 예방</p> <p>4.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복원</p> <p>5. 수질오염 예방·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p>				
제53조	<p>제53조(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중교통분담률,</p>	×	×		<p>제41조(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p> <p>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3.3.23></p> <p>1. 자동차, 기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철도수송분담률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버스·지하철·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며, 자전거 등의 이용 및 연인해운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온실가스과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대도시수도권 등에서의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2. 버스·저공해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단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율 2. 에너지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3. 5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그 이행계획 4.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그 이행계획
----	---	-----------	-----------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3.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제54조	제54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산·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한 증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지원	×	×		제42조(녹색건축물의 기준) ① 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5.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3.3.23> 제4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등) ① 법 제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	-----------	-----------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의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확대·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지원,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 ② 법 제5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의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	-----------	-----------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업도시개발사업</p> <p>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p> <p>5. 그 밖에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p> <p>③ 정부는 법 제54조제8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지원 또는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3.3.23></p> <p>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 합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결과 80점 이상인 건축물</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p> <p>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p> <p>4.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p> <p>5. 그 밖에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금의 지원 또는 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p>
제55조	제55조(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 흡수원 확충) ① 정부는 에너지 절감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화학비료·자제와 농약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유기농 농수산물 및 나무제품의 생산·유통 및 소비를 확산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지의 보전조성 및 바다숲 (대기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하여 바다 속에 조성하는 우뚝기사리 등의 해조류군을 말한다)의 조성 등을 통 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산림의 보전 및 조성을 통하 여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고,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하여 식량자 립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적용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56조	제56조(생태관광의 촉진 등) 정부는 동식물의 서식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생태관광을 촉진하고, 국민 모두가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제57조	제57조(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① 정부는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이하 “생산등”이라 한다)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배출량 등이 합리	○	×		

기후변화 적응 법령안 마련 및 법제화 지원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적으로 연계·반영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재화의 생산등의 전 과정에 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량, 온실가스 와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④ 정부는 녹색제품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의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58조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정부는 는 국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 방자치단체·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 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 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 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을 할 수 있다.	○	×		
제59조	제59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 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 민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 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녹색생활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④ 공영방송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적용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교육· 홍보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 등이 관련 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0조	제7장 보칙 제6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 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에게 저탄소 녹색성장 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 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 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61조	<p>제61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국외진출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p> <p>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 공신력 있는 기후변화대응 평가에 대한 국가별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및 평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을 적극 추진하고 국</p>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제협력을 강화하며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제62조	제62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63조	제63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기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기보고서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제64조	<p>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42조제6항·제9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p> <p>2. 제42조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3. 제42조제9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p>	×	×		<p>제4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부과 징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p>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7에</p>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아니한 자	적응 관련성	개정 필요성	법 률 개 정 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제27180호, 2016.5.24., 일부개정]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 서 그 금액을 가증하거나 경감할 수 있 다. 다만, 가증하는 때에는 법 제64조제 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 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48조 개정(안)

<div> <div> <div>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div> <div>[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개정]</div> </div> </div>	<div> <div>개 정 안</div> <div>시행령</div> </div>
<p>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p> <p>④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기거나 건강·자연 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계획의 추진)</p> <p>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① 정부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공·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별·권역별로 태양력·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이에 관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생물자원 및 수자원 등의</p>	<p>제48조의2(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 ① 정부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공·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별·권역별로 태양력·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이에 관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생물자원 및 수자원 등의</p>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개 정 안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개정]		시행령	
범률		범률	
변화 상황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변화 상황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수질, 보건, 농수산식품, 해양,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수질, 보건, 농수산식품, 산림, 연안 및 해양,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분석하고, 현재 및 미래의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5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조사분석, 기후변화 위험평가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국가 적응계획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2제3항의 영향 및 취약성, 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제38조의1(국가 적응대책의 변경) 법 제48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	

개 정 안	
지터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시행령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개정] 기울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이하 “국가 적응계획”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공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항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이하 “국가 적응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후변화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공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위험에 관한 사항 4.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적응계획에 관한 사항

개 정 안		시행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p>[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개정]</p> <p>5.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p> <p>6.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생활운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5.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p> <p>6.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생활운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법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세부 시행계획(이하 “중앙부처 적응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법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p>	<p>제48조의4(지방체 적응계획 수립·시행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의 최소화 및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p>	<p>제38조의2(지방체 적응계획 수립·시행 등) ① 지방체 적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별 및 시·군·구(이하 시·군·구)별 기후변화</p>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개 정 안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개정]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div data-bbox="385 970 419 1023">법률</div> <div data-bbox="385 439 419 512">시행령</div>
<p>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적응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기후변화 적응계획(이하 “지자체 적응계획”이라 한다)을 5년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적응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p> <p>2.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과 기후변화 영향분석,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 등에 관한 사항</p> <p>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 전략에 관한 사항</p> <p>3. 기후변화 적응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과제 및 연차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p> <p>4. 계획의 집행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지자체 적응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지자체 적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 적</p>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개 정 안	시행령
	범율	<p>용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과제 내용 일부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현]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시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매년 그 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p>	<p>제48조의5(적응 추진상황 점검·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적응계획의 이행사항 및 주요성과 등 적응 추진상황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여 5년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 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 및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부처 적응 세부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적응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8조의4(국가 적응계획 등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부처 적응 세부시행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p> <p>제38조의5(지자체 적응계획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3항에 따라 시도 적응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p>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개정]	법률	개 정 안 시행령
<p>[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p> <p>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3항에 따른 실적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의 적응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p>

개 정 안		시행령
제18조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개정]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8조의6(기후변화 적응 정책협의회)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중앙부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법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⑤ 정부는 국민·사업자 등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활동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의7(공공기관 적응보고) 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공공시설 등을 보유·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기후변화 위험 평가 및 적응대책 등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에 따	제38조의6(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 ① 법 제48조의6제1항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 등을 보유·관리하는 기관”은 관할 중앙행정기관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부 장관이 정한다. ② 공공기관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개 정 안	
	법률	시행령
<p>[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개정]</p>	<p>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공공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 대상 및 내용 등 공공기관 적응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소관 기관별로 기후변화 영향 및 리스크 평가,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적응수준 및 적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해야 한다.</p>	<p>1. 기관 개요 및 기후변화 현황</p> <p>2. 기후변화 전망 및 영향 분석</p> <p>3.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결과 종합분석</p> <p>4. 적응 세부시행계획</p> <p>5. 그 밖의 적응대책의 이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p>
	<p>제10조의4(적응산업 육성 및 지원)</p> <p>※ 제22조에 내용 포함</p> <p>제22조(녹색경제·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① 정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p>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개 정 안	
	법 률	시행령
	<p>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p>	
	<p>제10조의10(기후변화 적응평가) ※ 제5조 및 제38조에 내용 포함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포함한 각종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 영향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38조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6.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관련 정책 수립·추진 시 기후변화 위험의 사전예방적 관리와 대비를 위해 노력한다.</p>	
<p>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 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지정 및 평</p>	<p>제48조의8(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p>	

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개 정 안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개정]	법률	시행령
<p>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수립·시행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지정·사업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의 수립·시행 등 국가의 적응역량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2(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관련 내용 일부 녹색법으로 이관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 센터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은 환경부장관 고시 등으로 변경 추진</p>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 개정]	개 정 안	
	법률	시행령
	<p>제0조0(기후변화기금의 설치)</p> <p>※ “제4장 저탄소녹색성장의 추진 - 제28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부분에 관련 내용 추가</p> <p>(제28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6.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운영 등</p>	

[부록 2]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1~5차) 결과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1차) 결과

(2016. 4. 25 KACCC)

1. 추진 배경

-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실질적 효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정책기반 확대 필요
 -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체계적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 법적 기반 강화를 계획
-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을 통해 현행 녹색법상 적응 관련 법령의 수정·보완 및 신규 추가 사항 등 법령 개정 필요사항 논의, 법조문(안) 마련·검토
 - ⇒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령(안)을 세부적으로 마련, 현행 법령 개정 준비

2. 회의개요

- (일시) 2016. 4. 21(목) 16:00 ~ 18:00
- (장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산천 회의실
- (참석자) 환경부, KACCC, 기후변화 적응법 관련 전문가 등 총 11명
 - (환경부) 최민지, 이진원, 강효윤, (KEI KACCC) 신지영, 이승환, 배채영,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동근(서울대학교), 이준서(법제연구원), 조정두(인천발전연구원), 최준영(국회입법조사처)

3. 주요 논의사항

- 여건 및 현실을 고려하여 법제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항목 설정
 - 적응법안에 있어서 선행 연구를 통해 마련된 주제와 항목(안)에 대하여 현재 문제가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출발점으로 법제화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법제화 추진 필요

- 녹색법이 지니는 기본법적 성격을 감안하여 법제화 항목별로 도입 당위성 및 필요성, 법제화 방안(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형태로 포럼 진행
- 타법에서 이미 명시된 적응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녹색법상 적응 관련 사항 개정(안) 마련 추진
 - 기존 타법에서 다루어지는 내용과의 관련성, 연계성, 차별성 감안 필요
 - 기존의 녹색법의 내용에서 구체화할 내용과 새롭게 추가해야 하는 내용을 분리하여 정리하고, 항목 및 내용은 성격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으로 구분하여 구체화 정도를 검토
- 적응 관련 사항 개정은 환경부의 역할 범위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가 어느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타부처와 연계하고 조율할 수 있는지에 따라 법안 항목별 법조문 내용의 방향 설정 후 조문화 작업 추진

4. 향후 계획

- 적응법 항목(안)별 쟁점사항 및 기존 관련법상 내용 검토(16.5)
- 적응법 항목별 방향 및 조문 검토(16.6~8)
- 기후변화 적응법 초안 종합검토 및 법안 마련(16.9)

* 붙임 회의록 1부, 끝

[※ 붙임]

회 의 록

(작성: KEI KACCC)

회의명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1차)
일 시	2016년 4월 21일, 16:00 ~ 18:00
장 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산천 회의실
참석자	환경부 - 최민지, 이진원, 강효운 KACCC - 신지영, 이승한, 배채영 전문가 -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동근(서울대학교), 이준서(법제연구원), 조경두(인천발전연구원), 최준영(국회입법조사처),

주요 회의 내용

□ 전문가 포럼 개최 및 포럼 운영 목적, 방법 등을 위한 설명

○ KACCC 신지영

- 2014년도에 기후변화 적응법 마련과 관련하여 사전 연구가 있었음. 여기서 필요한 항목 및 관련 법조문(안)을 만든 상황임. 이에 이어서 실제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부(안)을 만드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임
- 초안이 있기 때문에 총 6회 정도 포럼의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며, 처음 1, 2회 차 포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지, 담겨진 키워드나 항목들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후에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통해 항목별 조문들을 만들어 가는 형태로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 착수보고회 당시 녹색법 개정을 목표로 정부 입법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상황이 다소 변하여 녹색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 방식도 함께 고려해보자 함
- 오늘 논의할 내용은 현재 제시되어 있는 체계 자체가 적절한지, 세부 항목들의 타당성, 추가되어야 할 항목 여부의 검토, 기본적인 방향이나 주요 키워드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이 되겠음

□ 논의 내용

- (이동근) 적응위원회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함. 적응위원회의 위상이나 미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겠음. 환경부가 기후변화 적응위원회의 간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환경부와 타부처 간의 관련성, 기후변화 적응위원회의 설치 가능성 여부 등의 내용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음

주요 회의 내용

- 두 번째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적응계획을 누가 세우느냐의 문제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여러 주체가 있는데 이들이 의무적으로 적응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내용을 적응법에 포함할 것인지,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데 어느 정도까지 강제력을 줄 것인지 등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하겠음. 이러한 의무적인 내용들은 산업계에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고, 타부처에서도 부담을 느끼게 되면 입법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진원) 산업계에서는 부담을 느끼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 환경부에서 당위성 및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포럼의 토론을 통해서 찾아가야 하겠다고 생각함
 - (이동근) 산업계가 이 법을 따를 경우 이익이 되는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음.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닌 이 법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녹아 들어가면 입법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최민지) 포럼에서 논의할 범위나 주제를 우선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정부 입법이나 의원입법의 결정은 정부기관 내부에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포럼 내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됨. 그렇기 때문에 포럼에서는 적응법이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주요 항목들을 정하고 이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법제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항목별로 논의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함
 - (최민지) 영향평가보고서가 과학기반 부문에 있는 리스크 평가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 (신지영) 그 부분도 포함이 되고, 현재 주기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평가보고서의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임
 - (최민지) 이 둘은 구분을 해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리스크 평가를 해서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것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측면의 영향평가는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동근) 기후변화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경제 시나리오의 내용도 강조되고 있는데, 기후변화 감시예측과 더불어 시나리오 분석의 내용도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최민지) 주류화라는 항목이 있는데 주류화를 어떻게 법제화하고자 하는지?
 - (신지영) 주류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아직 까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영향평가나 환경부가 가

주요 회의 내용

- 지고 있는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들에 기후변화 적응의 내용을 개념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의 조문을 만들고자 함
- (이동근) 영향평가의 항목들을 살펴보면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내용들은 있는데 적응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까 국가 SOC의 영향평가에 적응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주류화를 위한 이슈가 되었음
 - (최준영) 현재 법제 강화의 진행방식이 이상적인 내용들을 모두 만들어 놓고 이를 현실적으로 법조문화해 가면서 현실적인 문제들과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인지? 지금 체계로 보면 별도로 법을 제정하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녹색법에 지금의 내용들이 모두 들어간다면 균형적인 문제들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됨. 적응의 내용이 강조가 되는 것은 모두가 동의를 하겠지만 법 전체적인 체계에 있어서의 세부화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되겠음. 즉 다른 조항이나 다른 부처와 관련된 내용이나 다른 부처와의 연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최종 목표를 법제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든 내용을 다 넣기보다는 가치치기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음.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기금의 마련이나 재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특히나 현실적인 문제들과 많이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됨.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작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 (최민지) 이번 개정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나 내용들을 분명히 하고, 이를 중심으로 당위성이나 필요성, 법제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 (안병옥) 현재 우리의 논의 단계가 국회에서 실제로 조문이나 법안을 다루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적인 내용들이 모두 포함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국회에 법안이 올라가고 과정이 진행되면서 현실성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가치치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연구 단계에서는 이상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제시된 법안 체계가 잘 짜여진 체계라 판단됨
 - (안병옥) 재해 부분에 대해서 기후변화 적응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겠음. 기상재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이 법에 담겨야 하는지, 담기지 않는다면 폭염피해, 농수산물 피해 등은 적응의 측면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 (안병옥) 현재 법제 그대로 봤을 때, 적응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느끼기 때문에 개정이나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주요 회의 내용

확인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예를 들어 적응위원회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주류화와 관련하여 각 부처가 계획 단계에서 적응을 고려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또는 현재의 계획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등 이런 것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법제화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대표적으로 적응위원회, 주류화, 기금, 공공기관 적응보고 등의 내용이 주요 논쟁점이 될 수 있겠음

- (최민지) 적응위원회와 관련하여 법의 내용 내에서 다루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됨. 이것에 대해서 논쟁은 많겠지만, 녹색성장위원회는 있고 기후변화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적응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녹색법 전체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속적인 논의는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함
- (신지영) 이슈나 쟁점이 될 수 있는 항목 중 기금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논의나 연구가 된 적이 없음. 이외의 쟁점이 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
- (이동근) 전 세계에서 기초지자체에까지 적응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진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계획들에 대한 피드백 과정이 없고, 계획 진행을 위한 자금이 없다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기금과 관련한 부분은 무조건 법에서 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함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교육, 홍보와 관련된 것이라 생각함.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관련 DB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됨. 각 부처별 DB가 부족한 경우도 많고, 아직 디지털화되지 않은 DB도 많이 있음. 적응과 관련한 DB가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 미래에 대한 예측이 더욱 어렵다고 생각됨.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적인 DB를 어느 부처에서 구축하, 관리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 (조경두) 어떤 다른 논의보다도 앞서 필요한 것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인 정의, 영역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되겠음.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현재 제시되는 논쟁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기본법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전 부처들에게 넓게 적용이 되는 내용들인데 환경부가 적응에 대해서 고유한 영역을 구체화해 놓지 않는다면 개정이나 제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재원의 확보, 영향, 파급, 리스크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들과 연계나

주요 회의 내용

협력이 필요한 부분임. 예를 들어 피해나 영향 등의 내용에서 풍수해만 해도 이미 별도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기후변화 적응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하위 법령이나 법안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음. 또한 이러한 범위의 설정에 따라 적응산업, 보험, 관련 인력 등의 내용의 범위도 매우 달라질 것임. 기존의 법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작성되어야 하는 영역과 타부처에서 변경하거나 포함해야 하는 영역으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 (최준영) 현재 법제 중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적응 모니터링과 적응 확산 영역임, 이번 법제 강화를 통해 이 영역들에 교두보를 마련해두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음. 적응과 관련된 여러 항목들이 균형 있게 법 내에 포함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선 모니터링 관련 항목이 기존에 환경부가 해온 역할들과 가장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 어렵지 않게 법에 포함이 되면서 향후에 환경부가 추가적으로 유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적응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법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지만 현재는 없으면서 환경부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인 모니터링이나 확산 부문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음

- (이준서) 현재 법제 강화의 전체적인 틀을 기본법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겠음. 모든 내용을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음. 기본법의 형태로 가게 된다면 법의 내용이 주로 선언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선언적으로 넣어서 근거를 둘 규정과 구체적으로 둘 규정을 법률과 시행령의 형태로 나누어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온실가스와 관련한 법의 경우 일련의 피드백이 명확한데, 적응의 경우 관련 내용이 지자체나 업계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지 않고,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지 않은 상태임. 법제 마련을 통해 지자체나 업계에 적응과 관련하여 정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겠음. 몇 가지 중점적인 메시지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차근차근 법제 강화를 진행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적응센터와 관련한 내용은 이미 「대기환경보전법」에 제시되어 있으니 이번에 마련하고자 하는 법제로 이동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판단함

기금과 관련해서 기본법에서 다루게 된다면 이는 환경부 자체적인 기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범부처적인 기금으로 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경부가 이 범부처적인 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어느 정도만큼 분담을 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렇기 때문에 기금과 관련한 내용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번에 기금 내용까지 담아내

주요 회의 내용

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주류화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타부처와 관련한 내용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환경부 내에서 주류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병옥) 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가 누구에서 어떤 권한을 주고 책임을 부과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함. 이번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모니터링은 누가 할 것이고, 취약성 평가나 리스크 평가는 누가 할 것인지? 지자체가 주관이 된다면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어느 정도 명확해져야만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내용들을 포럼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합의된 결과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음
- (이진원) 기후변화라고 했을 때, 풍수해와 같은 단기적 피해와 점진적 변화로 인한 피해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고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지, 이벤트성 피해들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함
- (안병옥) 이는 그 사회가 적응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필리핀의 경우 대부분의 기후변화법과 관련한 내용이 적응과 관련된 것으로 기상재해와 관련된 내용임.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는 잘 안 되고 있지만, 기상피해와 관련한 부분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흐름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후변화 적응에서 기상재해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경두) 현재 관계 부처 사이에도 기상과 기후에 대해 서로 다르게 보거나 법에서도 다르게 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현재 이러한 상이함을 합의하거나 조율하려는 노력은 아직 없는 상황임. 적응과 관련한 법을 만드는 데 있어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법이 기상법이라고 판단됨. 또한 주류화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나 공기업, 지자체 등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미 기존에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거나 기존에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사업들과의 조율이나 연계 등이 반드시 필요하겠음. 감축과 달리 적응과 관련해서 모든 사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주류화의 어려움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논의가 되고 엮여야 주류화가 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동근) 이미 기존에 다른 법에서 영향이나 취약성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법들과 어떤 차별성을 두고 있는지 어떻게

주요 회의 내용

차별화를 둘 것인지를 위해 다른 법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생각 외로 이미 많은 부처들이나 법에서 쓰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 보임

- (최준영) 다른 부처나 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환경부가 종합하고 지켜보겠다는 방식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이 역시 상당한 반발이 발생할 수도 있겠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벌써 많은 내용이 다른 부처의 법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산림청은 대부분의 법에서 기후변화를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가 법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고려해보아야 하겠음. 환경부 입장에서 ‘총괄’이나 ‘평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다른 부처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음. 타법에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의외로 다른 법에서 적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많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묶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 위해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음

- (안병옥) 타부처에서 잘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켜는 것이 환경부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적응 역시 감축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겠음. 감축을 보면 환경부가 간사 역할을 하고 다른 부처들과 협력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적응과 관련해서도 환경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보다 추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등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하게 하고, 환경부가 취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함. 적응위원회 역시 녹색성장위원회 내에 두고 환경부가 간사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함

○ (최민지) 기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부분들과 새롭게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을 분리하여 정리하고, 논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겠음

○ (이동근) 각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들에게 환경부가 현재 적응계획을 세우고 있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누가 적응계획을 세우고 누가 피드백을 줄 것인지 등에 대해서 환경부의 역할을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응과 관련된 큰 틀은 환경부가 제시하고,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실시되 환경부가 도와주거나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제일 이상적일 것으로 생각함

- (최준영) 환경부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전 분야에 대해 시야가 넓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각 부처들에게 그냥 맡기고 진행하다 보면 오적응의 내용을 주로 답을 가능성도 있음. 그런 내용들을 잡아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것이 환경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주요 회의 내용

곳이 적응센터라고 생각함. 즉 각 부처나 공공기관들이 작성한 내용을 검토하고 피드백 줄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겠음

- (이동근) 오는 10월에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아직 명확한 내용이 없는 상황인데, 적응법이 잘 진행된다면 그때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안병옥) 2년 전에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점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법제화의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점에서 다룬 적이 있음. 이때 사용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음

- (이진원) 다음 포럼에서는 기존 다른 법에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고 적응법 전체 체계 중 개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 (신지영) 다음에는 항목별 중점 사항들, 쟁점이 가능한 부분들을 적어보고, 다른 부처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정리하고, 개요의 내용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음

- (전체) 다음 포럼 일정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연락을 통하여 조율하겠음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2차) 결과

(2016. 5. 24 KACCC)

1. 추진 배경

-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실질적 효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정책기반 확대 필요
 -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체계적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 법적 기반 강화를 계획
-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을 통해 현행 녹색법상 적응 관련 법령의 수정·보완 및 신규 추가 사항 등 법령 개정 필요사항 논의, 법조문(안) 마련·검토
 - ⇒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령(안)을 세부적으로 마련, 현행 법령 개정 준비

2. 회의 개요

- (일시) 2016. 5. 13(금) 09:30 ~ 11:30
- (장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산천 회의실
- (참석자) 환경부, KACCC, 기후변화 적응법 관련 전문가 등 총 9명
 - (환경부) 이진원, 강효운, (KEI KACCC) 신지영, 이승한, 김정인(중앙대학교),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준서(법제연구원), 조경두(인천발전연구원), 최준영(국회입법조사처)

3. 주요 논의 사항

- 현행법 개정 요구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필요성 제시 필요
 -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가적 의무 이행과 관련한 현행법의 제도적 한계 분석 및 제시 필요
 - 현행법 개정에 대한 핵심적 목표 및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중점 내용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예: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의무 강화 및 시민에 대한 교육·홍보 확대)
- 개정을 위해서는 현행법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용어들에 대한 개념 정립과 위계 정리 및 이에 대한 합의 필요

- 최상위 개념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의 재정립 및 수정보다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기후변화 대응’에 ‘완화’와 ‘적응’이 함께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안이 현실적
- 용어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한 몇 가지 안을 마련하여 3차 포럼에서 논의 필요
- 현행법 개정의 관점에서 가능한 한 현실적인 전략을 염두에 둔 진행 필요
 - 총칙규정에서 적응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하는 전략 필요
 - 적응 관련 모든 조문을 개정하기보다는 적응에 해당하는 법률 제48조, 시행령 제38조의 조문들을 세분화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전략 필요

4. 향후 계획

- 적응법 항목(안)별 쟁점사항 및 기존 관련법상 내용 검토(‘16.5)
-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3차)(‘16.6)
- 적응법 항목별 방향 및 조문 검토(‘16.6~8)
- 기후변화 적응법 초안 종합검토 및 법안 마련(‘16.9)

* 붙임 : 회의록 1부, 끝

[※ 붙임]

회 의 록

(작성: KEI KACCC)

회의명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2차)
일 시	2016년 5월 13일, 09:30 ~ 11:30
장 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산천 회의실
참석자	환경부 - 이진원, 강효윤 KACCC - 신지영, 이승한 전문가 - 김정인(중앙대학교),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준서(법제연구원), 조경두(인천발전연구원), 최준영(국회입법조사처)

주요 회의 내용
<p>□ 1차 포럼 이후 수정·보완 사항 및 2차 포럼 논의 사항 공유</p> <p>○ KACCC 신지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응법안 추진전략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규정을 추가 입법하는 방안으로 추진 예정 - 이는 현실적으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법체계 혼란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감축’에 상응하는 ‘적응’ 관련 규정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현 구조상 상당한 개정이 불가피함. 이렇게 되면 기본법적 성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기후변화 대응/완화, 적응이 현재 법상에서 혼재되어 있어 명확하게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응’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함 - 현재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적응 개념 간 위계가 불분명함. 이에 따른 계획체계, 계획 간 연계 등 관련 모든 사항이 불분명한 상태임. 이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법상에서 ‘대응’은 주로 감축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감축과 적응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적응법제 체계 및 항목 구성은 기본개념·원칙 등 기본전제와 과학기반 마련→정책수립→정책시행→모니터링의 적응정책 과정 및 적응 이행·역량기반을 고려함

주요 회의 내용

- 1차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요 부문에 '주체별 책무', 과학기반 부문에 '기후 시나리오', '사회·경제 시나리오', 이행/역량기반 부문에 '전문인력 양성' 항목을 추가함. 또한 모니터링 부문에서 '영향평가보고서'를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로, 적응전략/계획 부문에서 '이행점검'을 '실적점검 및 평가'로 수정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전체 총 7개 장 6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기후변화 적응 관련 조문은 17개 조문임. 실제 적응의 내용은 1개 조문(제48조)에서 다루어짐. 이 적응 관련 조문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법률 중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법률을 살펴본 결과 기후, 기후변화, 적응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법률은 녹색법을 제외한 15개 법률이 있음.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는 전체 8개의 법률 중 실제 적응 관련 법률은 6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서는 21개 법률 중 실제 적응 관련 법률은 8개, '취약성'에 대해서는 전체 4개 법률 중 실제 적응 관련 법률은 3개로 확인됨,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포럼 자료 뒷부분에 '참고자료' 부분에 정리해 둠
- 오늘은 총칙부분에 들어갈 용어 정의, 책무 등의 내용에서 적응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들이 추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법 항목에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행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함
- 또한 어떤 내용을 법에서 다루어야 하고 어떤 내용을 시행령에서 다루어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와 관련해서도 조언을 해주기 바람
- (이진원) 녹색법을 개정할 때 제시되는 모든 항목이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상적으로 모두 제시하고, 이후에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여 진행하고자 함

□ 논의 내용

○ (김정인)

- 녹색성장위원회와 관련하여 현재는 기후변화, 에너지, 녹색산업 등을 모두 다루게 하고 있는데, 녹색성장위원회 내에 기후변화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그 안에 감축위원회, 적응위원회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녹색성장기본법을 유지하면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녹색성장위원회를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주요 회의 내용

-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면 그 안에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이 모두 들어가는 개념이라 생각함. 하지만 현재 법 내에서 명확하게 이를 명시하지는 않은 상황임. 현재 제시된 ‘대응’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 안에 완화와 적응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게 하는 것이 법 개정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한 부분에서 적응의 개념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예를 들어 ‘사전에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겠음
- 기후변화 원칙에서 적응과 관련하여 빠진 내용들을 찾아서 넣어주는 것이 필요함. 원칙에서 우선적으로 적응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나면 나머지 조문들에서도 적응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쉬워질 것으로 판단됨
현재 법에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공표와 관련된 내용을 시행령으로 제시하는 등 적응과 관련하여 빠져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묶어주는 과정이 필요함
- 59조에 보면 교육·홍보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너무 넓거나 실용적이지 않은 내용들만 다루고 있다고 생각됨.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제5조의 지자체 책무에도 포괄적인 내용 포함 필요. ‘저탄소란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이다’ 라는 내용 포함 필요
- 63조를 보면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가 감축과 관련한 보고서는 내고 있는데 적응과 관련한 보고서는 내지 않고 있음. 파리협정에 의하면 적응과 관련한 보고서를 국가가 제출하게 되어 있음.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서 국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겠음
- (신지영)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파리협정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보면 국가보고서는 당연히 적응 보고서도 포함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적응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음
- (김정인) 국가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다루어줄 수 있다고 판단됨
- (신지영) 현행법에서 제시된 ‘저탄소’의 개념은 주로 감축과 관련한 내용들인데 이 ‘저탄소’에 적응의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면 뒤쪽에서 포괄하게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적응과 관련된 내용이 오히려 축소되는 경우도 발생함. 그렇기 때문에 적응의 개념을 어떻게 넣을지에 대해 어려움이 있음

주요 회의 내용

○ (조경두)

- 현행법의 암묵적인 위계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이 법 내의 모든 개념을 포함하고, ‘기후변화’가 ‘적응’을 포함하는 형태라고 판단됨. 기후변화 원칙과 관련된 내용들을 본다면 제시된 안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을 병렬적인 관계로 해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대응이 완화와 적응이라는 하부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 문구를 자세히 보면 어떤 경우에는 녹색성장과 적응이 병렬적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대응과 적응이 병렬적으로 제시되기도 함. 이러한 개념에 대한 약속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기후변화 대응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로 봤을 때와 적응만을 강조하기 위한 경우로 나누어 봤을 때 현재 개정(안)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기본원칙이라고 제시한 내용에서 2번과 6번 원칙만 적응을 위한 것이지, 나머지 내용들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정책에 해당하는 포괄적 원칙이라 볼 수 있음
-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개념들의 나열, 즉 적응을 대응의 하위적인 개념으로 잡고 우리가 목표하는 부분들을 달성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적응을 하나의 축으로 제시하고 진행해나갈 것인지 우선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겠음

○ (안병욱)

- 기후변화 대응법을 제정하지 않고, 현행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기후변화 적응의 기본원칙의 항목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기본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기후변화 대응의 원칙에 적응의 내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됨
-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기후변화 적응의 관점에서 본다면 용어 정의 내에 ‘기후변화 적응’도 들어가야 하고 ‘영향’, ‘취약성’까지는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리스크’나 ‘주류화’는 법률로 용어를 정의할 것은 아니라 판단됨. 문제는 계속 녹색성장과 개별화되어 제시되는데, 녹색성장과 적응을 차별화해서 갈 것인지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 규정을 바꿔서 한 축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경제와의 연관성을 다루고, 다른 한 축은 기후변화 적응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식으로 갈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음
- 이전 경험을 비추어보면, 연구하는 입장에서 많은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싶어 했지만, 법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본법이기 때문에 너무 구체화된 내용까지 담을 수 없다고 함. 기본법은 크게 위원회, 계획, 주요 권한 및 기능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고

주요 회의 내용

나머지는 시행령에 모두 들어가야 한다는 논쟁을 많이 함. 그렇기 때문에 녹색법에 적응의 내용을 더 담아내고자 한다면 상당수의 내용이 시행령으로 담아질 것으로 판단됨. 기본법이기에 때문에 녹색성장에 적응이 절반 정도는 포함된다는 것만 명시가 되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녹색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후변화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신지영) 기본법이기에 때문에 최소한의 내용만 법에서 제시되고 나머지는 시행령에서 나타나는 것이 성격적으로는 맞는데, 현행법을 자세히 보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내용은 매우 세부적으로 법률상에 들어가 있음. 이를 감안한다면 적응과 관련한 내용도 어느 정도는 세부적으로 법률상에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감축에서 다루고 있는 수준까지는 적응의 내용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최준영) 사실 녹색법 제정 때도 기본법 성격과 맞느냐에 대한 질문은 계속되어 왔음. 녹색법에서 한 가지 부문에 대해 조항을 더 넣으려고 하다 보면 다른 부분들에 대한 내용까지도 건드리게 될 수 있고, 오히려 기본법 성격에 맞게 전체적으로 개정하자는 제안도 나올 것으로 생각됨. 녹색성장이라는 개념하에서 감축, 적응, 이를 통한 경제발전, 교육, 국제협력 등이 다시 한 번 위계를 잡아가야 하는 시점이 되긴 되었는데 엄두가 잘 나지 않는 것이 사실임

○ (최준영)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보면 기존에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법들과 연관성 있는 조항들이 한 줄씩 들어가 있는데 적응이라는 것은 단일 법이 아니라 여러 법에 연관되어 있다 보니 규정을 명확히 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음. 특히 많은 내용들을 법에 추가한다고 해서 다른 개별법들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의문임

- 현재 제시된 개정(안)을 보면 모든 조항에 적응과 관련된 사항이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싶다는 의욕은 보이는데,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골라서 그 내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음. 예를 들어 현재 지자체의 책무와 관련하여 너무 원론적인 내용들만 들어가 있으니 이를 구체화하여 지자체의 적응과 관련한 의무를 강하게 한다든지 해야 개정(안)을 제안할 때 검토하는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개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적응과 관련하여 지자체들의 책임이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적응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지자체가 하는 업무들을 보니 교육이나 과학적 시나리오 등의 관련 내용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

주요 회의 내용

여 이러한 내용들이 개정하고자 한다는 식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어야 하겠음. 타깃을 명확히 하여 1, 2, 3안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음

- 위원회와 관련해선 조금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함, 기후변화 위원회만 따로 만든다면 에너지 등 다른 부문에서도 위원회 구성 요구가 많아질 것임

- 적응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많은 내용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한두 조 정도 신설할 수 있으면 신설하고 핵심적인 개념에 적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감축과 적응이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현실적이라 생각함

○ (김정인) 핵심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동의함.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을 환경부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최준영) 성과를 내고자 한다면 한두 조항 정도 신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적응의 개념을 지자체나 몇 개의 조문에 포함을 시키는 최소한의 성과를 달성한 후에 차후에 필요한 내용을 계속해서 개정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겠음. 적응이라는 것이 전 부처에 걸친 문제이다 보니 이상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안병욱)

- 녹색법 개정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기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파리협정이라 생각함. 파리협정으로 인한 변화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2020년의 감축목표만 있어 2030년 목표 제시 등 변화된 사항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과 적응과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현재의 법률 체계로는 어떤 부분들에 한계가 있으니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제시되어야 하겠음. 즉 전반적으로 왜 개정이 필요한지 제시되어야 함

-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이번 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의 필요성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함

→ (김정인)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관리, 시민교육과 홍보에 대한 내용들을 파리협정과 관련하여 법 개정에 제시해준다면 나름의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최준영) 몇몇 의원실에서 19대 때 이 법을 수정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있었지만 이 법이 너무 여러 부문들에 연관성이 높아서 수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음. 오히려 이 법의 조문들을 나누어서 세분화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많음

주요 회의 내용

- (김정인) 위원회와 관련해서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가 여러 부처들이 함께하면서 거버넌스 체제로 가면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부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굳이 기후변화 위원회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녹색성장위원회를 거버넌스 형태로 강화하는 방식을 제안함
- (이준서)
 - 전략을 다르게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총칙 규정과 관련해서는 적응의 개념을 기존의 대응의 개념에서 조금 분리해서 적응 관련 내용은 모든 부처에서 필요한 것임을 확실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추상적인 적응개념과 방식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를 근거로 적응에 해당하는 48조 및 시행령 38조만 개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함. 총칙의 전부나 각 조문의 적응과 관련된 부분 전부가 아니라 총칙의 일부, 여러 가지 각 조문에서 개정이 필요한 일부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이것이 개정에 용이한 방법이라 생각함
 - 기본법의 성격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한데 현행법 수준을 가이드라인 삼아서 개정(안)을 제시한다면 기본법 성격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함. 지금 시행령에서 있는 내용 중 법령으로 올릴 부분들만 찾아내고, 시행령에서 실제로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하는 방식만 해도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저탄소 개념에 기후변화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기존에 기후변화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으니 이 개념의 하위에 적응의 개념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저탄소 개념 전체를 기후변화와 연결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대응의 개념도 이번 기회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미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는 완화와 적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대응에는 완화와 적응이 포함된다고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완화와 적응의 구분된 논리는 이미 전 부처에서 인지를 하고 있음. 대응보다는 완화와 적응을 구분하자는 개념의 제안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 대응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응의 개념을 강조하려다 보면 대응의 개념을 또 정의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완화와 적응을 분리해서 적응에 중요성을 공론화시키는 것이 어떨지 생각함
 - 정의 부분에서는 적응, 취약성 정도는 다루는 것이 좋겠음. 이 내용들은 다른 부처들에서도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임

주요 회의 내용

- 대응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한다면 적응에 대한 기본원칙을 새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이러한 기본원칙은 개별법을 제정할 경우 필요함. 여기서 일부 추려서 대응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음
- 현재 시행령 제3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몇몇 규정들은 법률상으로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함. 지금 시행령 자체로는 지자체에게 적응과 관련한 의무를 주지 않음. 의무규정으로 해석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음. 적응에 대한 관리를 면밀히 하고자 한다면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 법률로 올라올 필요가 있음
국민의 책무 규정에 '권리를 가진다'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 (최준영) 제48조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한 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나누어서 제48조의 1, 2 등과 같이 세분화하는 실제적인 작업을 하면서 앞쪽의 개념들과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히 하는 전략이 명분과 실리를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함
- (조경두) 법 개정 사유와 필요성에 파리협약과 정책여건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임. 현재의 법상에서 확대 해석할 수 있게끔 유도하면 되는 것과 문구의 조정이 필요한 것, 시행령이나 하위 법령체계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것으로만 나누어 선별해주면 연구자들의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 (전체) 현행법상에서 유지할 수 있는 조항들과 꼭 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음. 현재 2차 포럼 자료에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조항들을 정리해놓았으니 이 조항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보겠음
- 제2조 (정의)
 - 제2조(정의)의 내용에서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음. 영향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면 적응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추가될 수 있겠음. IPCC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 정의나 목표에 대한 조문이 없다면 이와 관련된 조문을 하나 추가하면서 저탄소 기후친화 사회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음. 그런 후에 저탄소 기후친화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면 적응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주요 회의 내용

- 일본은 저탄소 사회를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보고서와 책을 냈는데 이에 저탄소 사회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세밀하게 되어 있음. 이 내용을 참고하여 저탄소 사회라는 것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통해 녹색성장을 달성하는 쪽으로 가면 적응을 담을 수도 있겠음
 - 저탄소는 온실가스와 관련된 내용만 다루고 있으니, 기후친화적 사회라는 것을 제시하면 자연스럽게 적응과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함. 즉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 법의 최상위 개념을 수정하는 것은 다른 부처들의 반대나 저항을 많이 불러올 수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정의보다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적응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의 개념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을 바꾸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적응이 병렬적으로 놓이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후변화 적응의 개념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 안으로 넣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현재의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의 수정이 불가피함
 -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확대 해석과 관련한 부분이 추가될 필요가 있겠음. 이를 수정하고 기후변화 적응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뒷부분 조문들의 수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됨
- ⇒ 정리된 몇 가지 안을 작성해볼 필요가 있겠음

○ 제3조(기본원칙)

- 현재 조항을 그대로 유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주류화를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음.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한다라는 말이 뒤에 있기 때문에 주류화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겠음
 - 기본 원칙의 다른 조항들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수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음
- ⇒ 다음 포럼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음

○ 제4조(국가의 책무)

- 현행 유지

주요 회의 내용

- 제5조(지자체의 책무)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내용 추가 필요
- 제6조(사업자의 책무)
 - 공공기관의 적응보고제도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표 중에 하나임
 - 기본법에는 선언적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정 대상을 언급하거나 관련 내용을 제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시행령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한계는 여전하다고 생각함
- 제7조(국민의 책무)
 - 국민의 책무에는 적응과 관련한 항목을 하나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 국민의 권리와 관련한 규정은 추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제9조(국가전략)
 - 현행 유지
- 제14, 15조(위원회)
 - 수정 필요. 향후 포럼을 통해 계속 논의
- 제30조(조세)
 - 이번에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음
- 제38조(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 적응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겠음
- 제40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현행 유지
-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 조문을 나누어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 회의 내용

○ 제51, 52, 55조

- 이 세 개 조항은 다른 부처와 연관성이 많은 조항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 모두 수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59, 61, 63조

-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함
- 제63조는 파리협정과 관련한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음

○ 3차 포럼은 6월 16일(목) 오전에 하는 것으로 합의함

- 차기 포럼 진행을 위해 법 개정의 필요성, 정의 부분의 개정(안), 현행법에서 추가되어야 할 항목 및 내용, 법령 제48조·시행령 제38조의 내용 세분화(안) 등을 정리 및 준비



<그림>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2차) 전경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3차) 결과

(2016. 7. 19 KACCC)

1. 개 요

- (일시/장소) 2016.7.8(금) 10:00~12:00 /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산천 회의실)
- (참석자) 환경부, KEI KACCC, 법제 자문위원 등 8명
 - (환경부) 강효운 주무관, (KEI KACCC) 신지영 박사, 이승한 연구원, 배재영 연구원, 조경두(인천 발전연구원), 안병옥(기후행동연구소), 김정인(중앙대), 최준영(국회입법조사처)
- (논의 안건)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필요성 및 현행 법조문 수정·보완(안) 논의

2. 주요 논의사항

□ 개정 필요성

- (국제적 여건 변화) 파리협정으로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제적 정책 여건을 반영한 국내 적응정책의 이행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적응에 대한 전 지구적 목표를 설정하고 적응의 역할과 원칙 제시
 -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주기적 보고 명시, INDC를 통해 장기적인 적응 목표와 전략 제출
- ⇒ 기후변화와 관련한 여건 변화와 이와 연계한 적응정책 필요성 강조로 접근

□ 법상 ‘적응’ 의 위치

- ‘녹색성장’ 은 감축과 적응 개념을 포괄함
 - (현행) 녹색법 제1조(목적)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
 - 제38조(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적응’ 개념 포함
 - (한계) 녹색성장의 정의에서 감축 이 주된 내용으로 개정 시 ‘적응’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강화가 필요
 - ⇒ 현재 정의에서 적응의 개념을 확장하는 수준으로 개정(안) 마련

□ 주요 개정(안) 내용

- (개정 추진 조문) 2차 포럼 시 적응 관련 12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 마련을 검토 하였으나, 3차 포럼에서 개정 필요 조문을 8개로 압축

- 정의(제2조), 지자체·사업자·국민의 책무(제5,6,7조), 위원회(제15조),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제38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제48조), 교육·홍보(제59조)에 대한 개정 검토
 - ※ 3차 포럼 시 개정(안) 제외 항목(4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제3조),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4조), 국제협력(제61조), 국가보고서 작성(제63조)
- (용어 정의) 녹색성장의 정의에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적응 개념과 “기후변화 영향” 및 “기후변화 취약성”의 정의를 추가함
 - ⇒ 녹색성장 정의에 적응의 개념 추가는 바람직함. 다만, 기후변화 영향이나 기후변화 취약성의 정의 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검토 필요
 - ※ 기후변화 취약성: 환경·경제·사회 시스템이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민감한(노출된) 정도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정도
- (지자체의 책무)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을 추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수립·시행에서 기후변화 적응 관련 고려사항을 구체화
- (사업자의 책무) 기후변화 원인물질 배출 감소와 더불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취약성을 낮추도록 적응 관련 고려사항을 구체화
- (국민의 책무) 녹색 생활에 대한 표현이나 정의 추가 검토 필요
- (위원회의 기능) 기능 강화 필요 사항 등에 대한 개정(안) 마련 필요
 - ⇒ 위원회의 기능 중 기능 강화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의 필요성과 연계하여 접근하면 부처 협의 시 개정(안)에 대한 시너지 효과 기대
-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적응의 국민인식 확산과 위상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등 내용을 추가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적응 관련 조항(제48조)의 개정 시 녹색법 개정의 핵심 사항을 담아야 할 것임
 - ⇒ (예) 공공기관 적응 보고제, 지자체 적응 분야 이행 강화 방안 등

3. 향후 계획

- 4차 법제화 전문가 포럼 개최(8월 중)
 - 녹색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대책의 추진) 조항에 대한 개정(안) 세부 논의 및 검토

* 붙임 회의록 1부, 끝

[※ 불임]

회의록

(작성: KEI KACCC)

회의명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3차)
일 시	2016년 7월 8일, 10:00 ~ 12:00
장 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산천 회의실
참석자	환경부 - 강효윤 KACCC - 신지영, 이승한, 배채영 전문가 - 김정인(중앙대학교),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경두(인천발전연구원), 최준영(국회입법조사처)

주요 회의 내용

□ 2차 포럼 이후 수정·보완 사항 및 3차 포럼 주요 논의 사항 설명

○ KACCC 신지영

- 녹색법 개정 필요성 1, 2, 3안을 제시함. 1안은 파리협정과 관련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적응의 개념과 중요성이 감축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강조함. 2안은 최근의 극한기상 및 이상기후 발생 증가와 관련 피해 심화로 인한 적응에 대한 관심 고조와 적응에 대한 국민요구 증가를 강조함. 3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 추진을 위한 기반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녹색성장 내에 '적응'의 개념을 어떻게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함. 녹색성장의 개념을 분석한 결과 녹색성장은 기본적으로 '환경친화적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환경훼손과 함께 강조하고 있었음. 녹색성장을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핵심 성공요소를 분석해보면,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요소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함께 명시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정책상 녹색성장은 감축과 적응의 개념을 함께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 단 녹색성장 현행 법령은 '저탄소'의 '감축'이 주된 내용으로 개정 시 '적응'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령 개정에서 '적응' 개념의 위치 설정을 제시함.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조(목적)을 확인해본 결과 제38조 제5항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적응'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저탄소(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용어)는 현재 명시된 개념 그대로 유지하고, 녹색성장(온실

주요 회의 내용

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포괄하는 용어)는 현재 명시된 수준에서 개념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 적응법안 추진전략은 녹색법의 기후변화 적응에 관련 사항 추가, 수정, 삭제하는 일부 개정을 목표로 함. 기본개념·원칙 등 기본전제와 과학기반 마련→정책수립→정책시행→모니터링의 적응정책 과정 및 적응 이행·역량기반을 고려하고자 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 적응 관련 조문은 17개이며 이 중 실제 적응 내용은 1개 조문(제48조)에 해당함. 현행 63개 조문 중 적응과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한 조문은 적응 관련 조문 17개 중 10개 조문으로 2, 5, 6, 7, 15, 38, 48, 59, 61, 63조임, 세부적인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주기 바람

□ 논의 내용

- (신지영) 일부 내용 개정으로 추진전략을 세웠지만, 적응의 개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많은 내용들에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그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은지 의문이 생김
- (강효윤) 보통 법 개정할 때 많은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하고, 이후 관련 부처나 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내용이 삭제, 조정, 보완됨. 그럴 때 이번 법 개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 또는 최소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하고 이를 유지하면서 협의해 가는 것이 필요하겠음
- (최준영)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 (강효윤) 전략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아직 논의 중에 있음. 국무조정실에서 녹색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임
- (최준영) 정부입법으로 진행하기에는 현재의 개정(안)은 다소 어려움이 많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는 문구 조정의 수준이지 핵심 내용의 변화나 추가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오히려 의원입법으로 가는 것이 쉬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19대 국회에서는 녹색법을 바꾸어보자는 논의들이 많았지만, 20대에서는 아직 논의가 없음. 현재 개정안만 올라갈 경우 국회 내에서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신지영) 국회 기후변화적응포럼과 협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음

주요 회의 내용

- (안병욱) 현재 제시된 안은 논란이 될 내용은 없다고 판단됨. 법률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 하나는 구속력인데 지금 제시된 내용에서는 구속력 부분에서 기존의 법과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다고 판단됨.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겠음
- (신지영) 적응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은 제48조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4차 포럼부터 다루고자 함
- (안병욱) 정의 부분 개정에서 녹색성장의 내용에 기후변화 적응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별도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 안에 완화, 적응의 내용을 동시에 담아주는 것이 필요하겠음. 16, 17조 내용이 추가되는 것은 좋은 것으로 판단되나 16조의 경우 '모든 변화의 결과'라는 것은 어감이 좀 어색함. '모든 영향을 말한다'라고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민감한'보다는 '노출된'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음
- (조정두)
 - 기본법 내에서 적응과 관련한 하위 법령에서 들어갈 내용과 기후변화대응법이 있고 적응의 내용을 다루는 두 가지의 경우 문구의 세분화나 구체성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후변화 대응법을 추진할 당시 매우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다루고자 했었음. 적응법의 제정이 어려우니까 기본법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은 담아주게 하고, 하위 법에서 다룰 것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찾아가는 전략을 선택하다 보니, 기본법적 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을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오히려 다른 법률들과 영역에 대한 부분이나 중복된 표현들이 담기지 않는지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저탄소녹색성장법」이 만들어질 때도 그랬지만, 시간적 범위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함. 예를 들어 정부의 행위에서 재해에 대한 방재에 대한 역할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역할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경계가 불명확함. 방재나 국민안전처의 시각에서 현재 법 개정(안)을 봤을 때, 그쪽에서 기존에 만들어놓은 법 내용이나 개념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새롭게 '기후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조금 더 선언적인 정의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됨
 - 정부의 역할에서도 보통의 기본법에서 중앙, 광역, 기초 지자체를 구분하지 않는데, 현재는 중앙, 지자체를 구분하거나, 각 장들을 강조하면서 병렬적으로 제시한 부분들이 있음. 이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주요 회의 내용

- 국민의 책무에서 ‘국민녹색생활’이라는 내용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참여, 협력, 지원 등의 내용이 뒤에서 제시가 되기 때문에 국민녹색생활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기본원칙과 관련해서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고려, 정보의 투명성은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제외했을 때 이러한 내용은 정부의 모든 부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이라 생각됨. 굳이 적응과 관련한 내용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생김

○ (김정인)

- 국무조정실이 법 개정에 강한 의지가 없다고 봤을 때, 왜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을 법 곳곳에서 확인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음. 파리협정과 관련한 내용을 좋은 것으로 판단됨. 국제 추세가 이러한테 이러한 추세가 법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녹색성장기본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한 확인을 했을 때, 기업들의 시정 및 권고 등의 내용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 분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4 ~ 5명밖에 되지 않음. 이러한 인원을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 전반의 내용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음, 실제로 기후변화위원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적응계획을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적응계획에 대한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있게 수립이 되었는지, 적응대책 수립에 대한 평가는 잘 되고 있는지,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가 이루어져 왔는지 등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겠음
- 기후변화 적응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우들에 대한 부각이나, 예를 들어 홍천의 에너지 자립마을 등은 대표적인 기후변화 적응의 예라고 제시될 수 있는데 부각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큰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종합하여 제시한다면 개정에 대한 설득력이 높아지고, 개정 필요성의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파리협정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호주나 다른 나라들은 기후변화 위원회를 따로 두기도 하고, 영국, 파리, SDG 등의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현 상황에 대한 부족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을 통한 의원입법 방안이 현실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포럼에서 보좌관이나 의원과 함께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계속적으로 주도하면서 시도를 계속해가는 것이 필요하겠음

주요 회의 내용

○ (최준영)

- 정부입법의 경우 많은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내용이 삭제될 수 있음. 현재 제시된 내용들을 보면 구속력 부분들보다는 선언적 내용들에 대한 개정이고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쉽게 통과할 수도 있겠지만 ‘왜 바뀌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
- 현재 제시된 내용들을 포함하여 제48조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여 큰 틀을 우선 제시한 후에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음

○ (신지영) 제48조의 관련 내용에서 현행법의 문제점 관련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48조는 시행령 수준에서 법률 수준으로 올라와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며, 공공기관적 응보고제도나 기금 등의 내용은 전혀 없음.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 제시는 다음 포럼에서 작성 및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현재의 제48조의 내용 중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것과 현행을 유지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들을 구분해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제48조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세부내용들 중 서로 엮거나 분리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의견들을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법률 수준에 둘 것인지, 시행령 수준에 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음
- (안병옥) 녹색법은 기본법이라는 법명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시행규칙에 어울릴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됨.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도 판단이 쉽지 않음

○ (안병옥) 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들추다 보면 국조실에서부터 반대할 수도 있음.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이번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관철하고자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음. 예를 들어 공공기관보고제도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설립 근거,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이번 개정을 통해 관철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음

○ (최준영) 새로운 내용이 제48조에 추가가 되어야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나머지 내용은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 제48조의 내용 중 공백상태로 있는

주요 회의 내용

내용을 하나 추가하면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필요하겠음.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적응 보고제도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 (김정인)

- 국무조정실의 입장에서 조정의 역할, 규제 성격 지니는 내용을 추가해준다면, 국무조정실의 반대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함. 온실가스정보센터가 국무조정실 소관이 된 것이 하나의 촉발제가 될 수 있음. 적응과 관련한 점검, 보고, 심사 등의 권한을 국무조정실이 가지게 되면 반대가 적을 것임
- (신지영) 예를 들면 광역지자체만 의무를 가지다가 기초지자체로 의무가 확장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엄청 컸었음. 공공기관을 넣는 것도 이를 감안한다면 조심스러움
- (최준영, 김정인)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를 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확인하고, 보고하는 것이 필요함. 기존에 해오던 기후변화 적응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큰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 수도 있음. 기재부가 정부투자기관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 평가의 평가항목 중 하나로 적응을 포함시킨다면 공공기관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예상됨

○ (안병욱) 공공기관 적응보고제도를 이번 개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생각하고 진행한다면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관할하는 것이 인프라임. 인프라는 기후변화 적응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중요 요소라 생각함. 개정 필요성 부분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인프라 손실 등의 내용을 담아주고 이러한 손실 및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개정의 설득력을 더욱 커질 수 있겠음

- (김정인) 이러한 내용이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굳이 부정적인 내용으로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안병욱)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평가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하게 되어 있는지?

- (신지영) 이에 대한 시스템을 현재 정립 중에 있음. 지자체가 자체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하고 이를 환경부에 보고하면 환경부가 이를 종합하고 이후에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음
- (조경두) 이러한 방식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명확히 없다 보니, 행정적인 문서만 오고가는 경우가 많음. 실제적 평가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좋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량적 지표가 필요한데, 적응에서는 이러한 정량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음

주요 회의 내용

- (안병욱) 적응 보고를 환경부 장관에게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더해서 평가 결과를 관련 의회에 보고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의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한다면 행정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업무를 할 것으로 판단됨
- (신지영) 적응의 특성상 평가를 하더라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 보니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드물게 됨
- (조경두) 두 가지 방법 있을 수 있음. 『수도권대기특별법』의 경우 매년 환경부가 실적평가를 하고, 3년에 한 번 국회보고를 하게 함. 기후변화 관련 조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조례가 있는 경우 지방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음. 이러한 내용을 법에서 어느 정도 통합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들의 내용을 묶어준다면 조금 더 긴장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겠음. 이를 모아서 국회에 까지 보고하게 한다면, 행정적으로는 부담일 수 있지만 평가를 당하는 입장에서 계속 긴장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됨
- (신지영) 이번 법 개정의 목표를 세 가지로 좁힐 수 있겠음. 공공기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내용 강화와 적응위원회임
- (강효윤) 현재 환경부 내부적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내용이 있음. 지금 제시된 공공기관, 지자체 관련 내용과 정책적 주류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적응기금이나 행정적 지원 관련 내용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리고 싶은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문이 생김
- (최준영, 김정인) 다른 부분들은 현재 개정안으로 제시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에서 다루고,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관련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는 것이 필요하겠음
- (조경두) 진행하면서 한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과위원회나 조직체계들이 기존에는 각 부처들과 1:1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연결이 어려운 상황임. 독립적 분과나 과를 해당 부처로 명확하게 연결해 놓지 않으면 이러한 내용을 만들어 놓고, 이후에 다른 부처가 역할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조경두) 법 개정 내에서 다른 부분들은 협의 과정에서 포기해도 되는 부분들로 두고, 초점을 맞춰서 지켜야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주요 회의 내용

- (김정인) 이미 인프라 관련 기관들에서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 문제점들을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내용이 제시된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내용이 이번 법 개정에서 과급영향이 클 수 있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감축은 제한, 규제 등의 내용이 주가 되고 있지만, 적응은 법의 내용에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주가 된다면 관련 co-work이 많아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음
- (안병욱) 적응보고제도가 법제화된다면 국제적으로도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음. 기관들이 적응을 잘 안 했을 때 반대급부, 피해의 내용들이 필요성에서 언급될 수 있겠음
- (정리)
 - 다음 시간에는 제48조 개정안을 위주로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합의함. 제48조의 1, 2를 만들어서 논의해 가는 방법이나 주제별로 분류해서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을 수 있겠음
 - 다음 회의 일정은 8월 26일(금) 오후 4시에 같은 장소에 하는 것으로 합의함



<그림> 기후변화 적응법제 강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3차)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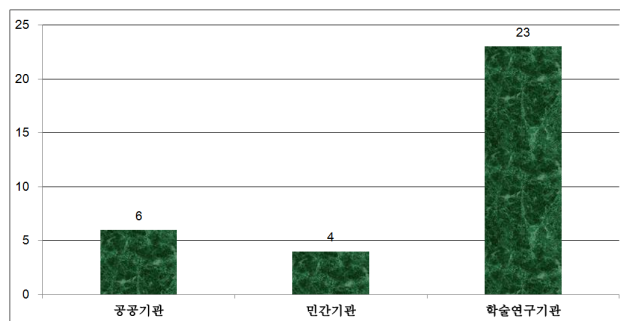
[부록 3] 기후변화 적응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설문) 결과¹³⁾

I. 조사 개요

기후변화 적응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후변화 대응에서 적응정책의 비중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수준에 대한 평가
-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평가
-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성과 및 개선점
-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법·제도에 대한 평가
- 적응법제 개선 시 가장 바람직한 법률 제·개정 방안
- 적응법제 개선 시 우선적으로 수정되거나 신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입식 온라인 설문으로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 전문가 선정 과정에서 크게 학술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기업, NGO, 언론 등)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설문 대상 전문가 선정 시 다양한 전공 및 업무 분야가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응답자 수는 33명이었는데, 학술연구기관 23명, 공공기관 6명, 민간기관 4명으로 구성되었다(그림 1).



[그림 1] 설문 대상 전문가가 속한 기관의 유형별 분포(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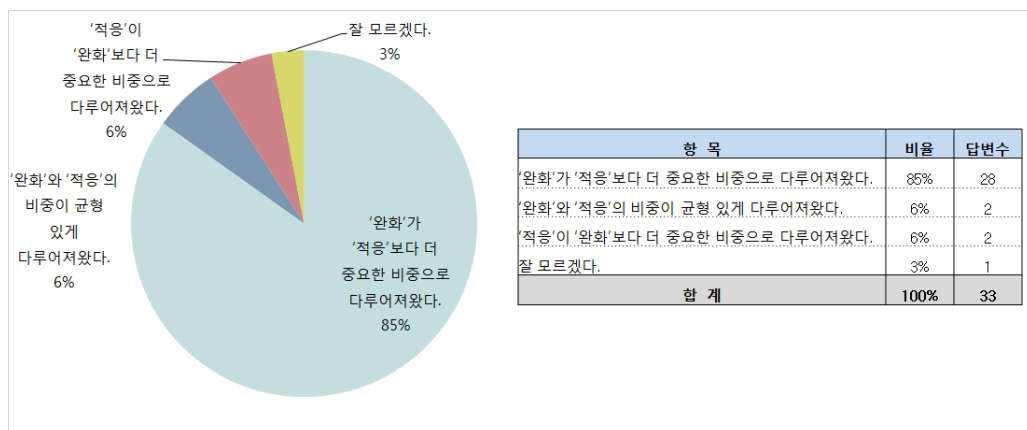
13) 본 연구와 관련하여 전문가 활용으로 진행된 “국회 기후변화정책연구소, 2016, 기후변화 적응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내용을 실음.

II. 조사 결과

설문 문항은 총 18개(본 문항 16개 + 파생 문항 2개)으로 구성되었다. 문항별 응답 분포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0년간 ‘적응’과 ‘완화’의 상대적 비중(국제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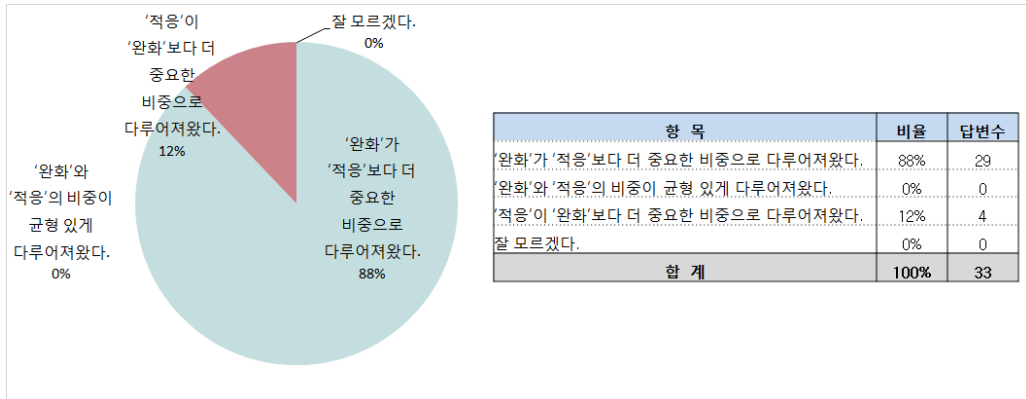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적응’과 ‘완화’의 상대적 비중에 대한 평가는 <‘완화’가 ‘적응’보다 더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왔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85%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완화’와 ‘적응’의 비중이 균형 있게 다루어져왔다>는 의견과 <‘적응’이 ‘완화’보다 더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왔다>는 의견은 각각 6%에 그쳤다(그림 2).



[그림 2]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적응’과 ‘완화’의 상대적 비중(현재)

2. 최근 10년간 ‘적응’과 ‘완화’의 상대적 비중(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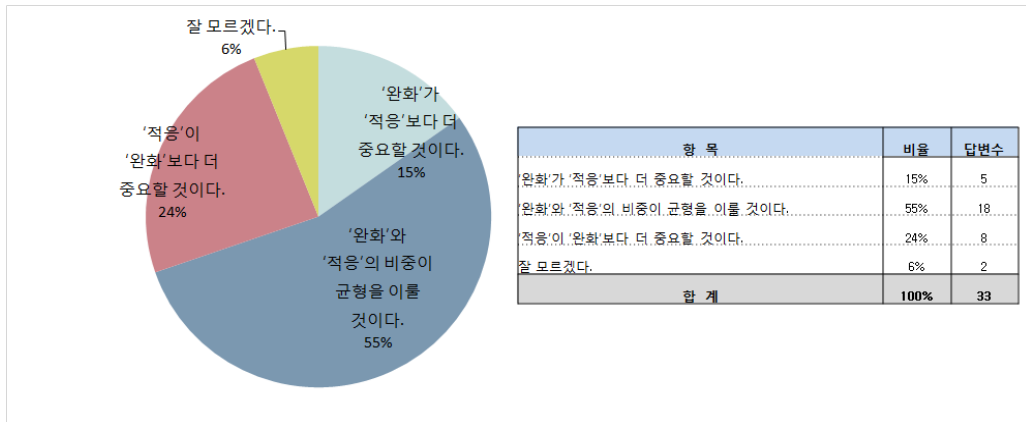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적응’과 ‘완화’의 상대적 비중에 대한 평가는 <‘완화’가 ‘적응’보다 더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왔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88%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완화’와 ‘적응’의 비중이 균형 있게 다루어져왔다>는 의견은 0%, <‘적응’이 ‘완화’보다 더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왔다>는 의견은 12%로 조사되었다(그림 3).



[그림 3]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적응'과 '완화'의 상대적 비중(현재)

3. 2030년경 '적응'과 '완화'의 상대적 비중(국제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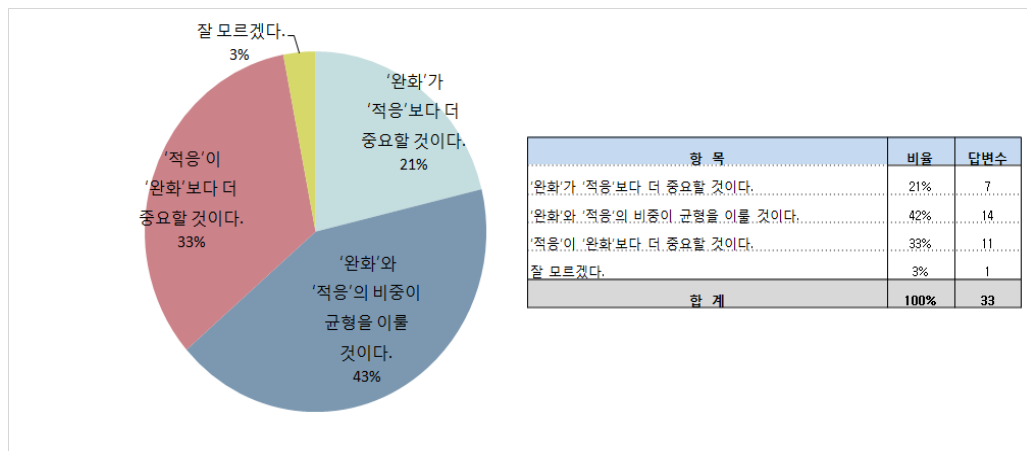
2030년경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적응'과 '완화'의 상대적 비중에 대한 예상은 <'완화'와 '적응'의 비중이 균형을 이룰 것이다>라는 응답이 55%로 가장 많았다. <'완화'가 '적응'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와 <'적응'이 '완화'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는 응답률은 각각 15%와 24%였다(그림 4).



[그림 4] 2030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적응'과 '완화'의 상대적 비중

4. 2030년경 ‘적응’과 ‘완화’의 상대적 비중(우리나라)

2030년경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적응’과 ‘완화’의 상대적 비중에 대한 예상은 <‘완화’와 ‘적응’의 비중이 균형을 이룰 것이다>라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다. <‘완화’가 ‘적응’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와 <‘적응’이 ‘완화’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는 응답률은 각각 21%와 33%였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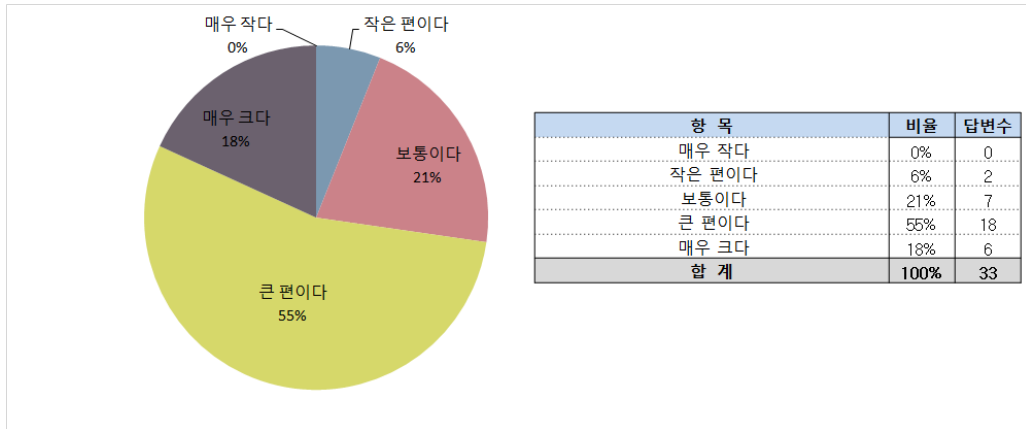
[그림 5] 2030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적응’과 ‘완화’의 상대적 비중

5-1.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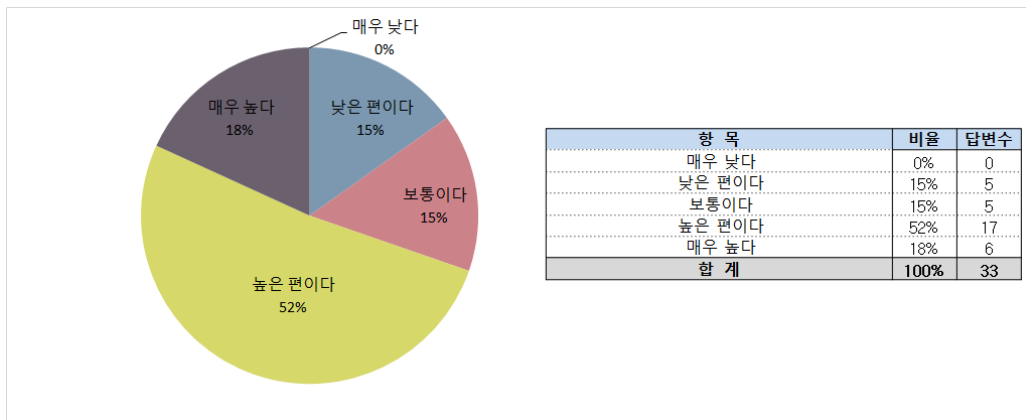
응답자의 73%가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견해인 반면(“큰 편이다” 55%, “매우 크다” 18%), 영향이 작다는 의견은 6%에 불과했다(“작은 편이다” 6%, “매우 작다” 0%). “보통이다”는 21%였다(그림 6).

5-2.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의 70%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높은 편이다” 52%, “매우 높다” 18%), 낮다는 의견은 15%였다(“낮은 편이다” 15%, “매우 낮다” 0%). 기후변화 취약성이 “보통이다”는 의견은 15%였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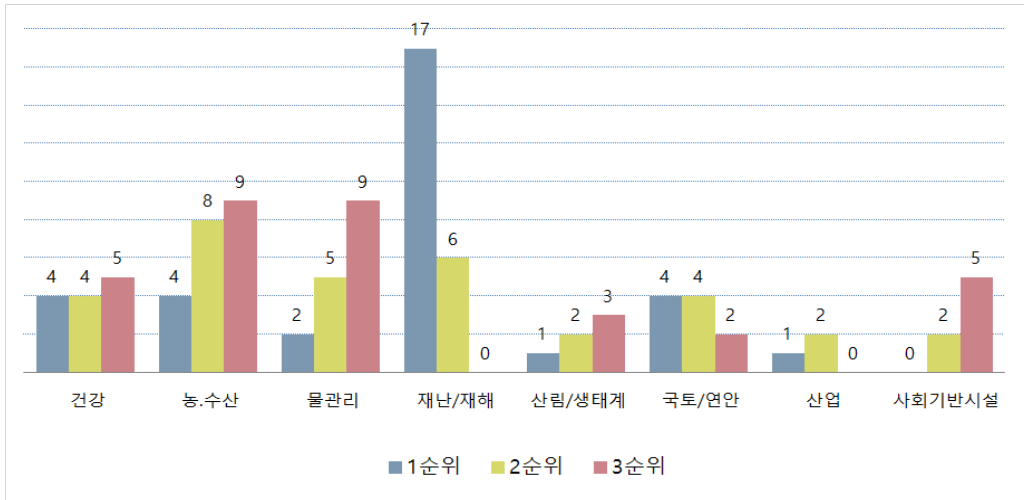
[그림 6]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그림 7]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평가

6.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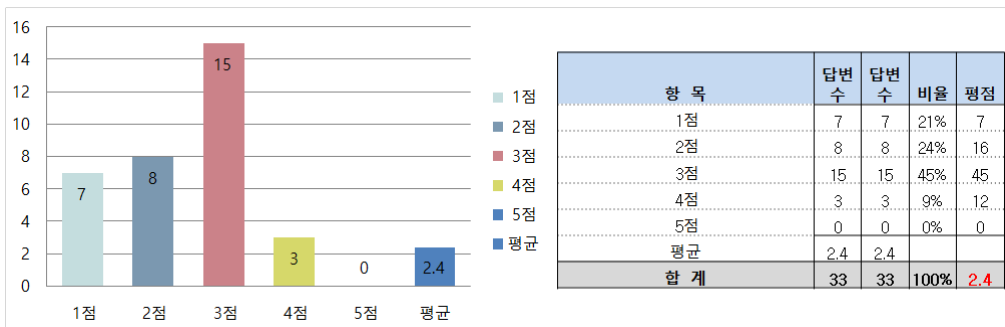
응답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재난/재해’(1순위: 17, 2순위: 6, 3순위: 0) > ‘농수산’(1순위: 4, 2순위: 8, 3순위: 9) > ‘물관리’(1순위: 2, 2순위: 5, 3순위: 9)을 꼽았다(그림 8).



[그림 8]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부문

7.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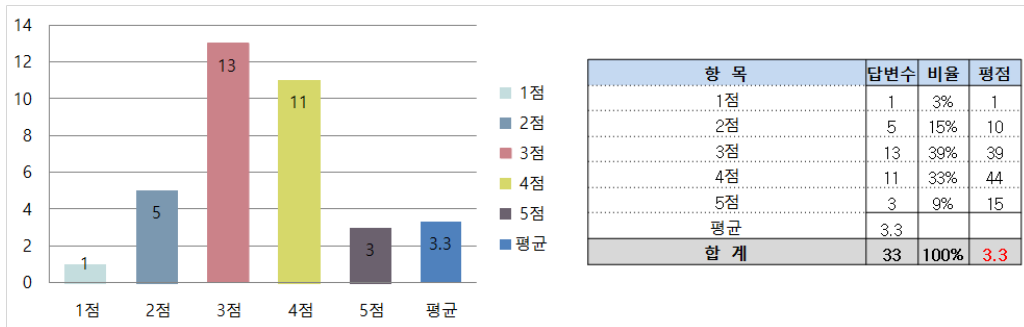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 상황을 1~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3점(45%), 2점(24%), 1점(21%)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4점(9%)과 5점(0%)의 합계는 9%에 불과했다. 평균은 2.4점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 상황을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9).



[그림 9]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 상황

8-1.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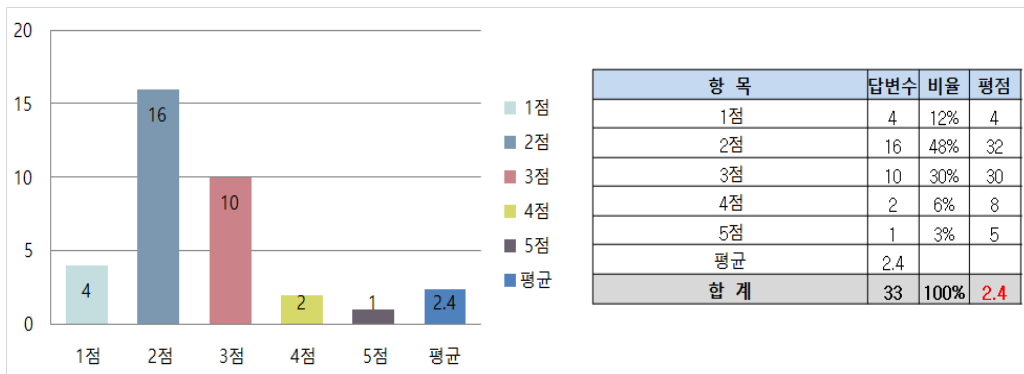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대한 평가에서는 3점(39%), 4점(33%), 5점(9%)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1점과 2점은 각각 3%와 15%였다. 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



[그림 10]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대한 평가

8-2.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시행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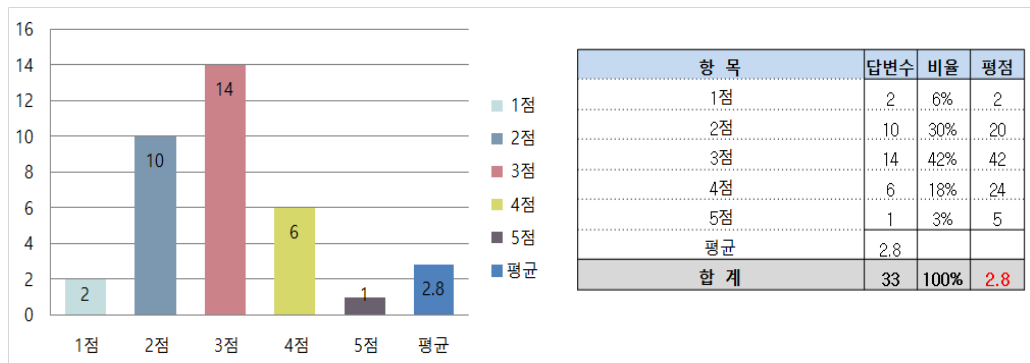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시행에 대한 평가에서는 2점(48%), 3점(30%), 1점(12%)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4점과 5점은 각각 6%와 3%에 불과했다. 평균은 2.4점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시행에 대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



[그림 11]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시행에 대한 평가

9-1.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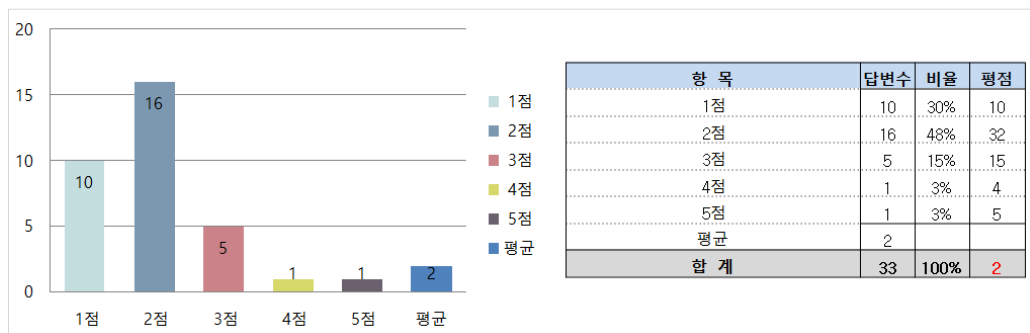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대한 평가에서는 3점(42%), 2점(30%), 4점(18%)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1점과 5점은 각각 6%와 3%였다. 평균은 2.8점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대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12).



[그림 12]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대한 평가

9-2.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정책 시행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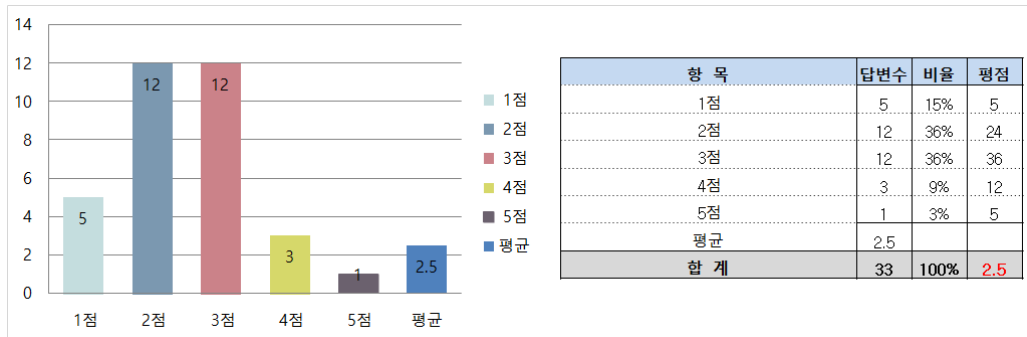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정책 시행에 대한 평가에서는 2점(48%), 1점(30%), 3점(15%)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4점과 5점은 각각 3%였다. 평균은 2.0점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정책 시행에 대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3).



[그림 13]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정책 시행에 대한 평가

10-1.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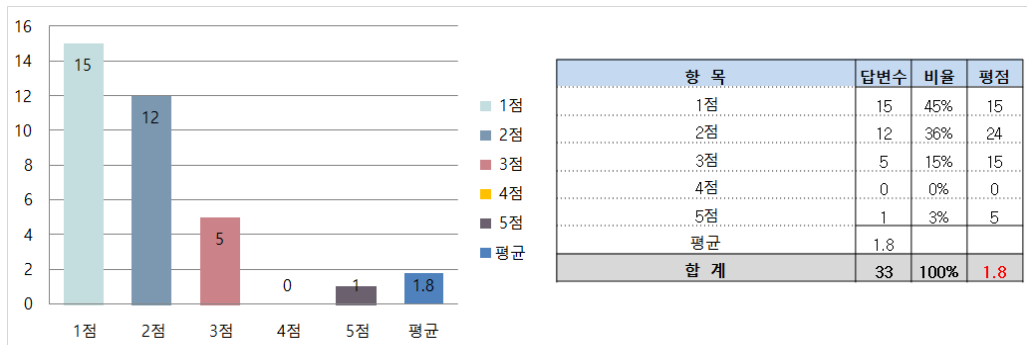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대한 평가에서는 2점과 3점이 각각 3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그다음으로는 1점(15%), 4점(9%), 5점(3%)의 순이었다. 평균은 2.5점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대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14).



[그림 14]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대한 평가

10-2.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정책 시행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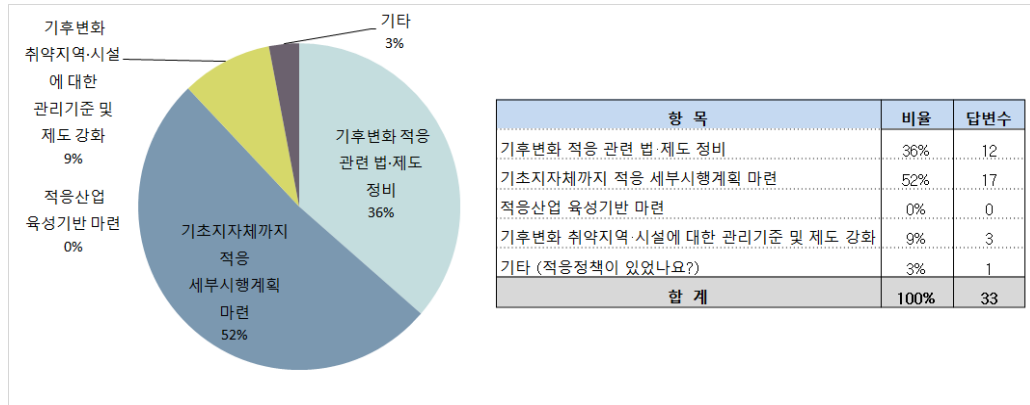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정책 시행에 대한 평가에서는 1점(45%), 2점(36%), 3점(15%)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4점과 5점의 합계는 3%에 불과했다. 평균은 1.8점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정책 시행에 대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15).



[그림 15]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정책 시행에 대한 평가

11.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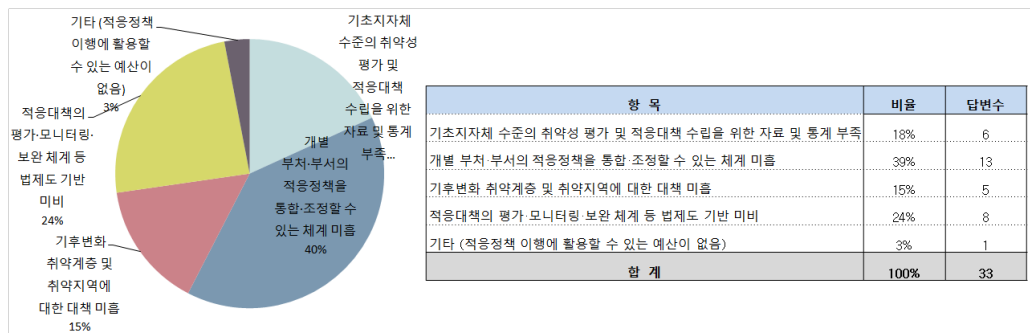
적응정책의 성과에 대해 응답자의 52%는 <기초지자체까지 적응 세부시행계획 마련>을, 36%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제도 정비>를 꼽았다. <적응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으며, <기후변화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및 제도 강화>의 응답률은 9%였다(그림 16).



[그림 16]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성과

12.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문제점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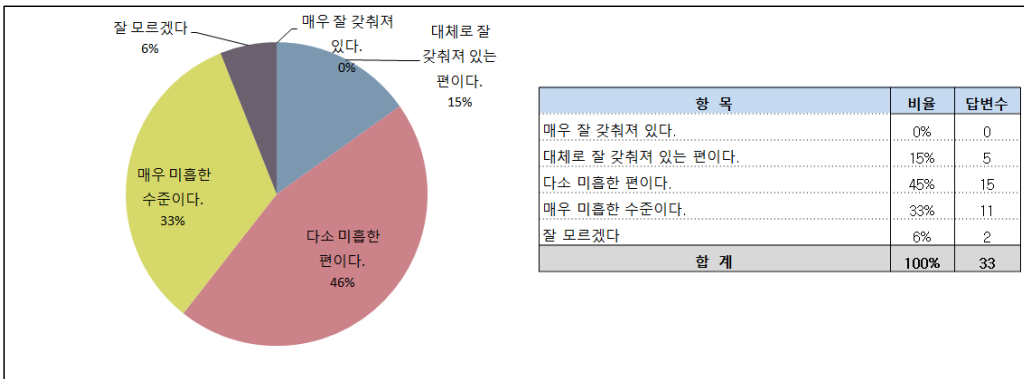
적응정책의 문제점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 응답자의 39%는 <개별 부처·부서의 적응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체계 미흡>, 24%는 <적응대책의 평가·모니터링·보완 체계 등 법제도 기반 미비>를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취약성 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 및 통계 부족>(18%),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미흡>(15%)의 순이었다(그림 17).



[그림 17]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문제점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

13.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법·제도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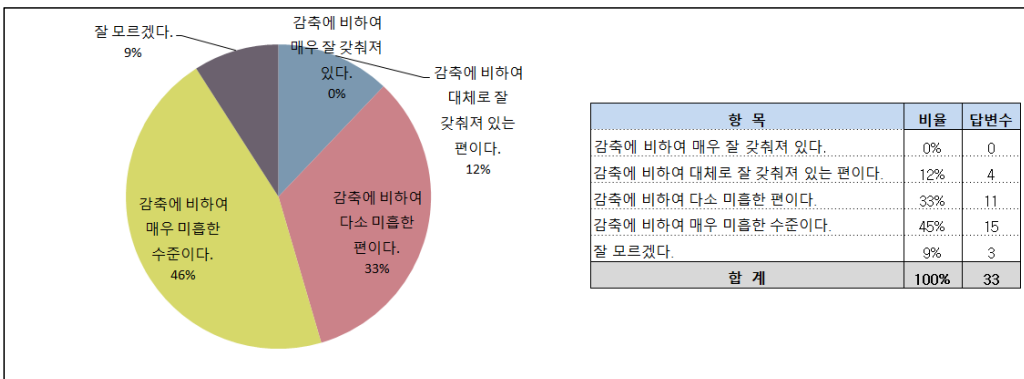
기후변화 적응 법·제도에 대한 평가의 경우 응답자의 78%는 ‘미흡하다’(다소 미흡: 45%, 매우 미흡: 33%)고 답한 반면,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는 15%(매우 충분: 0%, 대체로 충분: 15%)에 그쳤다(그림 18).



[그림 18] 기후변화 적응 법·제도에 대한 평가

14.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의 법·제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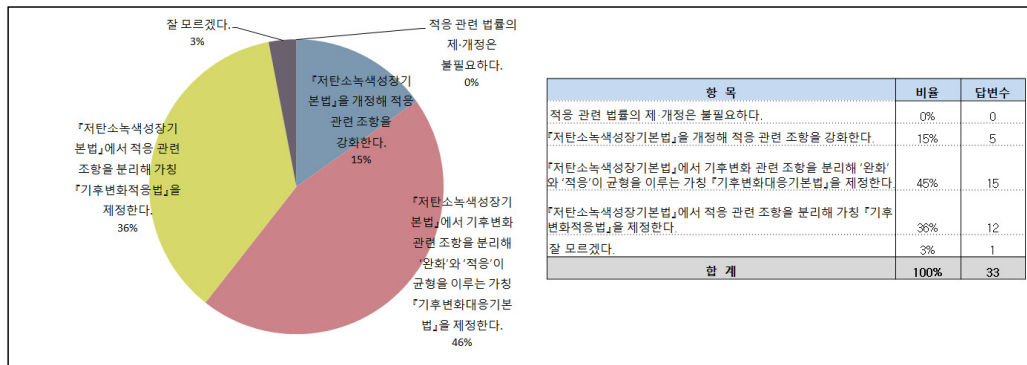
응답자의 78%는 감축에 비해 적응분야의 법·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매우 미흡: 45%, 다소 미흡: 33%). ‘감축에 비해 잘 갖춰져 있다’는 응답은 12%(매우 충분: 0%, 다소 충분: 12%)에 그쳤다(그림 19).



[그림 19]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의 법·제도 비교

15. 기후변화 ‘적응’ 법·제도 개선방안

기후변화 ‘적응’ 법·제도 개선방안의 경우 응답자의 45%가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을, 36%가 <기후변화적응법 제정>, 15%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 관련 법률 제·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전무했다(그림 20).



[그림 20] 기후변화 ‘적응’ 법·제도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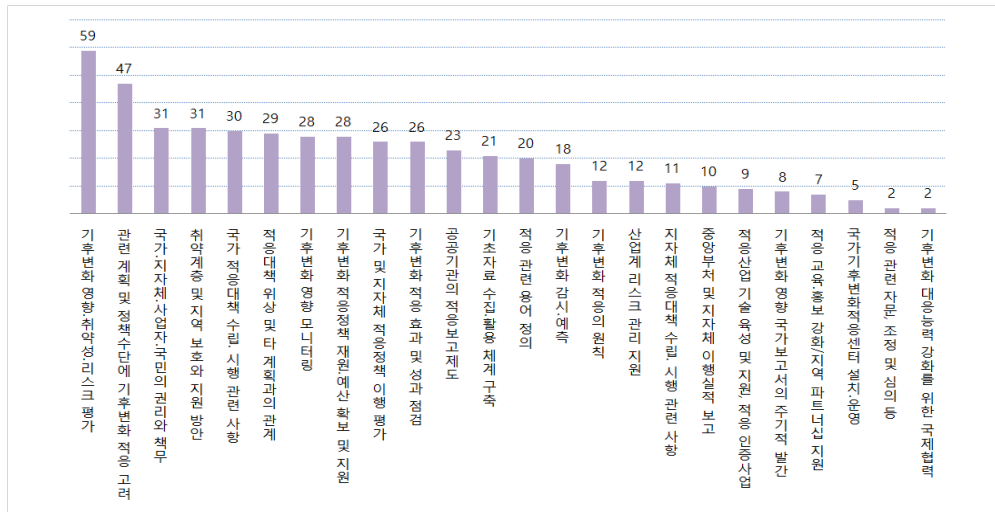
16. 기후변화 적응 법제 개선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기후변화 적응법제 개선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수정되거나 신규 포함되어야 할 내용(1~5순위)의 경우, 응답자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기후변화 영향·취약성·리스크 평가>와 <관련 계획 및 정책수단에 기후변화 적응 고려(적응 주류화)>를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국가·지자체·사업자·국민의 권리와 책무>,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보호와 지원 방안>, <국가 적응대책 수립·시행 관련 사항>의 순이었다(표 1, 그림 21).

[표 1] 기후변화 적응 법제 개선 시 포함해야 할 내용

No.	항 목	총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	기후변화 영향·취약성·리스크 평가	59	6	1	5	3	4
15	관련 계획 및 정책수단에 기후변화 적응 고려	47	5	3	2	1	2
3	국가·지자체·사업자·국민의 권리와 책무	31	4	1	2	0	1
16	취약계층 및 지역 보호와 지원 방안	31	0	3	5	1	2
9	국가 적응대책 수립·시행 관련 사항	30	3	3	1	0	0
8	적응대책 위상 및 타 계획과의 관계	29	3	2	2	0	0
5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28	1	3	1	4	0

No.	항 목	총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2	기후변화 적응정책 재원·예산 확보 및 지원	28	1	2	4	0	3
11	국가 및 지자체 적응정책 이행 평가	26	1	1	2	4	3
14	기후변화 적응 효과 및 성과 점검	26	2	2	0	4	0
17	공공기관의 적응보고제도	23	1	1	3	2	1
7	기초자료 수집·활용 체계 구축	21	0	2	2	1	5
1	적응 관련 용어 정의	20	4	0	0	0	0
4	기후변화 감사·예측	18	2	1	1	0	1
2	기후변화 적응의 원칙	12	0	3	0	0	0
18	산업계 리스크 관리 지원	12	0	2	1	0	1
10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시행 관련 사항	11	0	1	1	2	0
13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이행실적 보고	10	0	2	0	0	2
19	적응산업 기술 육성 및 지원, 적응 인증사업	9	0	0	1	3	0
12	기후변화 영향 국가보고서의 주기적 발간	8	0	0	0	3	2
21	적응 교육·홍보 강화/지역 파트너십 지원	7	0	0	0	2	3
24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설치·운영	5	0	0	0	2	1
20	적응 관련 자문, 조정 및 심의 등	2	0	0	0	0	2
23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2	0	0	0	1	0
합 계		495	33	33	33	33	33



[그림 21] 기후변화 적응 법제 개선 시 포함해야 할 내용

<기후변화 적응법제 개선방안 마련> 설문

I. 기후변화 적응정책 일반

1. 최근 10년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의 상대적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 ① ‘완화’가 ‘적응’보다 더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왔다.
- ② ‘완화’와 ‘적응’의 비중이 균형 있게 다루어져왔다.
- ③ ‘적응’이 ‘완화’보다 더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왔다.
- ④ 잘 모르겠다.

2. 2030년경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비중은 ‘완화’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완화’가 ‘적응’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 ② ‘완화’와 ‘적응’의 비중이 균형을 이룰 것이다.
- ③ ‘적응’이 ‘완화’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 ④ 잘 모르겠다.

3.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의 상대적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 ① ‘완화’가 ‘적응’보다 더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왔다.
- ② ‘완화’와 ‘적응’의 비중이 균형 있게 다루어져왔다.
- ③ ‘적응’이 ‘완화’보다 더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왔다.
- ④ 잘 모르겠다.

4. 2030년경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비중은 ‘완화’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완화’가 ‘적응’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 ② ‘완화’와 ‘적응’의 비중이 균형을 이룰 것이다.
- ③ ‘적응’이 ‘완화’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 ④ 잘 모르겠다.

II.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5. 우리나라가 받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은 어떤 수준으로 평가하십니까? (해당하는 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기후변화의 영향	매우 작다	작은 편이다	보통이다	큰 편이다	매우 크다
기후변화 취약성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6.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문을 순위별로 3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건강
- ② 농·수산
- ③ 물 관리
- ④ 재난/재해
- ⑤ 산림/생태계
- ⑥ 국토/연안
- ⑦ 산업
- ⑧ 사회기반시설
- ⑨ 기타()

III.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평가

7.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상황을 5점 만점(준비가 매우 잘 되어 있다)으로 평가하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상황	①	②	③	④	⑤
	1점	2점	3점	4점	5점

8.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과 시행을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수립:) (시행:)

중앙정부 적응정책	①	②	③	④	⑤
수립	1점	2점	3점	4점	5점
시행	1점	2점	3점	4점	5점

9. 우리나라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과 시행을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수립:) (시행:)

광역지자체 적응정책	①	②	③	④	⑤
수립	1점	2점	3점	4점	5점
시행	1점	2점	3점	4점	5점

10.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과 시행을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수립:) (시행:)

기초지자체 적응정책	①	②	③	④	⑤
수립	1점	2점	3점	4점	5점
시행	1점	2점	3점	4점	5점

11.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성과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제도 정비
- ② 기초지자체까지 적응 세부시행계획 마련
- ③ 적응산업 육성기반 마련
- ④ 기후변화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및 제도 강화
- ⑤ 기타()

12.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문제점 중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기초지자체 수준의 취약성 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 및 통계 부족
- ② 개별 부처·부서의 적응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체계 미흡
- ③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미흡
- ④ 적응대책의 평가·모니터링·보완 체계 등 법제도 기반 미비
- ⑤ 기타()

IV. 기후변화 적응 법제

13. (적응법제 현황)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법·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잘 갖춰져 있다.
- ② 대체로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 ③ 다소 미흡한 편이다.
- ④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 ⑤ 잘 모르겠다.

14. (감축과 적응 법·제도의 비교)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법·제도는 ‘감축’ 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감축에 비하여 매우 잘 갖춰져 있다.
- ② 감축에 비하여 대체로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 ③ 감축에 비하여 다소 미흡한 편이다.
- ④ 감축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 ⑤ 잘 모르겠다.

15. (개선 필요성 및 방식)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법제 개선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법률 제·개정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응 관련 법률의 제·개정은 불필요하다.
- ②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을 개정해 적응 관련 조항을 강화한다.
- ③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서 기후변화 관련 조항을 분리해 ‘완화’와 ‘적응’이 균형을 이루는 가칭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을 제정한다.
- ④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서 적응 관련 조항을 분리해 가칭 『기후변화적응법』 을 제정한다.
- ⑤ 잘 모르겠다.

기후변화 적응 법령안 마련 및 법제화 지원

16. (개선 항목) 기후변화 적응법제 개선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수정되거나 신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순위별로 5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	조문(항)	내용	순위
개요	용어 정의	적응 관련 용어 정의	
	기본원칙	기후변화 적응의 원칙	
	적응 주체의 책임과 역할	국가·지자체·사업자·국민의 권리와 책무	
과학기반	감시·예측	기후변화 감시·예측	
	영향 모니터링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영향·취약성·리스크 평가	기후변화 영향·취약성·리스크 평가	
	적응 정보 수집·관리	기초자료 수집·활용 체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전략 및 계획	위상 및 타 계획과의 관계	적응대책 위상 및 타 계획과의 관계	
	국가 적응대책 수립·시행	국가 적응대책 수립·시행 관련 사항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시행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시행 관련 사항	
	적응대책 이행 실적 점검	국가 및 지자체 적응정책 이행 평가	
적응 모니터링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기후변화 영향 국가보고서의 주기적 발간	
	적응대책 이행 보고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이행실적 보고	
	적응대책 성과 보고서	기후변화 적응 효과 및 성과 점검	
기후변화 적응 확산 및 촉진	적응 주류화	관련 계획·정책수단에 기후변화 적응 고려	
	취약계층·지역 관리	취약계층 및 지역 보호와 지원 방안	
	공공기관 적응	공공기관의 적응보고제도	
	산업계 적응	산업계 리스크 관리 지원	
	적응산업·기술 육성	적응산업 기술 육성·지원, 적응 인증사업	
적응 이행기반	적응위원회	적응 관련 자문, 조정 및 심의 등	
	적응인식 제고	적응 교육·홍보 강화/지역 파트너십 지원	
	적응기금	기후변화 적응정책 재원·예산 확보 및 지원	
	국제협력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설치·운영	

17. (개선항목) 위의 문항에 제시된 내용 외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IV. 개인 정보

소속 기관	① 학계, 연구원 (정부 및 공공기관 소속) ()	② 공기업 ()
	③ 공무원 ()	④ 민간기업 및 민간연구원()
	⑤ NGO ()	⑥ 기타 ()
기후변화 분야 종사 기간	① 1-3년 ()	② 3-5 ()
	③ 5-10 ()	④ 10년 이상 ()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4] 해외 기후변화 적응법 사례 : 멕시코, 필리핀, 미국¹⁴⁾

가. 멕시코

멕시코의 「기후변화일반법」(General Law on Climate Change)은 2012년 6월 6일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10일 발효되었으며, 총 9개의 장과 1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일반 규정

이 법의 목적은 제2조에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 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고,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저감에 있어서 연방정부·주정부·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립
- ②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조를 고려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 및 그 화합물의 농도를 안정화하기 위한 배출 규제의 근거 마련
- ③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행동에 관한 규정 마련
- ④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국민과 생태계의 취약성을 저감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국가 역량을 배양강화
- ⑤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영역에서 교육, 연구, 기술개발 및 이전, 혁신, 전파 활성화
- ⑥ 국민 참여 기반의 구축
- ⑦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Low Carbon Emissions Economy)로의 전환 촉진

제3조에서는 적응, 위험 아틀라스(Risk Atlas), 기후변화, 위원회, 온실가스 화합물, 국가 커뮤니케이션(National Communication), 협의회(Council), 협약(Convention) 등 총 34개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다.

제2장 권한의 배분

제2장에서는 연방정부, 지방정부 및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연방정부는 법 제7조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4) 본 연구와 관련하여 전문가 활용으로 진행된 “국회 기후변화정책연구소, 2016, 해외 기후변화 적응 법제 현황 및 국내 개선방안의 비교분석” 내용을 실음.

- ① 국가 기후변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② 이 법에 의거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수단의 설계, 연계 및 조정
- ③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국가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프로그램의 제안, 개발, 공표 및 적용, 모니터링, 평가
- ④ 국가 위험 아틀라스의 개발, 업데이트, 공표 및 주 정부의 위험 아틀라스 제작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범주 및 가이드라인 제시
- ⑤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 섹터를 아우르는 공청회 개최 절차 확립
- ⑥ 아래와 같은 부문에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행동을 확립, 규제, 적용한다.
 - 가) 자연자원, 육상 및 수생태계, 수자원의 보전, 복원, 보호,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
 - 나) 농업, 목축, 농촌개발, 어업 및 양식
 - 나) 교육
 - 다) 에너지
 - 라) 국가발전계획
 - 마) 식량 자주권 및 안보
 - 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초래되는 질병 예방
 - 사) 시민보호(Civil Protection)
 - 아) 연방 수송 및 통신
 - 자) 지역 및 도시 개발
 - 차) 인구
 - 카) 기타
- ⑦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표준(Criteria)을 환경정책수단과 통합
- ⑧ 기금 조성 및 규제
- ⑨ 배출권거래제의 운영 및 규제
- ⑩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분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과 적용
- ⑪ 모든 교육 단계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 확산을 촉진하며,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의 캠페인 추진
- ⑫ 함께 책임지는 사회참여의 증진
- ⑬ 기후변화정보시스템의 통합, 업데이트 및 접근 보장
- ⑭ 가) 에너지 생산 및 이용, 나) 수송, 다) 농업, 목축, 산림, 기타 토지 이용, 라) 폐기물, 마) 산업 공정, 바) 기타 등의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인벤토리 작성의 방법론과 표준 개발

- ⑮ 등록정보의 규제, 통합, 운영, 공표, 업데이트
- ⑯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의 개발 및 공유
- ⑰ 제도와 부문의 기후변화 완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반과 수단 마련
- ⑱ 생산 부문이 에너지 효율 개선, 배출권거래제 및 국가국제 재정 메커니즘 참여,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경쟁력 유지·증진에 필요한 기반과 수단 마련
- ⑲ 이 법의 적용과 기후변화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효과성 및 성과 지표의 개발
- ⑳ 기후행동과 연계된 경제, 회계, 재정 분야의 시장기반 정책수단의 설계 및 운영
- ㉑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의 적용과 기술적 지원, 복수 주정부의 공동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주정부와의 협력
- ㉒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행동 촉진을 위한 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의 소집
- ㉓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탄화수소(Hydrocarbons)와 전력생산 부문에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개발
- 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취약성을 저감하기 위해 적응 및 완화 분야에 소요되는 예산 작성 및 제안
- ㉕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주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권고사항 제시
- ㉖ 이 법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 ㉗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규제와 멕시코 공식 표준규범(*Normas Oficiales Mexicanas*) 발표
- ㉘ 기타

법 제8조와 제9조는 각각 주(States)와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ies)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권한을 주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반복하는 내용이 많아 이 보고서에서 상세한 기술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3장 국립생태기후변화연구소(INECC)

제3장은 독립적인 연방기관인 국립생태기후변화연구소(INECC: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and Climate Change)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INECC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제15조).

- ① 공공 또는 민간 학술연구기관과 기후변화, 환경보호 및 생태학적 균형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연구 수행
- ② 환경자연자원부가 생태학적 균형 및 환경보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적·학문적 지원 제공

- ③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을 위한 기준, 방법, 기술의 촉진 및 보급
- ④ 멕시코의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 ⑤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보호, 기후변화 관련 전략, 계획, 프로그램, 정책수단 및 행동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조사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비용 및 편익 산출
- ⑥ 국가 전략, 프로그램 등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목적과 행동의 평가
- ⑦ 국가, 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기관들에게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정책과 행동 권고

INECC는 연방정부, 지방정부 및 기타 정부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으로 운영되며, 그 외에 개인이나 국내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기부금과 후원금 등도 운영에 사용된다(제16조). 운영위원회(Governing Board)는 INECC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위원장인 환경자연자원부 장관과 농축수산식품부, 내무부, 사회발전부, 재무부, 에너지부, 보건부 등 관련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각 부처의 차관을 동 위원회의 보결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제17조). INECC의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며(제18조),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제20조).

- ① INECC를 대외적으로 대표
- ② INECC의 조직 관리
- ③ INECC의 자산 관리
- ④ 업무 매뉴얼 작성
- ⑤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 ⑥ 추진 사업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⑦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역할 대표
- ⑧ 기타 INECC 내규에서 정하는 사안 추진

INECC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제22조).

- ① 다음의 주제에 관해 과학기술연구를 추진
 - 가)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 및 경제학
 - 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 다) 멕시코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적응
 - 라) 환경 복원
 - 마) 생태계와 자연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 바) 우선 보호종 및 생태계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
 - 사) 영토의 생태적인 토지이용계획

- 아) 오염의 예방과 통제, 위해물질 및 폐기물, 오염지역의 관리, 생태독성학적 위험의 평가
 - 자) GMO를 포함하여 환경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예상 가능한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
 - 차)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 및 민간 수송시스템에 대한 연구
- ② 생태학적 균형과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 정책의 수립, 적용, 평가에 있어서 환경자연자원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지원
 - ③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과 연계된 경제, 회계, 재정, 시장기반 정책수단의 설계에 참여
 - ④ 자연자원의 이용에 관한 정책수단과 환경, 기후변화, 자연보호 정책의 설계에 기여
 - ⑤ 환경 및 기후변화 연구를 위해 연방정부의 자원을 분배·최적화하고 우선순위 규명
 - ⑥ 유엔에 제출할 국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종합
 - ⑦ 국가 기후변화 전략 및 프로그램 수립 과정에서 범부처기후변화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ssion on Climate Change) 지원
 - ⑧ 인벤토리의 통합, 감시, 업데이트
 - ⑨ 배출량 및 흡수량 산정에 필요한 방법론 개발에 참여
 - ⑩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과 인벤토리 구축 지원
 - ⑪ 타 기관의 자문 내용에 대한 의견 개진
 - ⑫ 국가교육시스템에서 서적, 교과서, 교육자료에 사용할 기후변화 관련 콘텐츠 제안
 - ⑬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과학적·기술적·혁신 관련 역량 강화
 - ⑭ 다른 학술 및 연구 기관들과의 공동 연구 촉진
 - ⑮ 생태적 순생산을 계산하기 위해 경제활동의 결과로 초래되는 오염과 자연자원 고갈의 비용 정량화에 있어서 관련 행정조직 지원
 - ⑯ 국제 공약과의 연계 속에서 환경 상태 평가에 기여
 - ⑰ 자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오염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재정 메커니즘 설계에 참여
 - ⑱ 야생생물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가기술자문회의의 구성과 의사결정에 참여
 - ⑲ 보호지역과 복원지역의 설정 및 재범주화를 위한 연구의 기술적 지원
 - ⑳ 생태적 토지이용계획, 생태계 및 야생생물 보전 등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제공
 - ㉑ 야생생물연구센터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제공
 - ㉒ 국가 혹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과학, 연구, 교육, 훈련을 꾀하는 이니셔티브, 위원회, 컨소시엄에 참여
 - ㉓ 과학자들의 교환 프로그램 증진
 - ㉔ 국가 혹은 국제적인 차원의 학술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협약 증진
 - ㉕ INECC 활동과의 연계 속에서 국가 혹은 국제적인 회의 및 워크숍을 조직, 참여, 참석

- ②⑥ 서적, 정기간행물, 카탈로그, 매뉴얼, 논문, 기술보고서 등의 출간
- ②⑦ 환경 과학정보의 확산에 참여
- ②⑧ 대기오염물질, 위해 폐기물의 측정을 위한 장비 분석 및 보정과 GMOs의 검출 및 확인을 위한 대조 실험실 구축
- ②⑨ 기타

제4장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정책

이 법의 제4장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정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의 기후변화 정책은 제26조에서 나열하는 원칙들을 바탕으로 수립된다.

- ① 생태계와 자연 구성요소의 개발 및 이용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의 원칙
- ② 국가와 사회 간 공동책임의 원칙
- ③ 사전예방의 원칙
- ④ 예방의 원칙
- ⑤ 저탄소 배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생산 및 소비의 채택
- ⑥ 국가 기후변화정책의 추진에서 포괄성과 다부문 고려
- ⑦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한 국가 전략, 계획, 프로그램의 수립, 추진, 모니터링, 평가에서 대중의 참여
- ⑧ 환경 책임의 원칙
- ⑨ 경제적 수단의 이용
- ⑩ 투명성, 정보 및 정의에 대한 접근 보장
- ⑪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
- ⑫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경제 및 국가 경제발전에 대한 공약

국가 기후변화 정책은 크게 적응정책(제4장 제2절)과 완화정책(제4장 제3절)으로 구분된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진단, 계획, 측정, 감시, 보고, 검증 및 평가 등을 통해 추진되는데, 적응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제27조).

- 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사회와 생태계의 취약성 저감
- ② 자연 및 인간시스템의 지구력과 회복력 강화
- ③ 기후변화 위험요소의 최소화
- ④ 취약성 및 적응역량의 규명
- ⑤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메커니즘 확립

⑥ 생태계 및 자연자원의 보존 및 식품 안전성, 농축수산업의 생산성 촉진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대상 분야는 다음과 같다(제28조).

- ① 포괄적인 위험 관리
- ② 수자원
- ③ 농림축산
- ④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특히 연안, 해양, 고산, 반건조, 지역 및 사막지대, 산림자원과 토양)
- ⑤ 에너지, 산업, 서비스
- ⑥ 교통 및 통신기반시설
- ⑦ 생태적 토지이용계획
- ⑧ 건강 및 공중보건 기반시설
- ⑨ 기타

기후변화 완화정책은 이 법에 명시된 정책도구를 이용하여 국가배출에 대해 진단, 계획, 측정, 감시, 보고, 검증 및 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완화정책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을 고려하여 산업별·부문별 배출량 감소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1조).

제5장 국가 기후변화 시스템

국가 기후변화 시스템(SNCC: The National System for Climate Change)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자체의 의사소통과 협력체계에 관한 메커니즘으로서 국가 기후변화 정책의 단·중·장기적 추진을 연계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제38조).

범부처기후변화위원회

이법의 제5장 제2절은 범부처기후변화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ssion on Climate Change)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범부처기후변화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로서, 내무부장관 또는 환경자연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구성원은 환경자연자원부, 농축수산물식품부, 보건부, 통신교통부, 경제부, 관광부, 사회발전부, 내무부, 해양부, 에너지부, 공공교육부, 재정부, 외교부장관 등이다(제45조). 범부처기후변화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제47조).

- ① 기후변화에 관한 부처 간 협력 장려
- ② 국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정책 개발 및 추진

- ③ 기후변화 정책이 광범위하고 다분야에 걸친 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개발
- ④ 국가전략의 승인
- ⑤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에 참여
- ⑥ INEGI와 함께 기후변화정보시스템에 연동되어야 할 정보의 결정에 참여
- ⑦ 기후변화 관련 기술혁신, 연구, 개발, 기술이전 등에 관한 연구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지원하며, 그 결과를 공표
- ⑧ 시장 기반 정책수단의 규제를 위한 대안 제시
- ⑨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사회의 목표와 공약 달성에 필요한 행동 장려
- ⑩ 기후변화 관련 국제 포럼이나 조직에서 국가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제안
- ⑪ 청정개발체제(CDM)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탄소배출저감 또는 탄소포집저장 프로젝트의 추진 및 촉진
- ⑫ 배출량 저감 및 흡수의 감시, 보고, 검증(MRV)을 위한 국가의 역량 강화를 촉진
- ⑬ 연례보고서 발간
- ⑭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 민간부문의 의견 수렴 및 소통의 장 마련
- ⑮ 사회 및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등
- ⑯ 기후변화협약에 정책, 전략, 행동, 목표 등에 관한 조언 요구
- ⑰ 내규 마련 및 시행
- ⑱ 기타 이 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능 등

범부처기후변화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운영한다(제49조).

- ① 기후변화 특별 프로그램 작업반
- ② 적응정책 작업반
- ③ 산림 전용 및 황폐화로 인한 배출량 저감 작업반
- ④ 완화 작업반
- ⑤ 국제기후변화협상 작업반
- ⑥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포집 프로젝트를 위한 멕시코 위원회
- ⑦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작업반

기후변화협의회

제3절은 기후변화협의회(Climate Change Council)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의회는 사회, 민간, 학술 분야를 대표하는 최소 15인으로 구성된다(제51조). 기후변화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제57조).

- ① 범부처기후변화위원회에 조언 제공
- ②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행동, 목표의 연구 및 채택의 실현을 위한 권고
- ③ 공공 컨설팅 등을 통한 시민사회의 참여 장려
- ④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전략, 프로그램, 주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범부처기후변화위원회에의 제안, INECC의 평가 주관 등 이 법이 제공하는 정책, 행동, 목표와 관련한 후속작업

기후변화 정보시스템

국가통계지리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Geography)는 기후변화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제76조). 기후변화 정보시스템에 담겨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77조).

- ① 국가 및 주의 배출량 인벤토리 및 등록부
- ② 등록부 내의 배출 저감 프로젝트
- ③ 국가 영토 내의 대기 상태, 단기 및 장기 기후변화 전망, 기후변동의 특성 등
- ④ 인간 정주성, 사회기반시설, 도서, 연안지역, 하구 델타, 경제활동, 환경영향의 취약성
- ⑤ 평균 해수면 상승
- ⑥ ‘환경을 고려한 국가 순생산’(Environmentally-Adjusted Net Domestic Product)의 산정에 포함될 연간 기후변화 비용의 추정
- ⑦ 토양의 탄소 함량을 포함하는 토양의 질
- ⑧ 생물다양성의 보호, 적응 및 관리

기후변화기금

제80조는 국가보조금뿐만 아니라 민간후원금이나 국제기구의 보조금 등을 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기금에 대해 규정한다. 기후변화기금을 구성하는 자산은 다음과 같다(제81조).

- ① 연방정부예산 및 기타 공공기금의 기여
- ② 특별법에 따른 세금 및 재정 관련 수수료
- ③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
- ④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
- ⑤ 멕시코 내에서 수행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크레딧(CERs) 가치
- ⑥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금 등

기후변화기금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사용하여야 한다(제82조).

- ① 멕시코 내 가장 취약한 지역에 위치한 공동체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기후변화 적응

- ②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동시에 기여하는 사업
- ③ 국가기후변화전략에 의거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업의 개발과 추진
- ④ 저탄소 경제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교육, 인식 증진, 정보 확산 프로그램
- ⑤ 국가 기후변화 시스템이 요구하는 기후변화 분야의 연구 및 평가
- ⑥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연구, 혁신, 기술개발, 기술이전 프로젝트
- ⑦ 청정개발체제 크레딧(CERs)의 구매
- ⑧ 기타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와 행동

제6장 국가 기후변화 정책의 평가

제6장은 기후변화 관련 국가정책의 평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되는데, 동 위원회는 기후변화 정책의 실효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추가 또는 재조정하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제98조).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진다(제101조).

- ① 사회와 생태계의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 ② 자연 및 인간계의 회복력과 내성 강화
- ③ 현재와 미래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위험과 손실의 최소화
- ④ 기후변화 진단, 측정, 계획, 감시에 필요한 수단의 개발 및 효과적인 적용
- ⑤ 생태적·물리적·사회적 시스템의 취약성 및 적응 또는 전환 역량의 규명
- ⑥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는 지역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메커니즘 구축
- ⑦ 식량안보, 농축수산업의 생산성, 생태계 및 자연자원의 보전 촉진

제7장 투명성 및 정보 접근

제7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 투명성과 공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제106조에 따르면 정부 및 기후변화 관련 위원회나 기타 유관 기관은 요청 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당국에 정보를 요청하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및 기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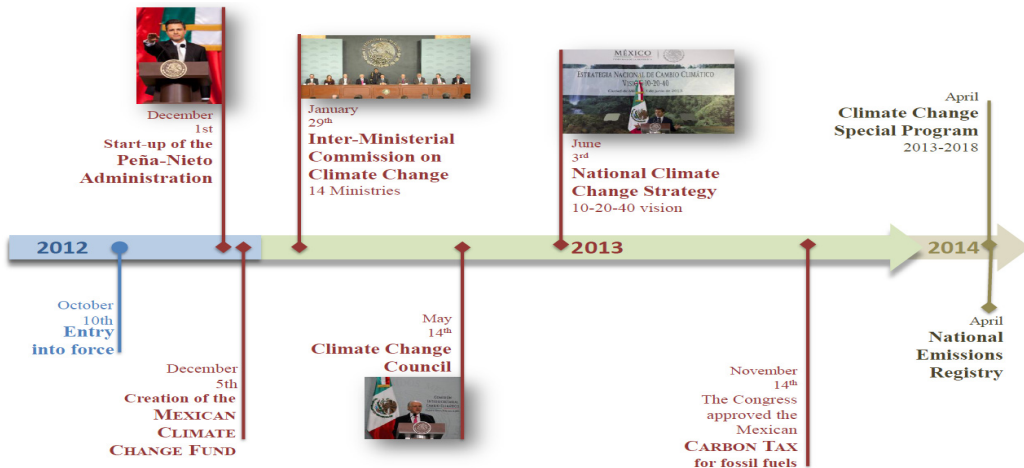
제8장 사회의 참여에 관하여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후변화 정책의 계획, 추진, 감독의 과정에서 사회의 동반자적인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제109조). 이와 관련하여 범부처기후변화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제110조).

- ① 사회 및 민간들이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고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회의를 소집
- ②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행동의 증진과 환경·사회·경제단체들과 협약 체결
- ③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노력에 대한 인식 증진
- ④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대책의 적용을 위한 사회 및 민간부문의 행동과 투자 연계조정

제9장 조사와 감시, 안전 대책 그리고 제재

환경보호를 위한 연방 검사는 배출량 보고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조사와 감시를 수행한다(제111조). 배출량 보고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정보, 데이터, 기록물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환경보호를 위한 연방 검사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제116조). 멕시코의 「기후변화일반법」이 담고 있는 규정과 관련한 주요 일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멕시코의 「기후변화일반법」 제정 이후 주요 일정¹⁵⁾

15) Secretaria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2014) : Mexico 's Climate Change Law and Policies, (https://www.thepmr.org/system/files/documents/Mexico_Climate%20Change%20Law%20and%20Policies.pdf).

나. 필리핀

기후변화 적응 및 재난 위험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 최고의 기후변화법’이라는 평가를 받는 필리핀 기후변화법은 2009년 제정된 「기후변화법 2009」(Climate Change Act of 2009)과 2010년 제정된 「필리핀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법」(Philippin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of 2010)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⁶⁾

(1) 「기후변화법 2009」

「기후변화법 2009」은 총 26개의 조항(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법률의 ‘명칭’을, 제2조는 법률의 ‘목적’을 다룬다. 제3조 ‘용어 정의’에서는 ① 적응, ② 적응역량, ③ 인위적인 원인, ④ 기후변화, ⑤ 기후변동성, ⑥ 기후위험, ⑦ 재난, ⑧ 재난위험 경감, ⑨ 성 주류화, ⑩ 지구온난화, ⑪ 온실효과, ⑫ 온실기체, ⑬ 주류화, ⑭ 완화, ⑮ 완화 잠재력, ⑯ 해수면 상승, ⑰ 취약성을 정의하고 있다.

제4조는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ssion)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대통령실에 편제되며 정부 부처와 같은 위상을 갖는다. 부여된 임무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 프로그램과 행동계획을 조정, 모니터링, 평가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의 판무관(commissioners) 중 1인이 맡는다. 6년 임기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제5조).

- ① 농업부 장관
- ② 에너지부 장관
- ③ 환경자연자원부 장관
- ④ 교육부 장관
- ⑤ 외교부 장관
- ⑥ 보건부 장관

16) CLIMATE HOME의 2012. 5. 5. 기사 <Is the Philippines' climate law the best in the world?> (<http://www.climatechangenews.com/2012/05/05/is-the-philippines-climate-law-the-best-in-the-world/>) 참조. 『기후변화법 2009』의 정식 명칭은 ‘AN ACT MAINSTREAMING CLIMATE CHANGE INTO GOVERNMENT POLICY FORMULATIONS, ESTABLISHING THE FRAMEWORK STRATEGY AND PROGRAM ON CLIMATE CHANGE, CREATING FOR THIS PURPOSE THE CLIMATE CHANGE COMMISSION, AND FOR OTHER PURPOSES’이며, 『필리핀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법』의 정식 명칭은 ‘AN ACT STRENGTHENING THE PHILIPPIN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SYSTEM, PROVIDING FOR THE 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FRAMEWORK AND INSTITUTIONALIZING THE 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PLAN,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이다.

- ⑦ 내무자치부 장관
- ⑧ 국가재난대응위원회의 의장인 국방부 장관
- ⑨ 공공사업 및 고속도로부 장관
- ⑩ 과학기술부 장관
- ⑪ 사회복지발전부 장관
- ⑫ 통상산업부 장관
- ⑬ 교통통신부 장관
- ⑭ 필리핀 지속가능협의회 의장으로서 국가경제발전청장
- ⑮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
- ⑯ 필리핀 여성의 역할에 관한 국가위원회 의장
- ⑰ 광역지자체협의회 의장
- ⑱ 도시협의회 의장
- ⑲ 지방정부협의회 의장
- ⑳ Liga ng mga Barangay의 의장
- ㉑ 학계 대표
- ㉒ 경제계 대표
- ㉓ NGO 대표

위원회는 3개월에 1회 열리며 필요에 따라 대통령이 소집한다(제6조). 제7조는 관무원 3인의 자격, 재임기간, 보상을 다루며, 제8조는 기후변화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기후변화청(Climatic Change Office)을, 제9조는 기후변화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부터 제26조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기술전문가 패널): 기후변화위원회를 위한 기술적인 조언

제11조 (기후변화 기본전략 및 프로그램): 기후변화위원회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

제12조 (기후변화 기본전략 및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① 국가 우선순위
- ② 영향, 취약성, 적응 평가
- ③ 정책 형성
- ④ 국제 공약의 준수
- ⑤ 연구개발
- ⑥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관리
- ⑦ 학술 프로그램, 역량 형성 및 주류화

- ⑧ 애드보커시와 정보 확산
- ⑨ 모니터링과 평가
- ⑩ 성(gender) 주류화

제13조 (국가 기후변화 행동계획): 기후변화위원회가 기후변화 기본전략 및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수립

- ① 국가 기후변화 영향의 평가
- ② 기후변화의 생태계 영향 등을 포함하여 취약계층 및 지역의 규명
- ③ 남성, 여성, 어린이에 대한 기후변화의 상이한 영향 규명
- ④ 위험 및 취약성 관리의 평가
- ⑤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규명
- ⑥ 국가 및 지방정부의 공동사업을 위한 적절한 적응대책의 옵션과 우선순위 규명

제14조 (지방 기후변화 행동계획)

제15조 (정부 부처의 역할)

제16조 (다양한 부문의 연계)

제17조 (기부금과 교부금 수령 권한)

제18조 (기후변화 기금의 배분)

제19조 (상하원 공동감독위원회)

제20조 (연례보고서)

제21조 (기금책정)

제22조 (이행규칙 및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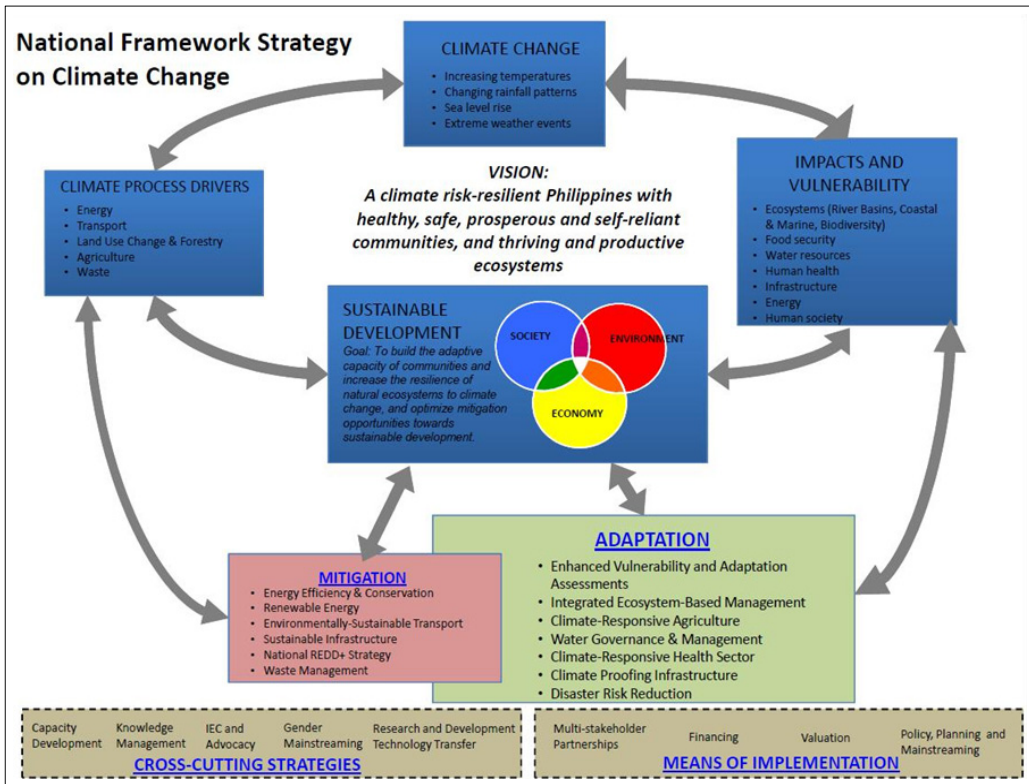
제23조 (임시조항)

제24조 (분리조항)

제25조 (폐지조항)

제26조 (효력)

필리핀의 국가기후변화전략의 비전은 “기후위험으로부터 회복력이 있는 필리핀을 조성”하는 것이다. 목표는 공동체의 적응역량 형성, 자연생태계의 기후변화 회복력 증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감축 기회의 최적화로 요약할 수 있다(그림 3).



[그림 3] 필리핀의 국가 기후변화전략 개요

(2) 「필리핀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법」

「필리핀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법」은 총 30개 조항(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와 2조는 각각 법률의 ‘명칭’과 ‘목적’을 다루고 있다. 제3조 ‘용어 정의’에서는 ① 적응, ② 역량, ③ 시민사회 단체(CSOs), ④ 기후변화, ⑤ 공동체 기반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 ⑥ 복합 응급상황, ⑦ 재난, ⑧ 재난 완화, ⑨ 재난 준비, ⑩ 재난 예방, ⑪ 재난 대응, ⑫ 재난 위험, ⑬ 재난 위험 경감, ⑭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 ⑮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 정보시스템, ⑯ 조기경보시스템, ⑰ 응급상황, ⑱ 응급상황 관리, ⑲ 노출, ⑳ 지리정보시스템, ㉑ 유해(hazards), ㉒ 토지이용 계획, ㉓ 완화, ㉔ 국가 재난경감 및 관리 전략(NDRRMF), ㉕ 국가 재난경감 및 관리 계획(NDRRMP), ㉖㉗ 재난 후 회복(Post-Disaster Recovery), ㉘ 준비 정도(Preparedness), ㉙ 민간부문, ㉚ 공공부문 종사자, ㉛ 재건(Rehabilitation), ㉜ 회복력(Resilience), ㉝ 대응(Response), ㉞ 위험(Risk), ㉟ 위험 평가, ㊱ 위험 관리, ㊲ 위험 이전(Risk Transfer), ㊳ 재난피해 상황(State

of Calamity), ③⁹ 지속가능한 발전, ④⁰ 취약성, ④¹ 취약집단 및 주변화(Marginalized) 집단을 정의한다. 제4조는 법률의 규율 범위를 기술하고 있으며, 제5조는 국가 재난경감 및 관리협의회(NDRRCN: 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Council)의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NDRRCN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① 국방부 장관: 위원장
- ② 내무자치부 장관: 부위원장(재난 준비 분야)
- ③ 사회복지개발부 장관: 부위원장(재난 대응 분야)
- ④ 과학기술부 장관: 부위원장(재난 예방 및 완화 분야)
- ⑤ 국가경제발전청장: 부위원장(재난 재건 및 복구 분야)
- ⑥ 보건복지부 장관
- ⑦ 환경자연자원부 장관
- ⑧ 농업부 장관
- ⑨ 교육부 장관
- ⑩ 에너지부 장관
- ⑪ 재정부 장관
- ⑫ 통상산업부 장관
- ⑬ 교통통신부 장관
- ⑭ 예산관리부 장관
- ⑮ 공공사업 및 고속도로부 장관
- ⑯ 외교부 장관
- ⑰ 사법부 장관
- ⑱ 노동고용부 장관
- ⑲ 관광부 장관
- ⑳ 사무총장
- ㉑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대통령자문실 실장
- ㉒ 고등교육위원회 위원장
- ㉓ 필리핀 방위군 의장
- ㉔ 필리핀 국가경찰 의장
- ㉕ 언론위원회 의장
- ㉖ 필리핀 적십자 사무총장
- ㉗ 국가빈곤퇴치위원회 재난희생자 부문 판무관
- ㉘ 필리핀 여성의 역할에 관한 국가위원회 의장
- ㉙ 주택 및 도시개발 조정협의회 의장

- ③⑩ 기후변화위원회 산하 기후변화청장
- ③⑪ 정부서비스보험시스템 이사장
- ③⑫ 사회안전시스템 이사장
- ③⑬ 필리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③⑭ 필리핀 지방행정연맹 의장
- ③⑮ 광역지자체협의회 의장
- ③⑯ 도시협의회 의장
- ③⑰ 지방정부협의회 의장
- ③⑱ Liga ng mga Barangay의 의장
- ③⑲ 시민사회조직(CSOs) 대표 4인
- ④⑰ 기업 대표 1인
- ④⑱ 민방위청(OCD)의 행정책임자

제6조부터 제30조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6조 (NDRRMC의 권한과 기능)
- 제7조 (NDRRMC 의장의 권한)
- 제8조 (민방위청)
- 제9조 (민방위청의 권한과 기능)
- 제10조 (지역 수준의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 조직)
- 제11조 (지방정부 수준의 조직)
- 제12조 (지방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청)
- 제13조 (자원봉사자, 국가서비스상비팀, CSOs, 민간부문의 승인·동원·보호)
- 제14조 (학교 커리큘럼, 청년위원회 프로그램, 공공부문 종사자 의무 훈련에 재난 위험 경감 교육을 통합)
- 제15조 (응급상황 발생 시 코디네이션)
- 제16조 (재난 사태 선포)
- 제17조 (사후복구대책)
- 제18조 (국제 인도주의적 지원 메커니즘)
- 제19조 (금지된 행동)
- 제20조 (벌칙조항)
- 제21조 (지역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 기금)
- 제22조 (국가 재난 위험 관리 및 복구 기금)
- 제23조 (민방위청의 예산)

- 제24조 (연례보고서)
- 제25조 (실행 규칙 및 규제)
- 제26조 (의회 감독위원회)
- 제27조 (일몰제)
- 제28조 (폐지조항)
- 제29조 (분리조항)
- 제30조 (효력조항)

다. 미국

1) 로드아일랜드주

「로드아일랜드 기후회복법 2014」(The Resilient Rhode Island Act of 2014)은 기후변화 완화, 적응, 회복력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해수면 상승, 보다 강력한 허리케인과 연안 및 육상 침수, 가뭄 일수 증가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주의 경제와 사회를 회복력 있게 만들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법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기후변화에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며 역동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존하는 정부 기관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적응적 관리’(Adaptive Management)를 통해 기후과학의 최신 성과를 반영하여 정책을 조정하고 업데이트한다.
- ② 변화하는 기후 조건을 완충할 수 있는 자연과 경관 요소 등을 보호한다.
- ③ 현존하는 계획에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통합한다. 예상되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건물 코드 기준을 갱신한다.
- ④ 녹색 인프라, 저영향 개발, 경제적 다양화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만든다.
- ⑤ 무주택자, 노인층 등과 같은 취약 인구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도 설계 측면에서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① 기후변화 관련 최신 과학과 로드아일랜드의 적응 및 완화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하는 기후변화과학자문위원회(Climate Change Science Advisory Council)를 설립한다.
- ② 대기 질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관리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Management)를 기후변화 완화 이슈를 다루는 조정 기관으로 지정한다.
- ③ 토지이용계획 수립, 공동체 개발, 주 발전계획과 그 요소의 개발·유지·이용을 담당하는 행정부(Department of Administration)의 계획국(Division of Statewide Planning)을 적응 및 회복력 업무 조정기관으로 지정한다.

- ④ 로드아일랜드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ssion)의 활동을 마감하고 취약성 평가의 통합,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준 설정을 수행하는 기후변화적응위원회(Climate Change Adaptation Committee)를 신설한다.

2) 하와이주

2014년 6월 9일 발효된 「하와이 기후적응법」(Hawaii Climate Adaptation Initiative Act)은 2050년을 대상으로 해수면 상승의 취약성과 적응에 관한 보고서 발간 임무를 갖는 ‘부처 간 기후적응위원회’(Interagency Climate Adaptation Committee)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카운티와 공동체의 대표들이 참여한다. ‘부처 간 기후적응위원회’의 활동은 국토자연자원부(Land and Natural Resources Department)와 하와이주계획청(Office of Planning)의 감독 아래 놓여있다. 또한 「하와이 기후적응법」은 하와이주계획청으로 하여금 기후적응계획과 정책권고를 총괄하고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부처 간 기후적응위원회’의 보고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